

월간
재정포럼

2020. May_Vol.287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5

권두칼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기회와 국가재정의 역할 | 주병기

현안분석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윤성주

특별기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 김유찬

정책토론티포트

2020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Webinar)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기회와 국가재정의 역할 | 주병기 02

현안분석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윤성주 08

특별기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 김유찬 32

정책토론포트

2020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Webinar) 5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대응 CARES Act 제정 외 72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기회와 국가재정의 역할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
센터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이하 대유행)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중대한 질병 피해를 야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말과 내년의 제2차 대유행까지 예고되었다. 1918년 발생해 3년 여에 걸쳐 이어졌던 스페인 독감 대유행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백만 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사망률도 매우 낮아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질병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대책에 집중할 때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과 달리 코로나19는 확산지역의 범위,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초기 감염지역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전면적인 중단에 가까운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은 대형 경제위기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위기를 전망했고, 최근 IMF 총재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수요위기, 공급위기, 금융위기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경제위기와 구별된다. 주요 국가들에서 방역과 격리 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가져오는 충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OECD는 1개월의 격리조치가 연 GDP 성장률을 2% 감소시킨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실제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방역만으로도 4~6%의 성장률 감소가 예상되고, 방역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성장률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도 이런 공급망 위기로 생산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 수요위기와 공급위기는 많은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런 3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이러한 위기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방역만큼이나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질병 확산이 시작된 미국과 유럽 각국의 재난지원은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졌고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도 더 크고 과감했다. 아직도 2차 긴급 재난지원이 진행 중인 우리의 뒤늦은 재정투입은 선제적인 방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국가 재정 여력은 양호하다. 경제위기와의 싸움에서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100년 주기의 위기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재정 여력의 효용이 어디 있겠는가? 앞으로 산업과 금융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대한 숙의도 진행돼야 한다. 지출조정만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은 지금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난 후 논할 일이다.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고 위기 이후에 대비해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
주요 국가들에서 방역과 격리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가져오는 충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OECD는 1개월의 격리조치가 연 GDP 성장률을 2% 감소시킨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개혁의 기회

코로나19 대유행이란 불행은 국가와 전 인류에게 현실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국가적으로는 더

.....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국가적으로는
더 선진적인
국가체제와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선진적인 국가체제와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류는 기후위기, 후진국의 균형발전과 빈곤 및 질병 퇴치, 난민 문제 등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과 세계경제의 “새로운 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경제위기가 사회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했다. 불공정한 국내 시장질서, 이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적 감독기구의 문제 그리고 미비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이 그 원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겪게 될 경제위기는 지난번보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복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의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관계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플랫폼 노동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고용관계 변화에 맞지 않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취약계층의 위험비용을 낮추고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앞당기는 제도적 환경이 될 것이다. 다른 복지제도 역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확충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재난과 경제위기는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과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개혁의 기회다. 위기의 양극화를 막아주는 포용적 국가 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연대는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 생산자들 간의 분업 질서 및 거래 네트워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의생명과학 분야, 반도체 및 정보통신 장비산업, 정보통신 콘텐츠, 온라인 유통·교육·의료 등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투자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지난해 한일 무역갈등에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 주력 산업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유망 산업에 혁신적인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적 감시체계의 강력한 경고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길로의 전환

지금의 불행이 인류에게는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정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는 지구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확대 재생산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계화된 자본주의와 소비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렇게 강제된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향유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고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값비싼 소비보다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책임한 시장의 확대, 지구자원과 에너지의 탕진, 환경착취 등으로 얼룩진 소모적 성장의 세계 자본주의에서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 존중되는 혁신적 수축의 새로운 세계 자본주의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근거리 생산과 소비로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고,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만으로 일과 생활이 가능한 새로운 길, 혁신적 수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길을 찾는다면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KIF**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계화된 자본주의와 소비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렇게 강제된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향유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원고는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f.re.kr)

I. 서론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올해 들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¹⁾ 그 과정에서 많은 감염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공포는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전 세계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성의 자발적·비자발적 제약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면 접촉·외식 서비스업과 여행 관련 산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대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다. 지방정부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코로나19가 늦게 확산된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감염확산 방지와 실업 방지,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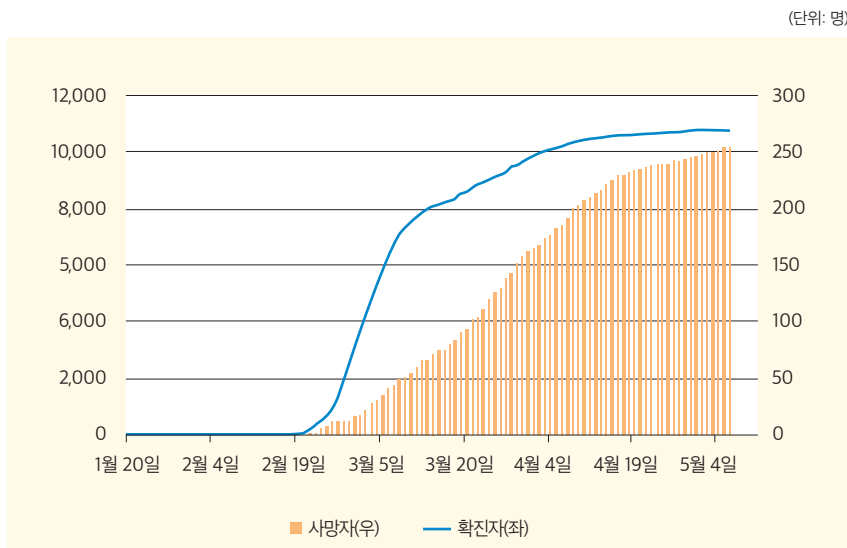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책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 확산사태를 전염병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

II. 코로나19 국내외 현황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5월 6일(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806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 말부터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월 초를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4월에 들어서는 확진자 수 증가폭이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3월 22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연장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²⁾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초 사망자는 2월 20일에 발생했으며, 5월 6일 현재 255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은 2.36%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코로나19 국내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https://www.cdc.go.kr>, 검색일자: 2020. 5. 6.

1월 20일,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1월 27일에는 경보수준을 다시 경계로 격상하였다. 그리고 확진자의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2월 23일 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다시 격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 청도군과 경북 경산시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외식
서비스업과 여행 관련
산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대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 3월 22일~4월 5일; 4월 6일~4월 19일; 4월 20일~5월 5일

중국과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감염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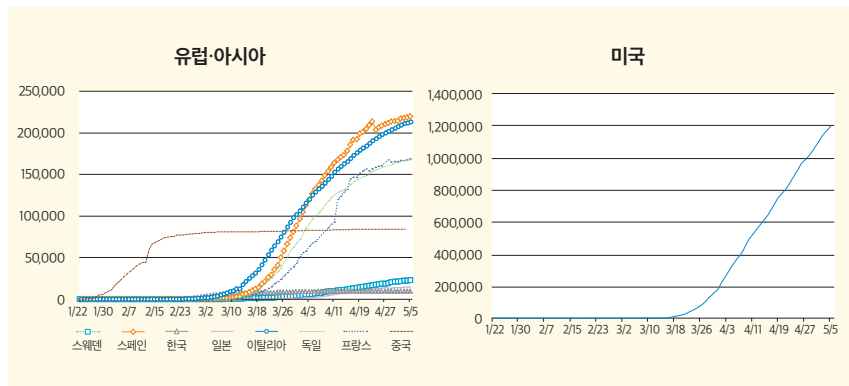
2월 21일과 3월 5일 각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³⁾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⁴⁾으로 선포하였다.

5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3개국에서 369만 1,046명, 사망자 수는 25만 8,335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7.0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겪은 중국과 한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감염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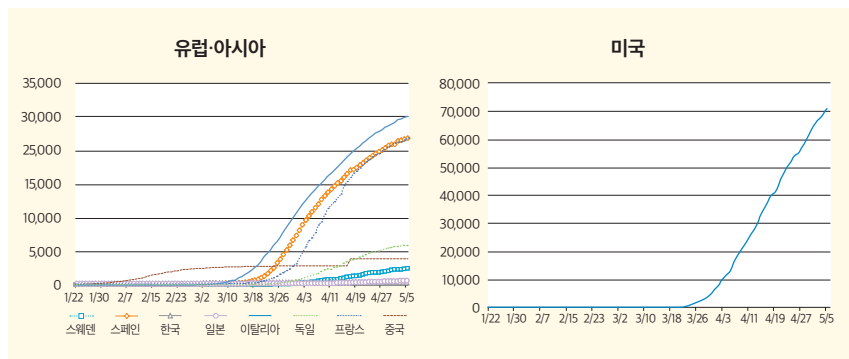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 확진자 수 현황(5월 6일 기준)

(단위: 명)



출처: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0. 5. 6.

[그림 3] 주요국 사망자 수 현황(5월 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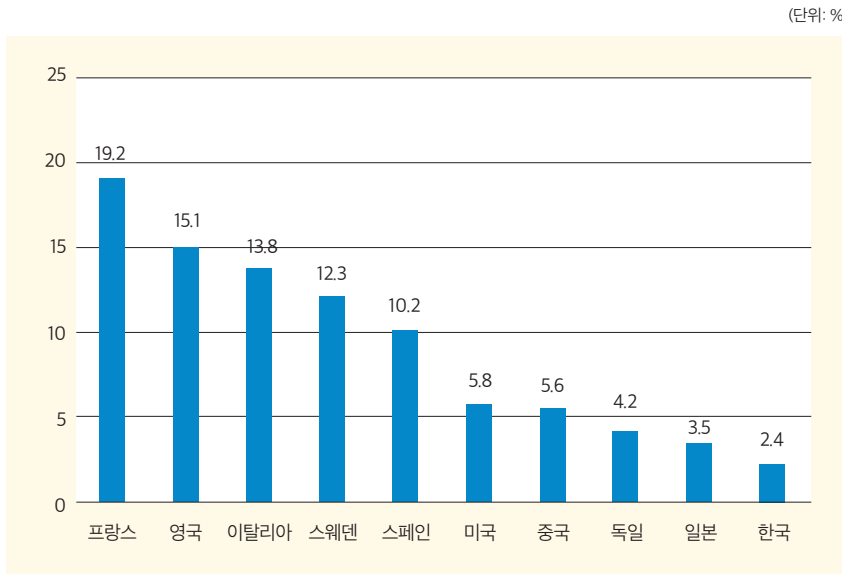


출처: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0. 5. 6.

3) 법적 근거가 부재한 행정상의 관리 명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3항 등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이 가능

[그림 4] 주요국 사망률 현황(5월 6일 기준)



출처: CoronaBoard,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한국))」, <https://coronaboard.kr>, 검색일자: 2020. 5. 6.

OECD는 지난 3월 9일
예정이었던
경기선행지수
발표를 취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Ⅲ.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OECD는 지난 3월 9일 예정이었던 경기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⁵⁾ 발표를 취소하였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6~9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데, OECD는 해당 시점에서 향후 거시경제 및 경기 기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표 취소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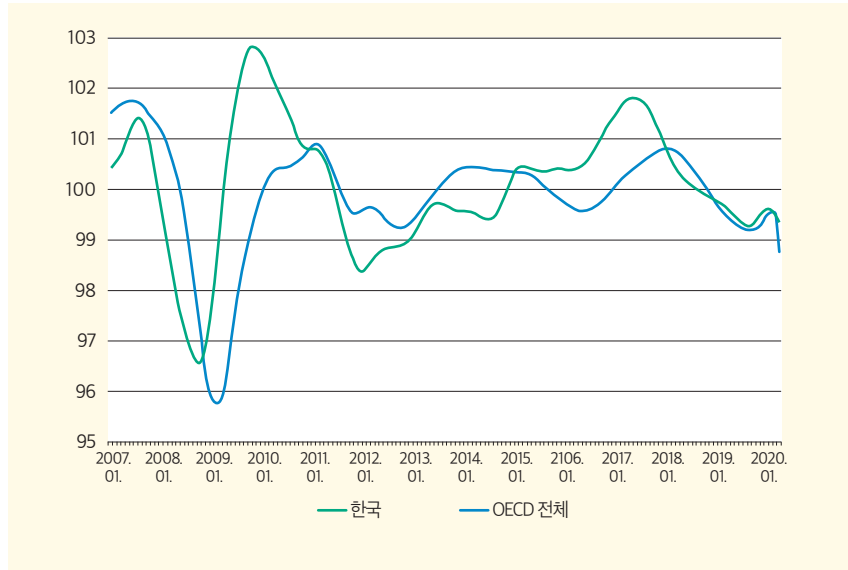
그리고 OECD는 한 달 후인 2020년 3월에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였는데, OECD 회원국들의 경기선행지수가 전 달의 99.6에서 98.8로 0.8%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락폭은 역대 가장 큰 수치로 OECD는 경기선행지수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상황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⁶⁾

5) 100 이상은 경기 확장, 100 이하는 경기 하강을 의미

6) The magnitude of the CLI declines should be viewed as an indica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 that economies have entered a phase of contraction. For comparison, the signal is stronger now than it was at the time of the Financial Crisis (<http://www.oecd.org/newsroom/composite-leading-indicators-cli-oecd-april-2020.htm>)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수준
또한 이미 중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수준은 과거
그 어떠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 OECD 경기선행지수



출처: OECD (2020), Composite Leading Indicator (CLI) (indicator). doi: 10.1787/4a174487-en <https://data.oecd.org/leadind/composite-leading-indicator-cli.htm>, 검색일자: 2020. 5. 7.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인 2020년 1~2월에만 해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중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2003년 SARS의 영향과 비교되곤 했다. 즉, 세계경제가 과거 SARS가 발생한 2003년과 비교할 때 국가 간 상호연결이 심화되었고, 그 가운데 생산, 교역, 관광,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외부전이 (spill-over)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OECD, 2020. 3).

그러나 과거 주요 전염병들과 비교할 때, 코로나19는 감염률이 더 높고, 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특히, 3월 들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수준 또한 이미 중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수준은 과거 그 어떠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주요 감염병

구분	SARS	H1N1(신종플루)	MERS	COVID-19
확진자	8,098명 (3)	미발표 (2,417)	2,494명 (186)	3,691,046명 (10,806)
사망자	774명 (0)	51,700~575,400명 (260)	858명 (38)	258,335명 (255)
사망률	9.56% (0)	미발표 (10.8)	34.40% (20.4)	7.00% (2.36)
감염국가	26개국	214개국 이상	27개국	213개국
기간	2003. 4. ~2003. 7.	2009. 5. ~2010. 3.	2015. 5. ~2015. 12.	2019. 12. ~진행 중

주: 1. 코로나19는 2020년 5월 6일 현재, () 안은 한국 수치

2.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통계는 국외의 경우 WHO에서 2009년 7월 16일부터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사망자 수만 발표; 국내의 경우 2009년 8월 21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수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2009 질병관리백서)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도자료, WHO,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관리센터, 메르스 백서

2020년 3월 2일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2020년 1분기 이후 진정되고 향후 수개월 내 생산 및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상당 수준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0.5%p 감소한 2.4% 수준으로 수정·전망하였다. 그리고 예상(baseline)과 달리 아태 지역, 유럽, 북미 등으로 확산·장기화될 경우(domino scenario)에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5%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IMF 보고서에서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최근 4월에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6.3%p 감소한 -3.0%로 수정·전망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에서 기존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7.9~9.6%p 하향 조정되었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5.9%p, 4.8%p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기존 2.2%에서 3.4%p 감소한 수준인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급격한 전망치 조정은 향후 세계경제 및 각국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우에는 감염 확산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2020년 1분기 이후
진정되고 향후 수개월 내
생산 및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상당 수준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와 시차를 두고
감염이 확산된
해외 국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견·대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표 2>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분	2020. 1. (a)	2020. 4. (b)	(b)-(a)
World Output	3.3	-3.0	-6.3
Advanced Economics	1.6	-6.1	-7.7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cs	4.4	-1.0	-5.4
Euro Area	1.3	-7.5	-8.8
United States	2.0	-5.9	-7.9
Germany	1.1	-7.0	-8.1
France	1.3	-7.2	-8.5
Italy	0.5	-9.1	-9.6
Spain	1.6	-8.0	-9.6
Japan	0.7	-5.2	-5.9
United Kingdom	1.4	-6.5	-7.9
China	6.0	1.2	-4.8
Korea	2.2	-1.2	-3.4

출처: (a)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 1.

(b)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 4.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관광·운송업과 대면 접촉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와 시차를 두고 감염이 확산된 해외 국가들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0. 4.)에 따르면 2020년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월보다 4만 9천명(45.8%) 증가한 15만 6천명이며,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3만 1천명(24.8%)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8,982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월 대비 1,163억원(14.9%), 전년 동월 대비 2,585억원(40.4%) 증가한 수준이다.

<표 3> 구직급여 현황

(단위: 천명,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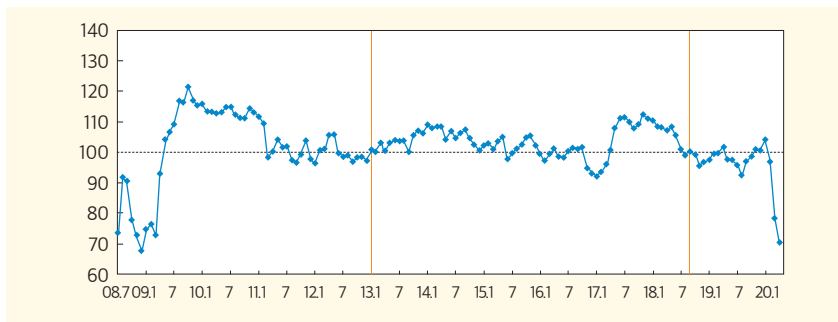
구분	2018. 3.	2019. 3.	2019. 11.	2019. 12.	2020. 1.	2020. 2.	2020. 3.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15	125	86	96	174	107	156
구직급여 수혜자	456	506	412	419	499	536	608
지급건수	495	535	441	449	575	578	675
구직급여 수혜금액	5,195	6,397	5,932	6,038	7,336	7,819	8,982

주: 2020년 3월 자료는 잠정치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14.)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다.⁷⁾ 그리고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투자는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생산과 소비는 각각 숙박·음식점·운수·창고 등의 서비스업과 화장품·의복 등 비내구재·준내구재 부분에서의 큰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⁸⁾가 3월 중 78.4로 전월 대비 18.5p 급락하였는데,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월 대비 하락폭은 2008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또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소비자심리지수가 전 월보다 7.6p 감소한 70.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1. 2003~2019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2. 세로 실선은 표본개편 시점(2013년 1월, 2018년 9월)을 의미
출처: 한국은행(2020. 4. 28.)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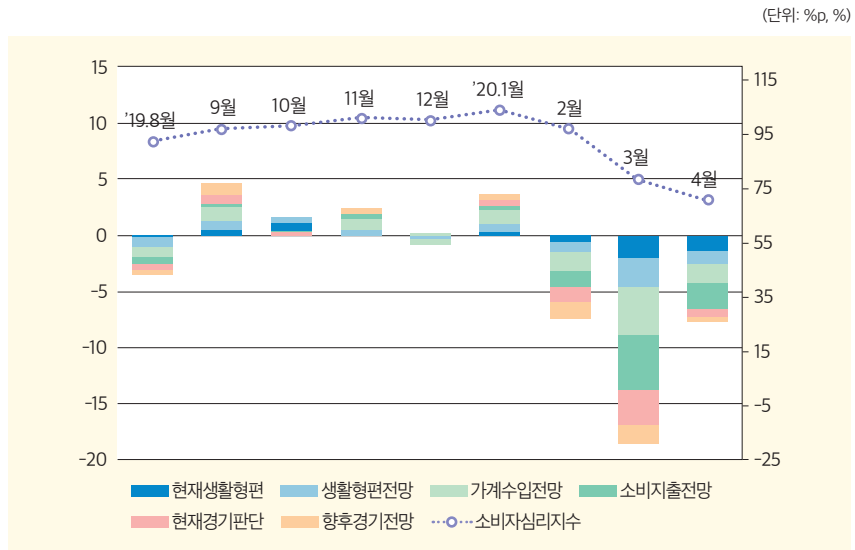
7) 전월 대비 생산 3.5%, 소비 6.0%, 설비투자 4.8%, 건설기성 3.4% 감소

8)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이며,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국은행, 2020. 4. 28.)

우리나라는 2020년 제2회 추경이 확정된 시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3월과 4월의 하락 요인 가운데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 7]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좌) 6개 주요지수 기여도(%p), (우) 소비자심리지수(%)
출처: 한국은행(2020. 4. 2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IV. 국내외 정책대응 동향

각 국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여러 정책들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2020. 4. 3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제 2회 추경이 확정된 시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⁹⁾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월 5~17일에 걸쳐, 약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경제 및 수출기업 정책, 분야별·업종별 지원정책(자동차 부품,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을 발표하였으며, 2월 28일 발표된 민생·경제 종합대응에서는 국내 감염병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약 16조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

9) 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기간산업 안정자금(40조원), 추가보강 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 패키지 등 41조원)

하였다.¹⁰⁾

두 차례에 걸친 20조원 규모의 정부지원(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고 사회·경제에 미칠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3월 17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7조원 수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¹¹⁾

그리고 제1·2차 비상경제회의(3. 19.; 3. 24.)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3. 19.)에서 발표했던 50조원+a의 규모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3. 24.)에서 100조원+a 규모로 확대되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3. 30.)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4인 이상 가족)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9.1조원 소요예상, 중앙과 지방이 8:2 비율로 분담)이 발표되었으며,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등이 논의되었다.¹²⁾ 그리고 제4차 비상경제회의(4. 8.)에서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수출 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4. 22.)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35조원 보강된 135조원+a 규모로 확대되었으며,¹³⁾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등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기업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 30일에는 2020년 제2회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4월 16일에 제출된 추경안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3조원의 규모로 결정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12.2조원과 지방비 2.1조원으로 조달된다.¹⁴⁾ 그리고 국비 가운데 8.8조원은 금년도 예산 감액·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고 사회·경제에 미칠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3월 17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7조원 수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0) 여기서는 조세·재정 정책과 함께 한국은행과 공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등과의 정책공조·협업의 내용을 포함
 11)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규모가 2.4조원 증가하였고, 세입경정 부분이 -3.2조원에서 -0.8조원으로 수정되어, 총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비 43억원 감소한 11.7조원으로 확정
 12)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 보험료 4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의 내용이 포함됨
 13) 제1차 비상경제회의(3. 19.) 50조원+a → 제2차 비상경제회의(3. 24.) 100조원+a → 제5차 비상경제회의(4. 22.) 135조원+a 규모 확대
 14) 4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비 7.6조원과 지방 2.1조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국비는 전액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작성됨

4월 30일에는 2020년 제2회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4월 16일에 제출된 추경안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표 4>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대책

대책	규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업종별 지원정책 등 (2월 5~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0.3, 금융 4.0 - 기정예산, 예비비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자체 예비비 등, 공항사용료 감면 등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저비용 항공사 대상 운영자금용자, 매출채권 인수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경제 종합대응 (2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2.8, 세제 1.7, 금융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조원 (공공·금융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지역신보 재원 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제1회 추경 (3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확대 10.9조원, 세입 경정 △0.8조원 - 국채발행(10.3조원) 및 한은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조원+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보강대책 (3월 30일; 4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조원(긴급재난지원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료 감면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중소·중견기업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및 고용·기업 안정 대책 (4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조원+35조원+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제2회 추경(4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3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안(4. 16.)에서 증액된 4.6조원은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 1.2조원과 국채 발행 3.4조원으로 조달

출처: 정부 발표자료들(기획재정부, www.moef.go.kr)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3월 초 전주시를 시작으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계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생활지원금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해외 국가들 또한 감염의 진행 상황 및 직·간접적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해외 국가들 또한 감염의 진행 상황 및 직·간접적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 해외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구분	재정 대응	금융 대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베이트 직접 지급 2,900억달러, 실업수당 확대 2,600억달러 · 저소득 중산층 중심 대다수 국민에게 현금 지원 · 모든 실업수당 대상자에게 급여액 지급기간 확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2,300억달러, 세제 지원 3천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등 사채매입 지원 4,540억달러 - 중소기업 대출 탕감 3,660억달러 - 항공·안보 필수 기업 대출 460억달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등에 대한 비관료주의적 긴급재정 지원(500억유로) - 개인사업자에 한해 기초생계보장에 30억유로 규모의 기초보장금 지원, 소득이 감소된 가정을 위한 소득보전 - 자영업에 대한 실업급여·인건비 지원(77억유로) - 향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지원(550억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정화기금(6천억유로) · 2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 위험한 인프라 구조와 섹터의 영역에 놓여 있는 소기업 에도 적용 가능 - 독일재건은행 대출보증 프로그램(최대 8,220억유로) -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 및 운영비를 1~2%대의 금리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 확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 약 개발: 2.5조엔 - 고용 유지와 사업 계속: 22조엔 ·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대한 신형 급부금(4만 206억엔),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 자금용통 대책(3만 8,324억엔) 및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신형 급부금(2만 3,176억엔)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확대(690억엔) -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10.2조엔 · 서플라이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2,200억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티 넷 대출·보증(6,060억엔)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5,430억엔) -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에 의한 대기업, 중견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2,040억엔) - 국제 협력 은행의 서플라이체인 확보 등에 대한 금융 지원(2,500억엔) 등

미국의 경우
2.2조달러 규모의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개인소득보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표 5>의 계속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국민 지원 £70억 (예산안) · 취약계층 지원기금, 중소기업 병가수당 보전 등 - 소기업 사업체 및 소매·접객업체 보조금, 사업용 재산세 감면 등 기업 지원 대책 £200억 - 복지급여 상향 조정 등 £70억 - 고용 유지 지원금(총규모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의 80%(1인당 최대 £2,500/월) 지원 - 자영업자 소득 지원금(총규모 미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수익 평균의 80%(최대 £2,500/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출·보증 지원 £3,300억 · BOE의 CP 매입(CCF) · 사업중단 대출 한도 확대 및 일정 기간 이자비용 정부 부담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연기에 총 320억유로 - 무급휴직자의 소득 보전에 85억유로 투입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 등에 20억유로 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단기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대출 보증 3천억유로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소득의 보호를 위해 고용과 근로자에 대한 실업 대책 및 고용에 대한 지원(103억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장기 육아휴직 혹은 육아 돌봄 수당 지급(12주 급여의 50%, 혹은 최대 600유로) · 자영업자 긴급 재난 수당 지급(600유로의 1회성 재난 수당) -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및 의무 보험료 등의 납세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16억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시스템 및 중앙 보증 기금 사용을 통한 가계 및 기업 지원(51억유로, 최대 3,500억 유로의 유동성 지원) · 모기지 및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유동성 2,200억 유로 증가) · 중소기업 보증 기금의 강화(기금 규모를 현재 400억유로에서 1천 억유로 이상으로 150% 이상 확대)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2020. 4. 14.)

미국의 경우 2.2조달러 규모의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CARES Acts)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개인소득보조금(2020 Recovery Rebate)은 저소득·중산층에 방점을 두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보유한 성인 및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2019년 또는 2018년 세금보고자료에 근거하여 2020년 지원금(tax credit)을 산정하고, 2021년 초에 2020년 세금보고서에 근거하여 정산(advancing a tax credit)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9년 또는 2018년 세금

보고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간단한 형태의 신고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이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연금자료를 이용하여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지급금액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7만 5천달러 이하인 개인과 15만달러 이하인 부부, 그리고 11만 2,500달러 이하인 홀벌이 가구주에 대해 1인당 1,200달러, 부부의 경우 2,400달러, 그리고 16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정소득 1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5%씩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위 고소득층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2020. 3. 23.)에 따르면, 전체 지급액의 약 68%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지급되고, 상위 20%에는 약 11%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기존의 복지정책과 실업구제수단을 확대·운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생략하여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Soforthilfen)할 계획이다. 예컨대 3개월 사업비용을 일시불로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기반으로 신청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필요 금액을 작성하면,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¹⁵⁾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금융 지원 외에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기초보장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생계비와 임대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산관계는 고려하지 않지만,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요성 심사는 6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통상적인 시기에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임대계약은 해지되지 않으며, 기초공급계약(전기, 가스, 전화, 민법상 규정된 수도공급)에 대해서도 사용료 지불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급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 기업에서 1/3 이상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및 10% 이상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60%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 최대 6개월까지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G)를 운용하였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였다.

독일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기존의 복지정책과 실업구제수단을 확대·운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방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유전문직 등에 대해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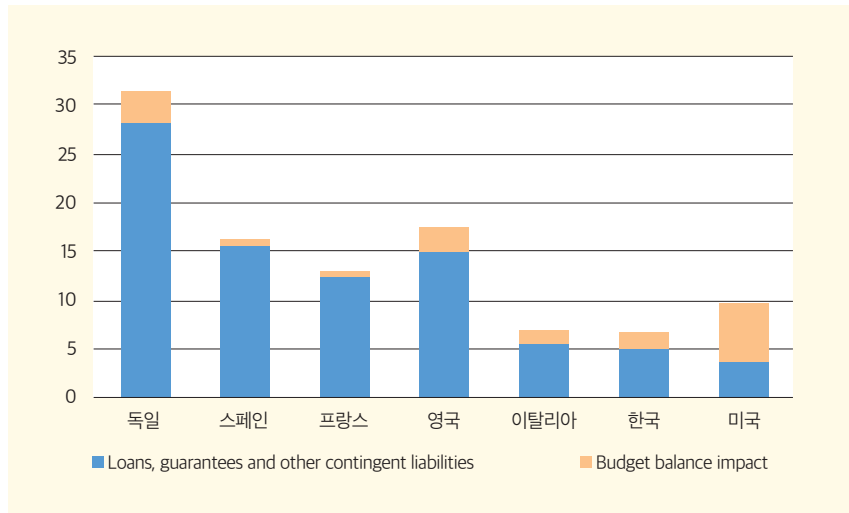
15) 단, 필요시 연방 및 주 감사원에서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감사 진행

각 국가는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및 직·간접적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소득 지원, 고용유지, 기업지원 등의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각 국가는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및 직·간접적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소득 지원, 고용유지, 기업지원 등의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 지원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중산층에 방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실업급여(수당), 휴직급여 등 기존 실업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책의 초점을 고용 유지에 두고 있으며,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보증 지원이 다수이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생계비, 임대료 등 기초보장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미국, 독일, 영국의 재정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은 향후 감염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정도 및 회복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8]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금융정책 현황

(단위: GDP 대비 %)



주: 2020년 3월 31일 기준 추정치
출처: OECD (2020), p. 14.

V. 정책적 시사점

1. 실물부문의 위기

코로나19의 감염 및 사회·경제적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에서의 감염 확산은 많이 안정화되었지만 재확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시차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확산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시기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위기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사한 면이 많다. 즉, 한국만의 대응으로 이번 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침체 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사태 이후의 경기부양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세계 금융위기가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였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번과 같은 실물부문에서의 위기 경우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측면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게 될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및 피해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 시점인 2월 초부터 방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감염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흑자도산 방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추경, 고용·기업 안정대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

코로나19 사태는
실물부문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정부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응과정의 몇몇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부족,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 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단, 대응 과정의 몇몇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부족,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 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대상이 유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정보에 밝은 지방정부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0년 제2회 추경 재원을 지방정부가 일부 분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 전에 사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에 재검토·보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크다. 현재의 상황이 특수한 위기상황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추경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야당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에 참여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수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이 더 빨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2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보다 긴급한 성격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사전적 협의 과정이 부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3. 향후 정책 대응에서 고려할 사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모든 대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감

소시키고, 일용직·특수직업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경우 저소득층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많은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 등에 대한 의문이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도 해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은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고용 유지는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정책 도입·운용과 함께 기존 제도들의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정도가 완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SOC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큰 재정이 소요되는 SOC 사업의 경우, 효과적·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상·하수도 사업,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즉, 2019년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같은 노후 SOC에 대한 보수 투자를 통해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또한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염병 관련 공공투자 또한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한 형태로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일본의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국가채무 수준만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효과적·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경우 저소득층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재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후 다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4.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재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후 다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변이·변종 및 사회적 환경, 즉 환경 파괴, 대규모 가축사육, 인구 밀집도 증가, 인적·물적 교류 증대 등을 통해 그 전염·전파의 속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다.

2007~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25.9%에서 35.2%로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총지출 대비 보건분야 비중은 2.2%에서 2.6%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6> 보건분야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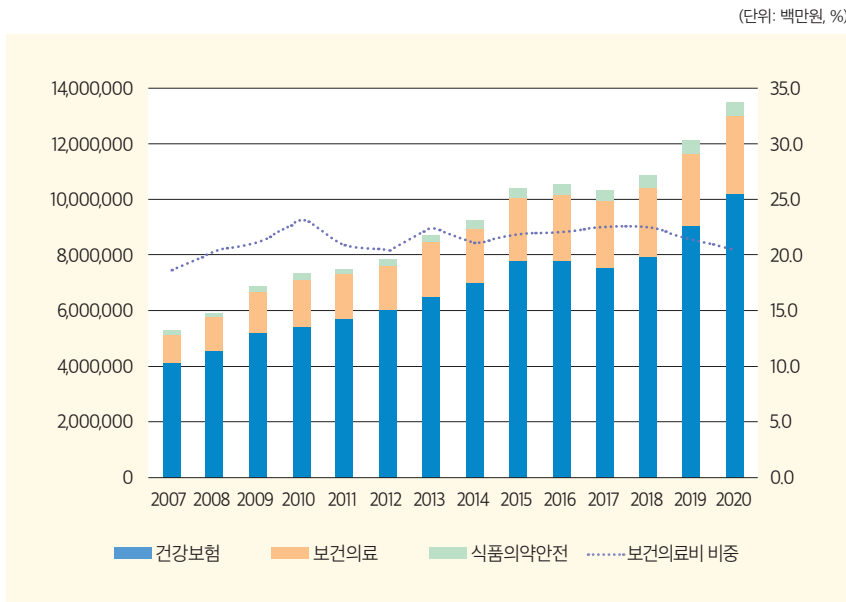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지출	237,014,068	257,165,691	284,533,906	292,815,861	309,056,693	325,407,632	341,967,726
사회복지·보건분야	61,388,922	67,647,731	74,699,577	81,246,385	86,392,585	92,630,482	97,402,926
사회분야	56,099,788	61,705,592	67,826,570	73,916,037	78,892,615	84,771,538	88,673,644
보건분야	5,289,135	5,942,139	6,873,007	7,330,349	7,499,970	7,858,944	8,729,282
사회복지/총지출	25.9	26.3	26.3	27.7	28.0	28.5	28.5
사회분야/총지출	23.7	24.0	23.8	25.2	25.5	26.1	25.9
보건분야/총지출	2.2	2.3	2.4	2.5	2.4	2.4	2.6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지출	355,805,119	375,403,278	386,399,599	400,545,946	428,833,913	469,575,177	512,250,448
사회복지·보건분야	106,425,405	115,682,369	123,398,077	129,483,008	144,658,799	160,997,249	180,542,964
사회분야	97,205,134	105,281,476	112,864,205	119,127,221	133,801,407	148,876,922	167,021,109
보건분야	9,220,271	10,400,893	10,533,872	10,355,787	10,857,392	12,120,327	13,521,855
사회복지/총지출	29.9	30.8	31.9	32.3	33.7	34.3	35.2
사회분야/총지출	27.3	28.0	29.2	29.7	31.2	31.7	32.6
보건분야/총지출	2.6	2.8	2.7	2.6	2.5	2.6	2.6

출처: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보건분야에서 건강보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크며,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보건분야 부문별 예산 추이



출처: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 관리프로그램의 예산이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0% 증가하여 주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에서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¹⁶⁾을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14.0%에서 10.1%로 감소하고,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그리고 2007년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의 17.3% 수준이었던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의 비중이 2020년에는 47.8%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예산 가운데, 전염병 방지기능에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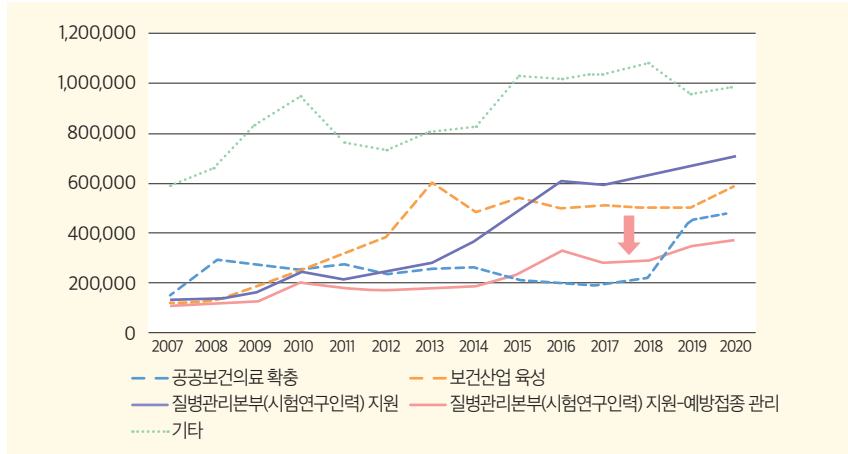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예산이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4.0% 증가하였다.

16)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50만원 상당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 등을 포함

2007년에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의 17.3% 수준이었던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의 비중이 2020년에는 47.8%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보건의료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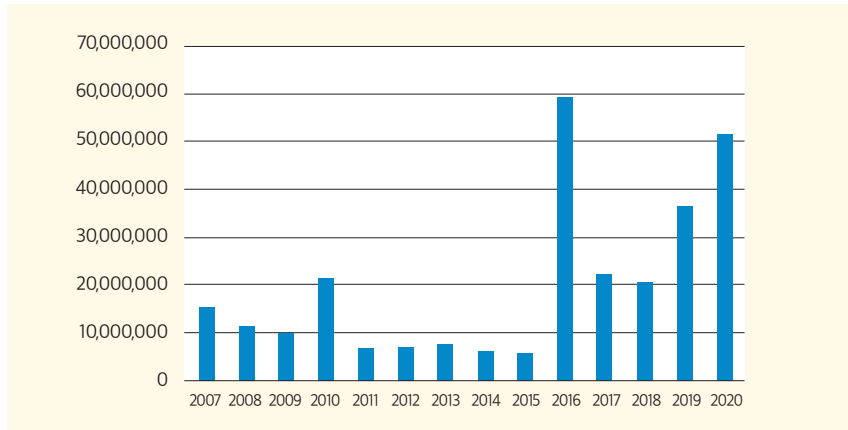


출처: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2009년 5월부터 발생한 H1N1(신종플루)과 2015년 5월부터 발생한 MERS로 인해 2010년과 2016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림 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신종 전염병·감염병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주: 보건의료 부문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에서 신종 전염병과 신종 감염병이 언급된 사업들의 합계
출처: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따라서 현재 전염병 관련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전염병 및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및 감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보도자료, 2020. 2. 7.

_____,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I)-애로피해 실태기반 맞춤형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 2. 12.

_____,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 2. 17.

_____,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 2. 17.

_____,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 2. 19.

_____,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보도자료, 2020. 2. 28.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3. 17.

_____, 「제1~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20. 3. 19~4. 22.

_____, 「그간의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 및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0. 4. 9.

_____,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4. 30.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3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2020. 4. 14.

보건복지부, 「국내 최초 사스 추정환자 발생」, 보도자료, 2003. 4. 29.

_____, 「'03년 전반기 사스 방역 상황 종료」, 보도자료, 2003. 7. 7.

_____, 「국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 환자 발생」, 보도자료, 2009. 4. 28.

_____,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보도자료, 2010. 3. 31.

_____,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확인」, 보도자료, 2015. 5. 20.

_____, 「메르스, WHO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 보도자료, 2015. 12. 23.

- _____, 『2015 메르스 백서』, 2016. 7.
- 질병관리본부, 『2009 질병관리백서』, 2010. 9.
- 통계청,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2020. 3. 31.
- _____,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2020. 4. 29.
- 한국은행,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3. 27.
- _____,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4. 2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4. 14.
- OECD,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20. 3. 2.
- _____,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202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 1.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20. 4.
- Tax Policy Center, “Direct Payments In Coronavirus stimulus Bill Are Well Targeted to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2020. 3. 23.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최종검색일자: 2020. 4. 30.
- 미국 질병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cdc.gov/flu/pandemicresources/2009-h1n1-pandemic.html>, 검색일자: 2020. 3. 31.
-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0. 3. 23.
- 존스홉킨스 대학 코로나 현황 통계,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검색일자: 2020. 5. 8.
-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 검색일자: 2020. 5. 6.
- CoronaBoard,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검색일자: 2020. 5. 6.
- OECD CLI 뉴스, 2020. 4. 8. <http://www.oecd.org/newsroom/composite-leading-indicators-cli-oecd-april-2020.htm>, 검색일자: 2020. 4. 20.
-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CLI), <https://data.oecd.org/leadind/composite-leading-indicator-cli.htm>, 검색일자: 2020. 4. 29.
- WHO 홈페이지, https://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4_04_21/en, 검색일자: 2020. 3. 30.

특별
기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김유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필자는 통계자료 작성과 외국제도 조사에 도움을 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팀장, 재정지출분석센터 윤성주 박사와 송경호 박사 외 직원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본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편집자 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I. 서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월과 4월 2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 및 장기 재정건전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국가채무 수준의 비교와 재정 여력에 대해 검토하고,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제IV장

에서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제V장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앞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차 추경과 2021년 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II.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재정 여력

1. 국가채무 수준 국제비교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8년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GDP 대비 40.1%로 OECD 평균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국외채권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12.5%로 OECD 평균 37.3% 대비 낮은 편

으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현재 관련 통계를 공시하는 OECD 회원국이 7개국(우리나라 포함)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주요국 대비 10%p 정도 높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보유자산이 부채보다 높다.

민간부문 부채의 경우 기업(비금융)과 가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기업부채의 경우 2018년 GDP 대비 95.7%로 OECD 평균 97.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경우 2018년 GDP 대비 91.9%로 OECD 평균 61.3% 대비 상당히 높아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국가채무와 국가신용등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비율의 각 구간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상호관계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이 국가채무비율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투자등급의 비율은 국가채무비율 100% 이상 구간에서 50%, 75~100% 구간에서 28%, 50~75% 구간에서는 27%로 점차 낮아지다가 0~50% 구간에서는 59%로 상승한다. Prime/High grade 등급의 비율은 0~50% 구간에서 가장 높고 50~75% 구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신용등급의 관계는 특정하기 어렵다.

<표 1> 정부 및 민간부문 부채 및 자산현황(한국 및 OECD 평균)

(단위: GDP 대비 %)

구 분	한국			OECD 평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일반정부						
(1) 일반정부 부채 ¹⁾	41.2	40.1	40.1	112.6	110.3	109.2
(국의채권자 비중, %)	(10.2%)	(10.7%)	(12.5%)	(38.0%)	(37.6%)	(37.3%)
(2) 일반정부 자산 ²⁾	191.6	189.8	190.3	119.1	120.4	120.2
2. 비금융공기업						
(1) 비금융공기업부채 ³⁾	23.5	21.9	20.5	10.6	9.9	9.7
(2) 비금융공기업자산 ⁴⁾	39.8	38.2	37.7			
3. 민간부문						
(1) 민간부문 부채 ⁵⁾ (2) + (3)	181.8	182.1	187.6	163.8	160.8	158.6
(2) 기업부채(비금융)	94.5	92.7	95.7	102.5	99.2	97.3
(3) 가계부채	87.3	89.4	91.9	61.3	61.7	61.3

주: 1) 일반정부 부채는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D2, OECD는 Economic Outlook No. 106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 검색일자: 2020. 5. 11.)
 2) 일반정부 자산은 IMF GFS(<https://data.imf.org/?sk=a0867067-d23c-4ebc-ad23-d3b015045405>, 검색일자: 2020. 5. 11.) 자료 기준
 3)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0. 5. 11.) 자료 기준
 4) 비금융공기업 자산은 기관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저자 편집
 5) 민간부문 부채는 IMF의 Global Debt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GDD>, 검색일자: 2020. 5. 11.) 자료 기준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부 자료(2020. 5. 11.)

<표 2> 국가채무비율 구간별 국가신용등급의 분포

구분		국가채무비율			
		100% 이상	75~100%	50~75%	0~50%
Prime	Aaa	1	1	-	9
High grade	Aa1	-	-	1	1
	Aa2	-	2	-	2
	Aa3	-	1	-	3
Upper medium grade	A1	1	-	1	3
	A2	-	-	1	5
	A3	-	-	1	3
Lower medium grade	Baa1	-	1	1	2
	Baa2	-	-	1	4
	Baa3	2	-	2	3
Non-investment grade	Ba1	-	-	2	3
	Ba2	1	1	2	2
	Ba3	-	1	4	2
Highly speculative	B1	1	1	2	3
	B2	-	4	3	6
	B3	-	2	7	6
Substantial risks	Caa1	1	1	2	1
	Caa2	-	1	-	-
	Caa3	-	-	-	1
Extremely speculative	Ca	1	2	-	-
In default	C	-	-	-	-
Not rated	WR	-	-	-	-
소계 ¹⁾	-	8	18	30	59
투자등급 비율	-	50%	28%	27%	59%
Prime/High grade 비율	-	12.5%	22.2%	3.3%	25.4%

주: 1) Moody's의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없는 국가들은 제외

출처: 국제금융센터, 『세계대륙별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 2020. 4. 30.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CG_DEBT_GDP@GDD/SWE, 검색일자: 2020.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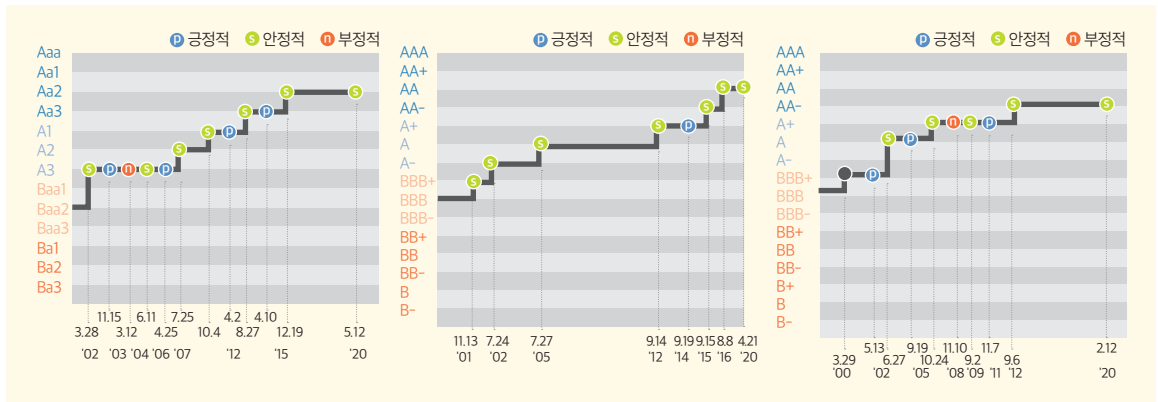
신흥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높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질 확률이 크나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질 위험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나, 국가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3.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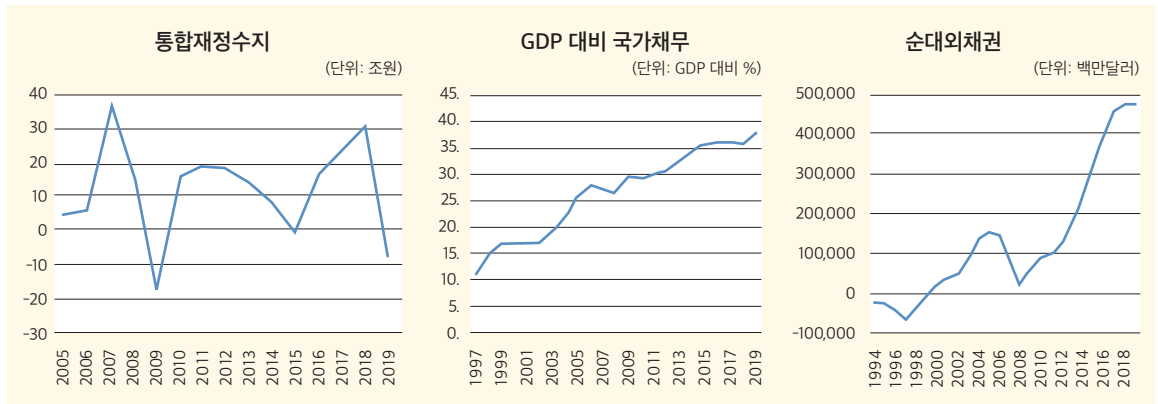
재정 여력은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나 민간부문 투자에 대한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림 1]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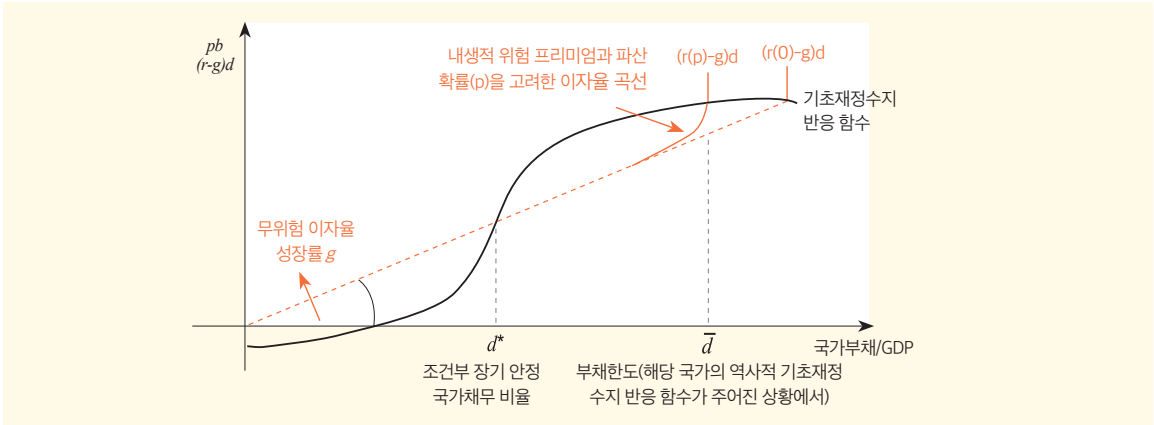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2020. 2. 1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 2020. 4. 2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2020. 5. 12.

[그림 2]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순대외채권 추이



출처: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0. 5.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15.

[그림 3] 부채한도의 결정



주: r : 이자율, g : 성장률, d : 부채비율
출처: Ostry, Ghosh, Kim, and Qureshi(2010),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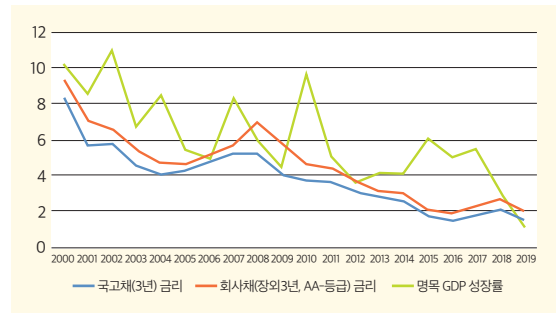
재정적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재정 여력의 판단에는 실효이자비용(국채금리-명목성장률)이 중요하며 실효이자비용이 낮을수록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¹⁾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질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도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해 국채금리를 상승시켜 조달비용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에서 국가채무비율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²⁾ 다만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모두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Ostry, Ghosh, and Espinoza(2015, p. 4)는 한국은 국가부채비율을 241%p 더 높일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Collard, Habib, and Rochet(2015, pp. 398~399)는 한국은 국가부채비율을 237~363%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4]에서처럼 한국 국채의 실효이자비용은 대체로 음(-)의 값을 가진다.³⁾ GDP 대비 이자비용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정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4] 한국의 실효이자비용: 금리-명목성장률

(단위: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15.

1) 하준경(2020), p. 8

2) 하준경(2020), p. 9

3) 2020년에는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실효이자율이 소폭 증가하여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

III.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재정 및 금융통화정책

■ 미국의 재난지원

미국의 재난 지원은 소득 하위 90%에 대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된다. 저소득·중산층에 방점을 두고 사회보장번호 보유자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가 있는 성인 및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세법상 비거주자,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년 또는 2018년 세금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2020년 지원금을 산정하고, 2021년 초에 2020년 세금신고서에 근거하여 정산(advancing a tax credit)한다. 2019·2018년 세금신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된다.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 5천달러 이하인 개인과 15만달러 이하인 부부, 그리고 11만 2,500달러 이하인 홀벌이 가구주에 대해 1인당 1,200달러, 부부의 경우 2,400달러, 그리고 16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지급한다. 해당 조정소득 1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5%씩 감액하여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상위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체 지급액의 약 68%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지급되고, 상위 20%에는 약 11%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독일의 재난지원

독일은 휴직수당 등 기존의 복지정책과 실업구제수단을 확대·운용한다. 기업은 최소한 노동자의 10%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2020년 3월 1일로 소급

하여 조업단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3분의 1 이상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및 10% 이상의 임금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를 최대 6개월까지 사회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이를 최대 12개월로 확대·운용한다. 조업단축지원금으로 임금(휴직수당)과 사회보장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조업단축지원금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유전문직 등에 대해 관료주의적 신청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비용을 신속하게 재정에서 지원한다. 5인 이하 소상공인 등은 최대 9천유로, 10인 이하 소상공인 등은 최대 1만 5천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술가의 경우에는 최대 9천유로 규모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초과해서 지원된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3개월 사업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일시불로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필요 금액을 작성하면 이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단 필요시 연방 및 주 감사원에서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기초보장금을 지원하며, 이는 생계비와 임대료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료를 통상적인 시기에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임대계약은 해지되지 않으며, 기초공급계약(전기, 가스, 전화, 민법상 규정된 수도공급)에 대해서도 사용료 지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급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작용한다.

■ 주요국의 재난지원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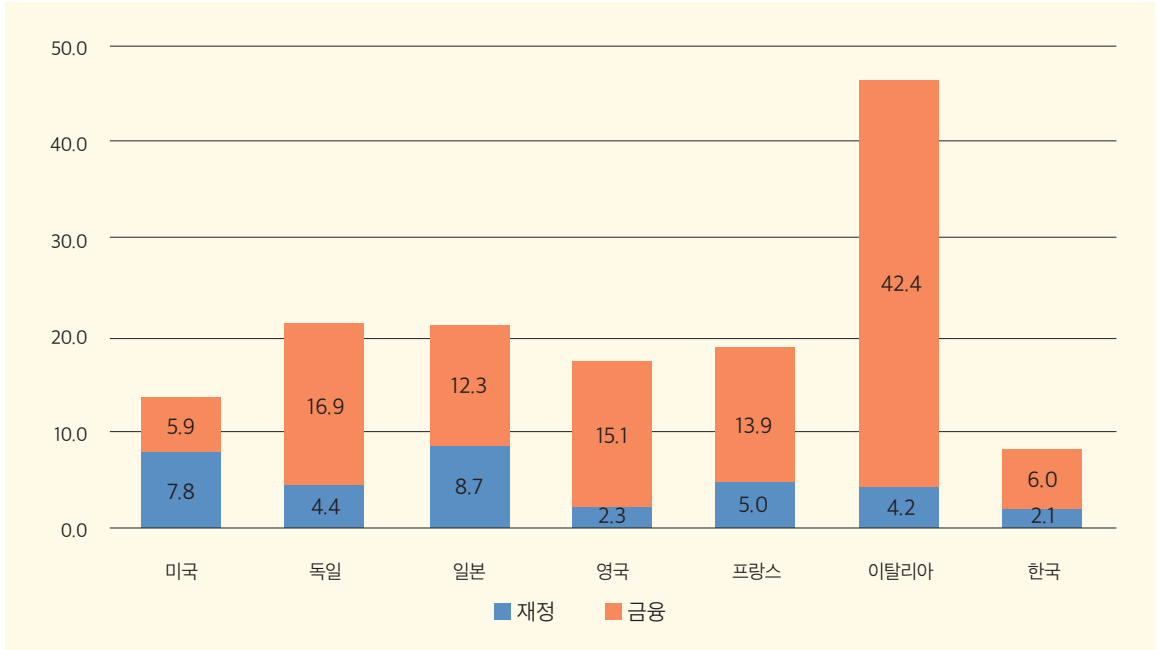
<표 3> 해외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재정대응	금융대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베이트 직접 지급 2,900억달러, 실업수당 확대 2,600억달러 • 저소득·중산층 중심 대다수 국민에게 현금지원. 모든 실업수당 대상자에게 급여액·지급기간 확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2,300억달러, 세제지원 3천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등 사채매입 지원 4,540억달러 - 중소기업 대출 탕감 3,660억달러 - 항공·안보 필수 기업 대출 460억달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500억유로) - 개인사업자에 한해 기초생계보장에 30억유로 규모의 기초보장금 지원. 소득이 감소된 기정을 위한 소득보전 - 자영업에 대한 실업급여·인건비 지원(77억유로) - 향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지원(550억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정화기금(6천억유로) •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나 특정 분야의 소기업에도 적용 가능 - 독일재건은행 대출보증 프로그램(최대 8,220억유로) - 경영난기업 대상 운영비를 1~2%대의 금리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 확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확대방지 지원: 25조엔 - 고용유지와 사업계속: 22조엔 •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대한 신형 급부금(4만 206억엔),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 자금용통 대책(3만 8,324억엔) 및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신형 급부금(2만 3,176억엔)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확대(690억엔) - 국내투자촉진 등 경제구조 구축: 10.2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티 넷 대출·보증(6,060억엔)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5,430억엔) -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에 의한 대기업 중견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2,040억엔) - 국제 협력 은행의 서플라이 체인 확보 등에 대한 금융 지원(2,500억엔)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국민 지원 70억파운드 소기업 사업체 보조금, 사업용 재산세 감면 등 기업 지원 대책 200억파운드 복지급여 상향 조정 등 70억파운드 - 고용유지 지원금: 임금의 80%(인당 최대 2,500파운드/월) 지원. 자영업자 소득지원금: 월 수익 평균의 80%(최대 2,500파운드/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출·보증 지원 £3,300억 • BOE의 CP 매입(CCFE) • 사업중단 대출 한도 확대 및 일정 기간 이자 비용 정부 부담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연기에 총 320억유로 - 무급휴직자의 소득 보전에 85억유로 투입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 등에 20억유로 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단기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대출 보증 3천억유로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소득의 보호를 위해 고용과 근로자에 대한 실업 대책 및 고용지원(103억유로) • 일시적 장기 육아휴직 혹은 육아 돌봄 수당 지급(12주 급여의 50%, 혹은 최대 600유로) • 자영업자 긴급 재난 수당 지급(600유로의 1회성 재난 수당) -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및 의무 보험료 등의 납세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16억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시스템 및 중앙 보증 기금 사용을 통한 가계 및 기업 지원(51억유로, 최대 3,500억유로의 유동성 지원) • 모기지 및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유동성 2,200억유로 증가) • 중소기업 보증 기금의 강화(기금 규모를 현재 400억유로에서 1천억유로 이상으로 150% 이상 확대)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2020. 4. 14.)

[그림 5]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금융 지원규모 비율

(단위: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 자료(2020. 4. 14.)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양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소득 지원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해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중산층에 방점을 두고 지원한다. 실업급여(수당), 휴직급여 등 기존 실업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국가들이 다수이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금융·보증 지원이 다수이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생계비, 임대료 등 기초보장금을 지원한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GDP 대비 재정지원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의 재정지원이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금융지원의 비중도 우리보다 높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SOC 포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IV.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1. 재정지출승수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GDP가 증가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재정지출승수는 통상 경제침체기에는 평

상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지출 확대 규모에 비하여 높은 성장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표 4> 실질 재정지출 1조원 확대가
실질 GDP에 미친 효과 요약**

(단위: 조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총지출	0.4502	0.5098	0.5125
정부소비	0.9288	0.9025	0.8906
정부투자	0.8604	0.9071	0.9403
가계이전	0.2152	0.287	0.2785
기업이전	0.2213	0.4098	0.4720

주: 1. 각 연차별 누적 효과
출처: 박명호·오종현(2017), p. 70 <표 IV-3>

미국 CBO의 연구자료에서 잠재 GDP가 실제 GDP보다 큰 경우(경기 침체기) 재정지출승수는 0.5에서 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Whalen & Reichling, 2015, p. 12)되었다.

<표 5> 8분기 재정지출승수

(단위: 달러)

분기	잠재 GDP > GDP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협조적 ¹⁾		잠재 GDP ≤ GDP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비협조적	
	최소 추정치 (low estimate)	최대 추정치 (high estimate)	최소 추정치 (low estimate)	최대 추정치 (high estimate)
재정승수 (1-4분기)	0.50	2.50	0.17	0.83

주: 1)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구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출처: Whalen & Reichling(2015), p. 12.

또한 2020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소득지원(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CEPR의 연구에서는 지출승수를 2.0으로 분석(Bayer et al., 2020)⁴⁾하였다.

IMF가 -1.2%로 전망한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는 재정지출승수 0.5, 1.0, 2.0, 2.5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48조원, 24조원, 12조원, 9.6조원이다. 성장률 1.2%p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를 조세부담률 20%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8조원이며 재정지출 확대 48조원, 24조원, 12조원, 9.6조원의 자기조달 비율은 10%, 20%, 40%, 50%가 된다.

미국과 같은 큰 규모의 국가와 소규모국가의 재정지출승수는 평상시에는 물론 차이가 클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지출 확장에 나서는 경우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개별 국가들에 적용되는 재정지출승수도 미국만큼은 못하더라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재정을 크게 확장한 것은 각 국가의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나 전 세계가 공급체인으로 연결된 현실에서 결국 글로벌하게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하게 진전되는 경우 재정지출 확대의 내수진작 효과는 오히려 증대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경제침체 시에는 재정지출승수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2.0이 아니면서도 평소의 0.45 정도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1.0에서 1.5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4) Bayer et al., "The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how large is the transfer multiplier?," CEP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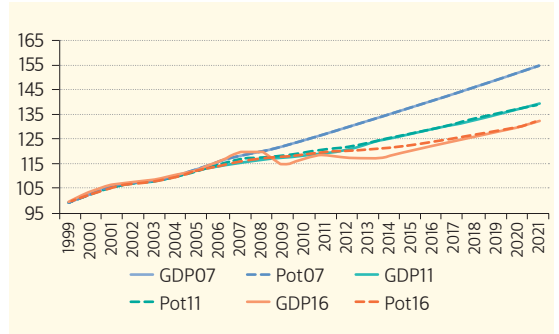
2. 이력효과

시장에서의 경쟁에 따른 실업과 기업도산은 창조적 파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과 도산은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의 일방적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파괴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이러한 효과를 경제학계에서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⁵⁾라고 부르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이력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경제침체기를 전제로 적시의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을 넘어 성장잠재력의 단계적 하향화를 막아주어 장기적 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금융·재정위기 시기에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축에 대해 재정지출로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V자 회복을 하지 못하고 L자 회복을 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이력효과의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Fatas & Summers, 2018). 그러므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성격의 재정지출 확대는 긴급생활지원과 경기부양정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Revisions to Euro GDP and Potential Trend

(단위: Index 19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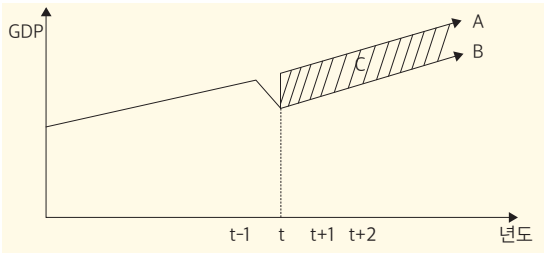
출처: Fatas & Summers(2016), p. 3.

L자 회복이란 위기 이후의 경제가 과거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 뒤에 정상적인 성장률로 성장하지 못하고 위기로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반등 없이 과거의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성장잠재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림 7]의 경로 B가 상정하는 경제회복이 L자 회복이다. 우리의 경우 2020년의 낮은 성장률을 경험한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수준의 경제성장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이후 경제가 V자 회복을 한다면 아래 [그림 7]의 경로 A를 따르는 것이며, A경로의 성장과 B경로 사이 면적 C는 V자 회복을 못하고 L자 회복을 따르는 경우 감수해야 하는 경제규모 손실이다. 우리의 경우 V자 회복 및 A경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2021년에 6% 정도의 높은 실질 성장을 통하여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로 돌아가야 한다.

5) 이력현상이란 특정 변수의 일시적 변화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시 및 거시적 경제 현상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Matthias Göcke, p. 167). 예를 들어 경제침체기에 실업상황에 진입한 근로자가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인적자본의 훼손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고 이것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림 7] 경제회복의 경로와 GDP



출처: 저자 작성

이력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재정지출승수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의 단기적 경제성장의 효과가 그 이후의 연도에도 일정 부분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재정지출 확대의 세수증대를 통한 자기조달 가능성도 이 경우 더 강화된다.

3. 재정지출승수와 이력효과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비용의 자기조달

DeLong & Summers(2012)의 연구에서 수요가 제한된 경제에서 재정승수는 1.5, 장기 국가채무에 대한 연간 실질이자율은 1%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GDP가 1달러 증가할 때 재정수지 개선효과(세수증가 + 이전지출부담 감소)를 0.33달러로 보았다. 또 특정 연도에 GDP가 잠재적 수준보다 1달러 부족할 때 미래 잠재적 GDP는 영구적으로 0.01달러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이것은 미래의 잠재적 생산에 대한 이력현상의 효과를 1%로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1달러 증가시킬 경우 현재의 GDP는 1.5달러 증가하고 늘어난 GDP의 0.33만큼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있으므로 부채는 단지 0.5달러만 증가한다.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매년 0.005달러이고, GDP가 1.5달러 증가했으니 이력효과에 의하여 미래의 잠재적 생산은 0.015달러 증가한다. 미래에 실질적인 생산이 0.015달러만큼 늘어나면 재정수지는 0.005달러 개선되고 이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동일하다. DeLong & Summers(2012)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승수와 이력효과를 통하여 경제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비용을 자기조달(self-financing)할 수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첫째로,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적절한 재정균형 조건은 안정적인 실질 부채보다는 안정적인 GDP 대비 부채비율이다. 또한 재정 확장의 결과에 따라 미래 물가 수준이 상승할 경우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부채와 새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실질 이자율은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정부 지출 증가로 생산적인 공공 인프라 자본과 민간 인적자본이 증가하여 미래의 생산성 및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DeLong & Summers, 2012, pp. 236~237).

$$r \leq g + \frac{\eta\mu\tau}{(1-\mu\tau)} \quad \text{식 (1)}$$

위의 식은 DeLong & Summers(2012)가 제시한 단기재정승수 μ , 이력현상의 효과 η , GDP 증가의 재정수지효과 τ , 실질이자율 r , 성장률 g 을 포함하는 부등식으로 어떤 경우에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래의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DeLong & Summers, 2012, p. 239).

이 부등식에 의거하여 <표 6>은 다양한 재정승수 및 이력현상을 가정할 경우에 이자율이 어느 정도까지일 때 재정지출 확대의 비용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정부의 국채발행 이자율의 임계치를 나타낸다(DeLong & Summers, 2012, pp. 240~241).

<표 6> 정부 대출 이자율의 임계치

(단위: 연 %)

이력현상 (η)	재정승수(μ)별 정부의 실질 대출 이자율(r)의 임계치 ¹⁾				
	$\mu=0$	$\mu=0.5$	$\mu=1.0$	$\mu=1.5$	$\mu=2.5$
0	2.50	2.50	2.50	2.50	2.50
0.025	2.50	2.99	3.73	4.95	14.29
0.050	2.50	3.49	4.96	7.40	26.07
0.100	2.50	4.48	7.43	12.30	49.64
0.200	2.50	6.45	12.35	22.10	96.97

주: 1. 식 (1)에서 g 는 2.5%, τ 는 33.3% 가정

1) 임계치는 본문의 식 (1)을 충족하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의미함

출처: DeLong & Summers(2012), p. 241.

재정승수(μ)가 1.5이고 이력현상 계수(η)가 0.10이면 식 (1)의 우측의 두 번째 항은 매년 10%이다. 이것은 정부의 실질대출이자율(r)과 실질 GDP 성장률(g)의 차이가 매년 10%p 미만인 경우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 GDP 성장률(g)이 2.5%라는 가정에서 매년 정부의 실질대출이자율(r) 임계치는 12.5% 이하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승수(μ)가 1.0이고 이력현상 계수(η)가 0.1이면 식 (1)의 우측 두 번째 항은 매년 5%이다. 이 경우 실질대출이자율(r)과 실질 GDP 성장률(g)의 차이가 매년 5%p 미만이면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

선시킨다는 것이다. 재정승수(μ)가 0.5이고 이력현상 계수(η)가 0.05이면 실질대출이자율(r)과 실질 GDP 성장률(g)의 차이가 매년 1%p 미만이면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이자율(r)의 임계치는 3.5%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DeLong & Summers, 2012, pp. 240~241).

4.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재정지출 확대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증세의 경우와 재정지출 확대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증세의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제 침체에, 그리고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를 전제로 한다면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재정지출 확대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증세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금부담을 어떤 소득계층에서 하느냐, 그리고 어느 분야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하여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지출의 성격으로 보아 규모가 큰 예외적 상황의 일회성 지원금은 부채로, 중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공공투자과 같은 지출 확대는 증세와 부채

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규모의 공적인 영역을 내포하는 국민 경제에서, 그리고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V.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1. 단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리스크

세계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국가부채 증가는 과거 시기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최근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에서 거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게 만든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으니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시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에 부담이 없다. 다

만 부동산 등 자산 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코로나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은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고 거래는 드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자금은 부동산에서 주식 등 증권시장으로 이동하여 투기 자금이 되었다. 개인의 주식 투자 대기 자금(예탁금+CMA)은 2020년 4월 29일 현재 90조 4,461억원(금융투자협회)⁶⁾이다.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개별 국가들의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동시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중·저소득계층의 금융 소외 이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총저축의 비중은 31.7~37.1% 수준이었으며, 총투자의 비중은 31.9~37.1%이다. 총저축과 총투자의 격차인 순국외투자는 2006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을 가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0.4~6.9% 수준이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순대외금융자산은 5009억달러(한국은행, 2020)⁷⁾로 2019년 명목 GDP 1조 6,240억달러(한국은행, 2020)⁸⁾의 30.5%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형성된 자본(저축)이 국내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자본 초과공급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국가부채

6) 금융시장협회 종합통계포털, <http://freesis.kofia.or.kr>, 검색일: 2020. 4. 29.

7) 한국은행, 『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20. 2.

8)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0. 3.

<표 7> 국내 총저축 및 총투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총저축(A)	221,026.0	226,196.7	247,544.1	276,799.0	322,992.5	324,213.5	331,622.9	366,107.2	386,165.5	402,901.8
(A/E, %)	(34.2)	(32.3)	(31.7)	(33.3)	(35.7)	(34.2)	(33.2)	(33.8)	(33.4)	(33.5)
총투자(B)	221,527.1	226,973.9	248,507.0	277,799.9	323,209.5	323,534.8	331,578.9	365,302.3	386,359.3	402,518.1
(B/E, %)	(34.2)	(32.4)	(31.9)	(33.4)	(35.7)	(34.1)	(33.2)	(33.7)	(33.5)	(33.5)
국내총저분형성(C)	214,346.2	223,439.5	243,998.3	270,298.2	295,692.9	311,248.9	331,781.2	360,650.1	388,588.1	354,372.1
(C/E, %)	(33.1)	(31.9)	(31.3)	(32.5)	(32.7)	(32.8)	(33.2)	(33.3)	(33.7)	(29.5)
국외투자(D)	7,180.9	3,534.4	4,508.7	7,501.7	27,516.6	12,285.9	-202.3	4,652.2	-2,228.8	48,145.9
(D/E, %)	(1.1)	(0.5)	(0.6)	(0.9)	(3.0)	(1.3)	(-0.02)	(0.4)	(-0.2)	(4.0)
국민총저분가능소득(E)	647,195.6	700,999.0	779,892.2	831,292.4	904,224.4	948,273.9	999,356.0	1,084,398.3	1,154,672.2	1,202,422.0
연도										
총저축(A)	464,451.4	482,737.2	500,806.5	524,949.0	548,691.4	604,061.6	641,904.3	680,904.7	676,992.6	665,871.8
(A/E, %)	(35.2)	(34.6)	(34.5)	(34.8)	(35.0)	(36.4)	(36.8)	(37.1)	(35.8)	(34.6)
총투자(B)	464,451.4	482,737.2	500,806.5	524,949.0	548,691.4	604,061.6	641,904.3	680,904.7	677,269.0	
(B/E, %)	(35.2)	(34.6)	(34.5)	(34.8)	(35.0)	(36.4)	(36.8)	(37.1)	(35.8)	
국내총저분형성(C)	430,537.9	462,785.9	450,994.6	448,524.7	465,604.0	489,601.5	524,717.6	592,711.4	592,858.4	597,085.1
(C/E, %)	(32.6)	(33.2)	(31.1)	(29.7)	(29.7)	(29.5)	(30.1)	(32.3)	(31.4)	(31.0)
국외투자(D)	33,913.6	19,951.3	49,811.9	76,424.3	83,087.4	114,460.0	117,186.6	88,193.3	84,410.6	
(D/E, %)	(2.6)	(1.4)	(3.4)	(5.1)	(5.3)	(6.9)	(6.7)	(4.8)	(4.5)	
국민총저분가능소득(E)	1,319,387.5	1,393,483.2	1,450,611.4	1,507,724.9	1,567,113.4	1,658,961.9	1,742,004.3	1,836,741.9	1,890,779.4	1,925,872.9

(단위: 십억원,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20. 5. 11.

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낮다.

경기 침체기에 재정지출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채의 대규모 발행은 자본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당국과의 정책 조율을 통한 신중한 정책대응은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속성을 갖는다. 즉,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반 발짝 늦게 높여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경우 한국만 확장재정을 쓰는 경우에 비해 재정 여력이 커진다. 한국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환율이 절상되어 국내수요 증가를 해외수요 감소가 상쇄하게 되지만 모든 나라가 확장재정을 쓰면 환율 절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⁹⁾

IMF는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낮고, 재정지출 및 통화 공급 확대로 인한 수요 과잉 또는 인플레이 유발 등의 우려가 거의 없고, 외환보유액 순위가 세계 9위이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작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서도 한국의 총체적 경쟁력은 세계 15위,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31개국 공동 1위로 평가(Schwab, Klaus & World Economic Forum, 2018, p. 323)되고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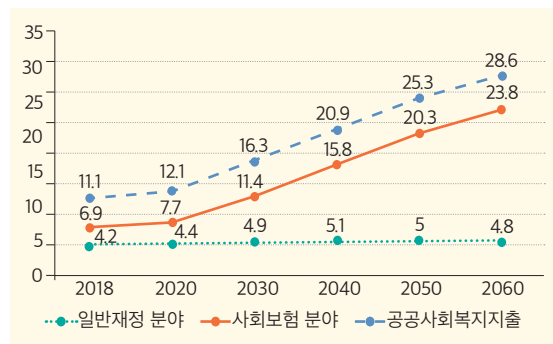
2.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리스크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다. 여기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 국가부채 수준에 대하여 해외 신용평가사가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나 미래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단과 그러므로 재정지출 확대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향후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사회에 견고하게 존재한다.

미래의 재정전망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효과가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또 일반 예산의 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전망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추이 (2018~2060년)

(단위: GDP 대비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19), p. 13.

9) 하준경(2020), p. 14

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이 장기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전망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감소가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출생이 줄어도 수명연장,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로봇이나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를 통하여 인구감소의 효과는 노동공급에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인구가 줄어도 로봇과 AI의 활용이 증가하여 생산요소로서 노동은 부족함 없이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오히려 노동력 부족보다 일자리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미래 상황이 도래될 개연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 기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술 환경의 진전(노동수요 감소)과 인구의 감소(노동공급의 감소)는 상충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경제에 안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더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¹⁰⁾ 또한 노인 인구는 노동 공급자로서 기능은 약해져도 소비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것이다. 다만 건강수명의 증가, 은퇴연령의 조정, 노후소득 및 건강보험 체계의 재구조화 등은 필요하다.

나. 재정전망의 전제조건으로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장기재정전망이 어두운 또 하나의 요인은 미래의 재정전망에서 이자율을 높게, 성장률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상황을 대변하는 적절한 수준의 이자율과 성장률의 관계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장기에 걸

친 경제전망에서는 통상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 변수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이 변수들의 크기의 소폭의 차이에도 전망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자율을 높게, 성장률을 낮게 설정하면 장기재정전망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¹¹⁾

<표 8> 경상성장률과 이자율 실적 및 장기 전망

(단위: %)

기간 ¹⁾	한국		미국	
	경상성장률	국고채 (10년) 금리	경상성장률	T-Note (10년) 금리
2000~2009	7.4	5.7	4.2	4.1
2010~2019	4.8	2.9	4.0	2.4
2020~2029	4.1	3.1	4.0	3.7
2030~2039	3.0	3.3	3.8	4.0
2040~2049	2.7	3.2	3.9	4.4
2050~2059	2.4	3.2	-	-

주: 1) 해당 기간의 평균
 2) 음영은 전망치
 출처: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종접속일: 2020. 5. 15.
 2. FRED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 최종접속일: 2020. 5. 15.
 3. 김성태·권규호·김지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17.
 4. CBO(2019), p. 54.

기존의 장기재정전망들에서 거시적 전제가 되는 이자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의 근미래에는 경제성장률이 실질 이자율보다 높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전제를 설정하게 되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게 전망되더라도 자본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 이자율은 미국보

10) 김유찬·오종현(2019), p. 55
 11) 김유찬·오종현(2019), p. 55

다 낮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 한 가지 요인에 압도되어서 한국의 장기재정전망이 매우 어두운 결과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저출산 추세만을 반영할 뿐 4차 산업혁명의 추세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높은 이자율은 우리가 자본 순수출국가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 고령화와 사회보험 재정 및 일반재정

앞의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보장위원회가 제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재정은 2018년 GDP 대비 6.9%에서 2060년 23.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중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은 건강보험¹²⁾(장기요양보험 포함)이며 국민연금 재정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재정에서도 효율적 비용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인 건강보험 기여금 체계는 가능한 넓은 세원에 확대하여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GDP에서 차지하는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의 증가는 이 분야에서 고용을 수반하는 커다란 산업섹터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재정과 달리 일반 재정에서는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존

재하지 않는다.¹³⁾ 앞의 [그림 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은 2018년 GDP 대비 4.2%에서 2060년 4.8% 수준으로 소폭만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 정부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자지출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부 부채에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는 전년도 적자성 채무에 이자지출을 포함한 당해 연도 관리재정수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재량지출, 의무지출, 이자지출의 GDP 증가율 대비 빠른 증가는 GDP 대비 적자성 채무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자지출 이외의 의무지출의 GDP 비중은 장기적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자지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재정책대 과정에서 재원확보 시기와 지출확대 시기의 시간적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성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 확보(증세)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것이 이자지출 관리의 핵심이다. 이것이 전제되는 경우 경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이 한결 자유로워진다.¹⁴⁾

그리고 현재와 같은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는 이자지출 관리의 중요성조차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라. 장기적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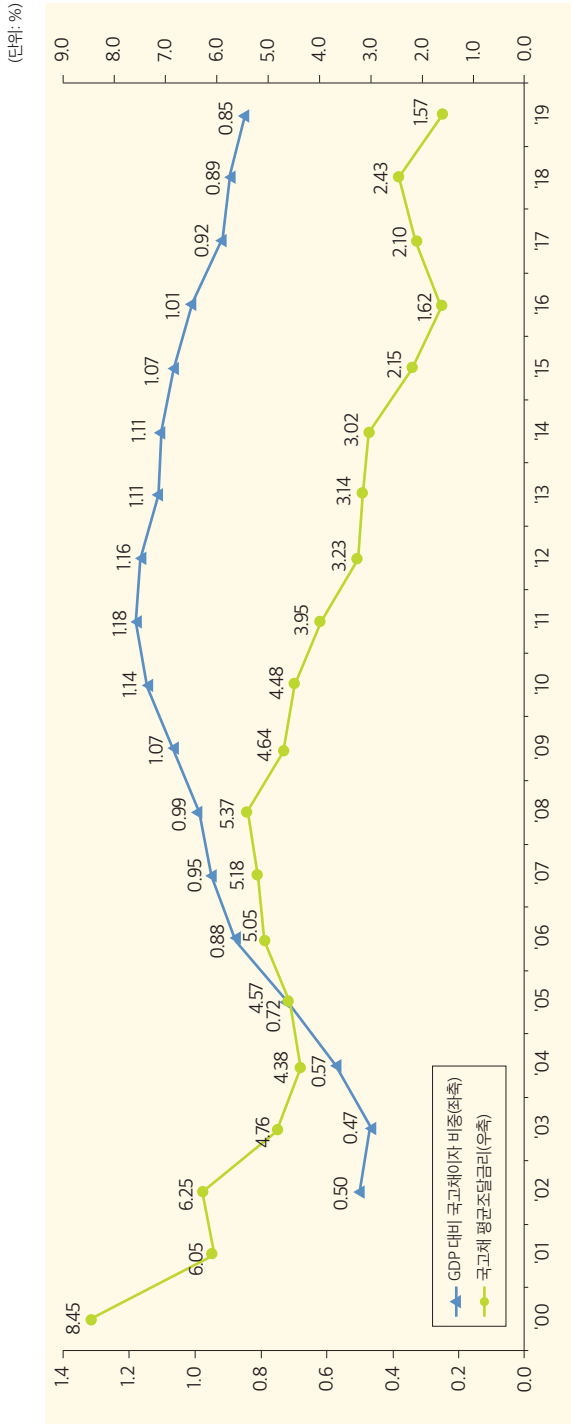
국채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과잉 저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의 부채

12) 『제2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사회보장위원회, 2015)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2018년 GDP 대비 3.8%에서 2060년에는 11%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김유찬·오종현(2019), p. 57

14) 김유찬·오종현(2019), p. 59

[그림 9]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GDP 대비 이자 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국채과 내부자료(2020. 5. 16.)

<표 9>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GDP 대비 이자 비율

연도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A)	651.6	707.0	784.7	837.4	908.4	957.4	1,005.6	1,089.7	1,154.2	1,205.3	1,322.6	1,388.9	1,440.1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3.5	1,914.0
국고채이자(B)	-	-	3.9	3.9	5.2	6.9	8.8	10.3	11.5	12.9	15.1	16.4	16.7	16.7	17.3	17.7	17.6	16.9	16.9	16.3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8.45	6.05	6.25	4.76	4.38	4.57	5.05	5.18	5.37	4.64	4.48	3.95	3.23	3.14	3.02	2.15	1.62	2.10	2.43	1.57
GDP 대비 비중 (B/A)	-	-	0.50	0.47	0.57	0.72	0.88	0.95	0.99	1.07	1.14	1.18	1.16	1.11	1.11	1.07	1.01	0.92	0.89	0.85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국채과 내부자료(2020. 5. 16.)

이면서 민간의 자산이다. 동시에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안전 자산 공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외국으로부터 외화 표시 부채를 얻는 것이 아닌 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래세대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물려받으며,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채권·채무가 된다. 미래세대가 이미 사망한 과거세대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즉, 세금 부담과 이자 소득은 서로 상쇄된다. 국채를 물려받은 후손은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국채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며, 납세자로부터 국채 보유자에게 소득 이전이 되는데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 및 재분배 수단으로 문제를 교정할 수 있다.¹⁵⁾

VI. 2020년 제3차 추경의 편성과 2021년 예산

1. 2020년의 제3차 추경예산의 편성과 재정정책

코로나19의 확산은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가시화 단계이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와 이후의 대응에 재정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주요국들의 최근의 정책대응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파괴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남아 있는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부분 동결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의 활동이 종식된 이후 신속한 경제활동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개인이나 기업의 생존을 돕는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방역 관련 긴급 지출(바이러스백신 연구 포함), 기초적 생계 유지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 보존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부도방지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기여분 등은 국가부채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필수적 지출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종결된 후에 시행할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하여도 준비가 필요하다. 규모와 분야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효과성과 국가부채의 제약 등을 포함하여 신중한 고려가 요망된다.

IMF의 경제 예측에 따른 2020년 한국경제 -1.2% 성장은 현재 위기의 성격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과 예측과 비교할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경제 침체가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재정의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의 경기 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정책의 확장적 공조 분위기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경제 침체를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분위기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이다.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약 30조원 확대한다면 재정지출증수를 조심스럽게 1로 가정하여

15) 하준경(2020), p. 16

계산한 경제성장을 제고효과는 1.5%p 정도이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이 30조원 정도의 재정지출은 방역관련 긴급지출,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보전지원금, 금융시스템 유지와 기업부도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상대적으로 조기에 종식되는 경우 상당한 부분은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에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위기의 조기 탈출은 다른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성공적 방역과 함께 우리 기업과 국내 생산품에 유리한 경쟁적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적정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투자이다.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다만 단기적인 국채발행 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국채발행의 시차적인 고려는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할 경우 충분히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재정책상은 경제성장률과 국제수입을 내생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어준다. 2020년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재정지출 확대가 없는 상황과 비교할 때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는 앞의 제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장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있고 또 지출의 일부분은 자기조달된다. 이력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 개선효과 0.33¹⁶⁾만 감안하여도 재정지출확대의 3분의1, 즉 10조원 규모는 자기조달로 해결되며 GDP 증가효과는 이력효과를 통하여 다음 시기의 재정수지개선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에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경기침체에 대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2021년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활동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경제가 안정 기조를 찾아가더라도 재정총량은 줄이지 않아야 한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공적 영역이 긴축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수축시키지 않아야 한다. 2021년의 예산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적정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이

16) Delong & Summers(2012)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재정개선효과지수 0.33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이는 GDP 증가의 세수효과 0.2와 이전지출부담 감소효과 0.13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세수효과 0.2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20% 수준에 상응하며 이전지출부담 감소효과 0.13도 현 시점의 경제위기로 인한 GDP 감소와 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2021년 초의 시점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VII. 결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 수준은 OECD 평균이 109.2%이고 우리나라는 그 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40.1%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외 채권자 비중은 2018년 기준 12.5%로 OECD 평균인 37.3%보다 낮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도 낮은 편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 소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다수의 국가들에서 기존의 실업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고용 유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증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재정 지원 수준이 높고, 금융 지원 비중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높다.

재정지출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GDP 증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반적인 시기에 비해 재정지출승수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동시에 각국의 정부가 재

정지출을 확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승수도 미국과 같이 규모가 큰 국가에 적용되는 승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침체가 깊어지면 단기적인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이력효과로 인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까지 저하된다. 경기침체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단계적 하향을 억제하여 장기적인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의 확대는 L자 회복이 아닌 V자 회복의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증세하거나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성격이 규모가 큰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의 경우 부채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공공 투자와 같은 지출의 경우 증세와 부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세는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

IMF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9위이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작동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서도 한국의 총체적 경쟁력은 세계 15위,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31개국 공동 1위로 평가하고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

의 지속적 증가로 향후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출생이 줄더라도 수명 연장,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로봇이나 기계로 노동 대체를 통해 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고령층은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저출산 및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우려하는 수준과 다를 것이다. 일반 재정의 복지지출의 경우 2018년 GDP 대비 4.2%에서 2060년 4.8%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정 지속성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재정의 경우 그러나 2018년 GDP 대비 6.9%에서 2060년 23.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파괴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정책 확대 공조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경제침체에서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2020년 하반기 3차 추경으로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재정지출승수를 조심스럽게 1로 가정하여 계산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약 1.5%p 정도이다.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부채비율의 증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겠지만 이력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 개선효과 0.33만 감안하여도 재정지출 확대의 3분의 1, 즉 10조원 규모는 자기조달로 해결되며 이력효과를 통하여 이는 다음 시기의 재정수지개선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2021년의 예산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지출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 2021년 초에 추가적인 재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세계대륙별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 2020. 4. 3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2020. 2. 12.

_____,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 2020. 4. 21.

_____, 「보도참고자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2020. 5. 12.

김성태·권규호·김지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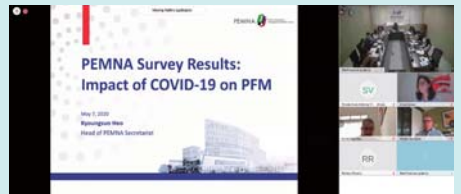
김유찬·오종현, 「장기적 시계의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 발표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박명호·오종현,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활용』, 연구보고서 17-

- 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사회보장위원회, 『제2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5.
- 하준경, 「지속적인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부채 및 재정여력」, 미출판자료, 2020. 4. 2.
- _____,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
- 한국은행, 『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20. 2.
- _____, 『2019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0. 3.
- Bayer, Christian, Born, Benjamin, Luetticke, Ralph, and Müller, Gernot, “The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how large is the transfer multiplier?,” CEPR, 2020.
- 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2019.
- Collard, Fabrice, Habib, Michel and Rochet, Jean-Charles, “Sovereign Debt Sustainability in Advanced Economi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3(3), 1 June 2015, pp. 381-420, DOI: <https://doi.org/10.1111/jeea.12135>
- Delong, J. Bradford and Summers, Lawrence H., “Fiscal policy in a depressed econom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2.
- Fatas, Antonoi and Summers, Lawrence H., “The permanent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s,” NBER Working paper series, June 2016.
- Göcke, Matthias, “Various concepts of hysteresis applied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6(2), 2002, pp. 167-188.
- Ostry, Jonathan D., Ghosh, Atish R. and Espinoza, Raphael,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 IMF, 2015.
- Ostry, Jonathan D., Ghosh, Atish R., Kim, Jun I. and Qureshi, Mahvash S., “Fiscal pace,” IMF, 2010.
- Schwab, Klaus and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WEF, 2018.
- Whalen, Charles J. and Reichling, Felix, “The fiscal multiplier and economic policy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CBO Working paper series, February 2015.
- 금융시장협회 종합통계포털, <http://freesis.kofia.or.kr>, 검색일자: 2020. 4. 29.
-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0. 5. 15.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5. 15.
- FRED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 최종검색일자: 2020. 5. 15.
- IMF, <https://data.imf.org/?sk=a0867067-d23c-4ebc-ad23-d3b015045405>, 검색일자: 2020. 5. 11.
-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GDD>, 검색일자: 2020. 5. 11.
-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CG_DEBT_GDP@GDD/SWE, 검색일자: 2020. 5. 18.
- OECD,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0. 5. 11.
- _____, 『Economic Outlook No. 106』, 2019. 11,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 검색일자: 2020. 5. 11.

정책토론포럼 |

■ 2020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Webinar)





2020년 PEMNA 예산분과 웨비나(Webinar)

개요

- 주 제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Crisis
- 일 시 2020년 5월 7일
- 주 최 기획재정부 및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 본 원고는 2020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하에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Crisis」 주제로 열린 웨비나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 네트워크임.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의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IMF, OECD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 예산분과는 회원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각국 경제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정책 공조를 위하여 5월 7일 화상회의 형식의 웨비나(Webinar)를 개최함
 - ‘코로나19 관련 재정당국의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와 회원국 내 예산분과, 국고회계분과 및 희망 부처 관계자 포함 총 100여 명이 참여함
- 진행을 담당할 Alma Kanani PEMNA 운영위 공동의장(세계은행, Governance Practice Manager)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새롭

게 당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이번 웨비나는 재정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장임을 밝힘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 Introduction

- **Kyoung-Ho H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Kunta W. D. Nugraha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한경호 PEMNA 운영위 공동의장(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회원국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래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조함
 -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웨비나에서 한국 및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함
- PEMNA 예산분과의장 Kunta W. D. Nugraha (인도네시아 재무부, Assistance to the Minister for Government Expenditure Affairs)도 코로나19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경제위기로 예측되며 각국 노력 및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코로나19는 대부분의 국가에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국제무역 감소,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실질경제 악화 및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



으로 예측됨

- 각국은 다수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노력 중임
- 웨비나를 통하여 아태 지역의 코로나19발(發) 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peer learning)할 수 있기를 기대함

Session A. Overview of COVID-19 Impact on PFM on a Regional Level

Presentation

• Richard Record (The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 세계은행은 3월 말에 발간한 보고서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¹⁾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함
 - 현재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치 또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 최근 발간한 보고서의 수치에도 이미 변동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코로나19는 심각한 금융쇼크와 경제 부진을 동반한 글로벌 쇼크를 야기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이번 경제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글로벌 쇼크가 심화되면서, 아태 지역은 무역 악화,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글로벌 금융쇼크와 경제 부진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2020년 1월에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속도와 규모로 확산될지 몰라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지만,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세계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변하면서 글로벌 쇼크가 왔고, 세계경제에 변화가 발생함

- 아태 지역은 10년 전 금융위기와 20년 전 경제위기를 모두 겪으면서 외부 영향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왔으나, 이번 위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로 판단됨
 -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수요·공급 체계에 동시다발적인 쇼크가 왔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에 빠르게 확산되어 그 영향이 더욱 큼
 - 따라서 많은 국가가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팬데믹의 영향을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수요 및 공급쇼크, 세계적인 스프illo버현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모두 클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는 수요 및 공급쇼크를 동시에 야기했는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인한 수요쇼크는 지난

1) World Bank,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Washington, DC: World Bank, 2020. <https://www.worldbank.org/en/region/eap/publication/east-asia-pacific-economic-update>

20~30년 동안 자주 나타났으나,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쇼크는 사실상 흔하지 않았음. 이러한 쇼크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임

- 교통, 관광업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무역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도 막대함. 에너지가격 등을 포함한 상품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가 어떤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지에 따라 상품가격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도 다르게 나타남

■ 글로벌 경제활동은 아주 가파르게 축소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무역도 크게 감소함

- 선진국에서의 금융상황도 악화되면서 세계금융여건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음
-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석유가격이 하락한 데 반해, 식품가격은 크게 상승하면서, 코로나의 영향이 상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역과 관광의 감소는 아태 지역의 경제에 외부쇼크를 주고 있음
 - 아태 지역의 국가들은 무역과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음
- 많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이동금지령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중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 정책도 늘어나고 있음

■ 아태 지역의 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9년

5.8%에서 2020년은 -0.5~2.1%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도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세가 더욱 높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더 빨리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경제회복 속도가 더 급격할 뿐만 아니라 2008~2009년에 비해 경제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의료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거시경제학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현재 국가들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차이가 크며, 대규모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국가들의 대내외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책의 GDP 대비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더 크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작음
 - 2008~2009년에 실행된 부양책과 비교하면, 현재 부양책의 규모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2009년 금융위기 후 회복기간이 오래 걸렸음에 유념하여, 필요한 개혁을 적시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 부양책은 경제를 더 활성화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활동 수준을 회복하여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아태 지역은 다변화된 산업구조, 신속한 재정정책 대응,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로 위기 이후 성장을 유지해나갈 펀더멘탈이 높음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며, 국가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디지털 기술수준과 무역 개방, 견고한 금융기관과 강한 의료기관, 초기대응, 인적자본 투자 등과 더불어 신속한 경제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Session B. Summary of Government's Fiscal Responses to COVID-19 Survey Result

Presentation

- **Kyoungsun Heo (PEMNA Secretaria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EMNA Survey Results: Impact of COVID-19 on PFM**

■ PEMNA 사무국은 코로나19가 PEMNA 회원국의 재정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실시하였음

- 설문시기: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6일간 진행됨
- 설문내용: 코로나19가 경제·재정에 미친 영향과 보건·재정 부문 대응방안, 재무부의 역할에 관한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됨
- 응답률: 71.4%(14개국 중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10개국이 응답을 완료)

■ 경제부문에서의 영향을 묻는 설문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부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됨

- 경제성장률: 응답한 모든 국가들이 기존 전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이 최소 1.5%에서 최대 8.5%까지 하향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 인플레이션율: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기존 전망치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필리핀은 기존보다 다소 하향할 것으로 전망함
- 실업률: 한국과 인도네시아만이 기존보다 약 0.3~1.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나머지 국가들은 실업률 전망치 변화를 집계 중이라 답하거나 미응답)
- 산업부문: 응답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으며, 항공·수송 산업, 제조업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재정부문의 영향을 묻는 설문은 정부 총수입·총지출의 전망치 변화와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됨

- 총수입: 응답한 국가들은 총 5개국으로, 기존 전

망치보다 0.1% 증가를 전망한 한국을 제외한 4 개국(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은 기존 대비 약 9.1~30.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총지출: 필리핀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총지출이 약 2.9~3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1> 각국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을 전망치 변화 및 피해산업 부문

구분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플레이션을 전망치		피해산업 부문(Top3)
	기존	수정	기존	수정	
브루나이	4.9~7.1%	N/A	N/A		관광, 숙박, 수송(항공, 선박)
인도네시아	5.3%	2.3%	3.1%	3.9%	관광, 무역, 제조
라오스	6.5%	3.6%	N/A		관광, 제조, 농업
한국	2.2%	-1.2%	1.1%	0.3%	관광, 항공, 요식업
말레이시아	4.8%	-2.0~0.5%	2.0%	-1.5~0.5%	서비스, 제조, 농업
미얀마	7.0%	4~5%	6.65%	7.50%	CMP, 숙박·관광, 중소기업
필리핀	6.5~7.5%	-1.0~0.0%	2.0~4.0%	1.75~3.75%	제조, 항공, 관광
싱가포르	-0.5~1.5%	-4~-1%	0.5~1.5%	-1~0%	관광, 항공, 리테일
태국	3.2%	-5.3%	0.5~1.5%	-1.0%	항공, 숙박, 리테일
베트남	6.8%	5.0~5.3%	4% 미만	4% 미만	관광, 항공, 제조

<표 2> 각국의 정부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치 변화

구분	총수입			총지출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증감률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증감률
브루나이	N/A			N/A		
인도네시아	2,233.2조루피아 (1,276억달러)	1,760.9조루피아 (1,006.2억달러)	-21.1%	2,540.4조루피아 (1,452억달러)	2,613.9조루피아 (1,493.6억달러)	2.9%
라오스	28조 9,970억킵 (32억달러)	20조 6,660억킵 (22.9억달러)	-30%	35조 6,930억킵 (39.6억달러)	32조 7,690억킵 (36.4억달러)	10%
한국	481.8조원 (3,931억달러)	482.2조원 (3,935억달러)	0.1%	512.3조원 (4,180억달러)	531.1조원 (4,334억달러)	2.9%
말레이시아	2,445.3억링깃 (562.7억달러)	N/A	N/A	2,410.2억링깃 (554.6억달러)	2,750억링깃 (632.8억달러)	14.5%
미얀마	25조 9,997.6억껏	N/A	N/A	31조 9,188.91억껏	N/A	N/A
필리핀	3조 4,920억페소 (689억달러)	3조 1,731억페소 (626억달러)	-9.1%	4조 1,632억페소 (822억달러)	4조 1,632억페소 (822억달러)	0%
싱가포르	N/A			1,056억싱가포르달러 (744억달러)	1,334억싱가포르달러 (939억달러)	26%
태국	N/A			3.2조바트 (969.69억달러)	4.2조바트 (1,272.72억달러)	31.25%
베트남	1,512.3조동 (653억달러)	1,400조동 (600억달러)	-10%	1,747.1조동 (755억달러)	1,800조동 (800억달러)	3%



■ 각국의 대응정책을 묻는 문항은 보건의료정책의 재원, 추가경정 여부와 그 재원의 마련, 긴급부양책의 유형과 지원 대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됨 (선택지 중복답변 허용)

-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대책의 재원 마련: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0년 보건예산 부문의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전체 예산의 재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밖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한 예비비의 활용,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 등을 언급하였음
- 추가경정예산: 인도네시아 249.2억달러(GDP 2.6% 규모), 한국 1,574억달러(1차: 954억달러, 2차: 620억달러), 말레이시아 83억달러, 싱가포르 195.8억달러, 베트남 23억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밝혔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입과 자본지출의 삭감, 국채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밝힘
-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 모든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0%의 국가들은 3개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응답하였음
- 현금지급: 8개국은 자국의 경기부양책이 현금지급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5개국은 현금지급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 응답하였고, 지급방식으로 대다수 국가들은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응답함
- 조세정책: 자국의 코로나 대응책이 세액감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와 세금이연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각 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감면을 실시하는 국가는 8개

국, 환급을 실시하는 국가는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가계지원: 9개 국가에서 자국의 가계 지원방안으로 대출제도 개편을 선택하였으며, 대출상환의 연기를 선택한 국가는 8개국, 유동성제약 완화 및 장기저리대출(Soft Loan)을 선택한 국가는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지원: 모든 응답국은 자국의 기업 지원방안으로 대출제도 개편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대출상환의 연기라 응답한 국가는 9개국, 유동성제약 완화 및 장기저리대출을 응답한 국가는 8개국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 자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방식은 장기저리대출(9개 국가)이었으며, 6개국은 임금보조, 5개국은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채택하였다고 밝힘
- 금융규제 완화: 금융규제를 완화한 부문으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부문을 선택한 국가는 7개국, 정부부처의 지출 제한을 선택한 국가는 6개국, 정부차입 제한이라 응답한 국가는 4개국, 부처별 지출보고 부문을 응답한 국가가 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규제를 완화한 부문이 없다고 응답한 국가도 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각국은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부처 및 관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속한 예산의 재배정과 지출승인을 위한 지방정부와 일선 부처와의 협력'을 꼽음

■ 한편, 각국 재무부처가 당면한 과제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추산의 어려움을 응답한 국가가 가

장 많았으며(9개국),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위한 재원조달(7개국), 정책 선택에 수반되는 정치적 타협(5개국), 대응책의 신속한 시행(5개국), 정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5개국) 등이 그 뒤를 이음

Session C. Country Updates by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Presentations

- Yolanda R. Reyes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The Philippines)
- San San Oo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Myanmar)
- Kulkanya Lekhyananda (Budget Bureau, Thailand)
- Mohd Hassan bin Ahmad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필리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우선 순위 변경, 뉴노멀 대응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조직 등의 경험을 공유함
 -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6.5~7.5% 목표치에서 -1.0~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세수 역시 원안 대비 9.1%(6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까지 관련 지출은 예산 재조정을 통해 집행하였으나, 새로운 경제활성화 패키지가 행정부 및 의회에서 승인된 후에는 정부지출 역시 원안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회는 3월 2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The

Bayanihan to Heal as One Act, Republic Act No.11469)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재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행함

- 지원 규모는 4월 23일 기준 69억달러로 1,800만 저소득 가구 보조금 지원(39억달러) 및 340만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보조(10억달러) 등이 포함됨

-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실무그룹을 조직하였으며, 해당 그룹의 제언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향후 계획 및 전략에 반영될 예정임

- 미얀마는 코로나19 피해산업 및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이자율 조정, 우발채무 발행 등의 금융정책 현황을 공유함

- 코로나19로 미얀마 경제성장률은 기존 목표치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CMP의 류산업,* 호텔업 및 관광업,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CMP(Cut-Make-Pack) 방식은 외국기업이 의류 생산을 의뢰하고 미얀마 업체는 시설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음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7개 목표, 10개 전략, 36개 정책 계획, 76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경제활성화 정책(COVID-19 Economic Relief Plan)을 도입함
 - FY2019-20 연방정부 예산의 10%를 코로나19 예방 및 방지 정책에 사용토록 조정함
 - 코로나19 피해산업 대상 무이자 대출 제공,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관광업 관련 허가서 갱신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
 - 지방정부를 통해 정규소득이 없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제공하고 공공·종교



시설과 지역 기반 인도주의 단체의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면제함

-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3차에 걸쳐 3% 인하함
- 코로나19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최대 10억짜(약 72만달러) 규모의 우발채무 발행을 허용함
- 추가적으로 관련 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보건 스포츠부에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미국 대외원조기구(USAID)의 국제원조기금 107만 달러를 투입함

■ 태국은 3차에 걸쳐 발표된 총 2조 2천억바트 규모 경기부양책의 주안점과 현금지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음

- 1,700억바트 규모의 제1차 경기부양책(2020년 3월 10일) 및 1,360억바트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책(2020년 3월 24일)은 세금정책, 중소기업 대상의 장기저리대출(Soft Loan) 및 900만 명에 대한 현금지급방안 위주로 이루어짐
- 1조 9천억바트 규모의 제3차 경기부양책(2020년 4월 7일)의 60%는 △보건, △경제·사회의 부흥, △추가 현금지급 및 △1천만 명의 농업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할당되었으며, 20%는 회사채안정기금(Corporate Bond Stabilization Fund) 조성에, 나머지 20%는 중소기업 장기저리대출에 할당
- 3차 경기부양책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인사회보장제도 밖의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1인당 3개월에 5천바트 규모로 지원계획을 밝힘

- 한편,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태국은 1조바트 규모의 정부차입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밝혔으며, 차액은 FY2020 정부부처예산 및 FY2021예산의 재배정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는 저소득 가구 및 피해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경제활성화 정책을 공유함

-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지출로 GDP 대비 18%인 2,600억링깃(약 60억달러)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4배 규모임
- 경제활성화의 3대 방향은 국민 보호, 기업 지원, 지속적인 공공사업 시행임
 - 정부는 100억링깃(약 23억달러)으로 하위 40% 가구 대상에 현금 지원함
 - 기업에 고용 안정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 재정자금 역시 지원함
 - 소규모 인프라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Session D. Country Cases

Presentations

- Kyungchul Na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Korean Fiscal Responses to COVID-19: Up to the 6th Measure
- Nguyen Minh Tan (Ministry of Finance, Vietnam),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mpact of COVID-19 in Vietnam
- Heru Wibowo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한국은 그간의 예비비, 1·2차 추경, 금융안정 지원, 실물대책 등 245조원 규모의 입체적·선제적 정책 대응 경과를 공유함

- 한국은 중국 이외에 가장 빠르게 확진자가 발생 하였으나 현재는 소강상태임
 - 이는 발생 초기 빠른 보건·의료 관련 예산 확대와 더불어 조기진단(Test), 동선 파악(Trace), 의료서비스 및 시설 지원(Treat) 등 3T 정책 시행의 효과임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제 활동 위축이 발생함
 -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GDP 대비 -1.4%로 예측되며, 3월 기준 약 19만 5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1.7%, 6.8% 하락함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2/12)부터 2차 추경(4/6)까지 6차에 걸쳐 총 245조원(GDP 대비

12.4%) 규모의 재정종합대책을 시행하였음

- ① 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② 민생·금융안정패키지(135조원), ③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④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의 추가보강대책(41조원) 등 4개 범위로 분류됨

※ 2020년 총예산은 512조 3천억원임

-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응은 1·2차 추경,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선결제·선구매 등에 포함 되어 있음

① 1차 추경: 총 11조 7천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 지원(2조 4천억원)과 피해 극복·생활안정 지원(8조 8천억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4조 1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장려금 지원(3조 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 2천억원)로 세분화

②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총 135조원 규모로 기업 유동성 지원(19조 4천억원)과 금융시장 안정화(32조 6천억원) 등 기업 지원책을 포함함

③ 선결제·선구매: 총 3조 3천억원 규모로 공공 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를 도입 및 시행하고 정부·공공투자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며,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함

④ 2차 추경: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

- 발표자는 이러한 정부 대응을 ① 1998년 IMF 금융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선제적, 종합적, 목표 중심적 정책 시행, ② 새로운 환경에서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 시행



(예: 선결제·선구매), ③ 사회적 토의를 통한 주요 정책 결정(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으로 평가함

■ 베트남은 국가 내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그로 인한 현재까지의 경제적인 영향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공유함

- 베트남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3일 이후 3월 중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4월 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됨
 -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2020년 1월 23일 이후 3월 초까지 16명의 확진자 모두 완치된 상태였으나, 3월 6일에 해외에서 입국한 17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3월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
 - 베트남 국무총리는 지침(Directive No. 16/CT-TTg)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함
 - 2020년 4월 24일 기준 베트남의 확진자 수는 271명이고, 이 중 완치자는 232명, 나머지 39명은 치료 중임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위생개념을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등교를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위험자의 격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의료장비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을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식품과 소비자제품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의 2020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6.8%의 절반에 해당되는 3.82%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2.66~2.80%에서 5.56%로 증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사슬과 무역에 차질이 생기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감소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입/수출, 관광, 식당 및 숙박, 의료, 교육, 일자리 관련 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입은 1.9% 감소하였으며, 15만 3천 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20년 GDP 성장률은 6.8%에서 5~5.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목표치와 같은 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① 조세정책: 총 1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다양한 세금 납부기한과 토지이용료 납부기한을 유예 또는 연장해주기 위한 규모가 80억달러 정도로 추산됨
 -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감면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② 사회보장정책: 총 30억달러 규모로 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당자에게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고용계약이 연기되거나 휴직이 강요된 직장인(매달 1인당 180만동 지급), 실업자(매달 1인당 100만동 지급), 사회보장 수혜자(매달 1인당 50만동 지급), 연간 소득이 1억동 이하인 가구(매달 1가구당 100만동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 사업체(무이자 대출 제공), 저소득 가구(매달 1인당 25만동 지급)
 -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지출이 증가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5.3%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석유가격의 하락(연평균 30~35달러 수준), 기업과 가구 지원을 위한 세입정책 조정,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법인화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2020년도 정부수입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과 성장, 채무 원리금 상환과 사회보장 지원을 위한 자본예산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퇴치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총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수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지출 삭감을 단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자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베트남은 2020년도 정부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공공투자계획을 시행하여 경제부양을 도모할 것임
 - 국내외 행사와 워크숍에 배정된 예산을 약 20% 삭감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코로나19 예방 및 퇴치, 사회보장, 그리고 예산균형을 위해 활용할 예정임
 - 이와 동시에 ADB, IMF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되는 낮은 금리의 용자를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피해와 영향을 완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함
-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PMI 지수는 27.5 하락하였으며, 서비스부문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월에 1만 2,703편의 항공이 취소되어 2,070억 루피아의 타격을 받았으며, 여행객이 6,800명 감소하고 6천개 호텔의 객실점유율이 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량은 3.7% 감소하였으며, 일시해고 등으로 약 200만 명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는 3차례에 걸쳐 총 GDP 2.5% 규모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발표하였음
 - 제1차: 8조 5천억루피아 규모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노동집약 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
 - 제2차: 22조 5천억루피아 규모의 제2차 계획안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지시키고 원활한 수출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비재정적 부




양책, 금융부문 관련 정책으로 구성

- 제3차: 405조 1천억루피아 규모로, 인도네시아는 지출의 증가로 인한 적자폭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인 Perppu No.1 of 2020을 통해 보건부문과 경제·금융부문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발표하였음
- 가장 큰 규모인 제3차 경기부양책은 Perppu No.1의 원칙에 따라 보건, 산업, 경제, 사회보장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구성됨
 - Perppu No.1의 재정정책상 원칙: 예산 적자 조정, 대체예산 재원의 사용, 예산의 재배정 및 조정, 마을기금의 조정,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원 조달, 조세인센티브,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지속성을 위한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 시행
 - Perppu No.1의 금융부문 정책상 원칙: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의 권한과 범위 확대, 장기국공채 매입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리스크를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관 및 금융서비스기관의 권한 강화, 금융문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 강화
 - 보건부문(75조루피아):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6개월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테스트키트, 환기장치 등의 의료장비 및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원
 - 산업지원 부문(70조 1천억루피아): 조세 및 수입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
 - 경제회복 부문(150조루피아): 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을 지원

- 사회보장 부문(110조루피아): 빈곤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전기이용료, 주거이자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금지급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총지출의 지방이전 및 마을기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재배치하고 재배정할 계획이라 밝힘
 - 보건부문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지출 및 상품·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지출을 감축할 계획임
 - 저소득층의 현금지급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마을기금의 최대 35%를 할당, 가구당 월 60만루피아 지원) 1천만에서 1,200만 수혜 가구수를 목표로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석 달에 한 번 지급한 것이라 밝힘
-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예산안의 수정은 불가피하며 기존 예산안보다 적자 폭이 GDP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총수입: 경기저하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 조세 혜택 부여로 인해 총수입은 기존 예산안이었던 2,233조 2천억루피아에서 1,790조 9천억루피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총지출: 보건, 사회보장,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둔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총지출은 기존 2,540조 4천억루피아에서 2,613조 8천억루피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예산적자: 예산안의 적자폭은 기존 307조 2천억루피아(GDP 1.76%)에서 853조루피아가

(GDP 5.07%)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을 완화하고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언급한 재정 정책 이외에도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음
 - 통화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7DRR) 인하,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삼중 개입²⁾ 강화, 루피아화와 외화의 법정준비금의 최저한도 인하, 국가발행증권의 만기 연장, 거래유형 확대, 은행 관련 규정 완화, 위생적인 화폐의 공급 등을 시행함
 - 금융정책: 중소기업의 융자/자금조달/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융자/자금조달의 구조조정을 시행함 

2) 국내비인도선물환(Domestic Non-Deliverable Forward: DNDF)시장과 현물시장에 개입하여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고, 2차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여 현지 금융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개입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3/02/triple-market-intervention-bi-buys-bonds-rupiah-to-prop-up-prices-amid-viral-rout.html> 설
 명참조, 검색일자: 2020. 5. 1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코로나19 대응 CARES Act 제정]

- 2020년 3월 27일 미국 의회는 법인 및 개인 대상 세금 감면 조항을 포함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및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함¹⁾
- 법안에 포함된 법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과 2020년의 사업이자 공제 한도가 조정 과세소득의 30%에서 50%로 확대됨
 - 기업의 식료품 기부 혹은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의 공제 한도가 과세 소득의 10%에서 25%로 인상됨
 - 현행법상 이월이 허용되지 않던 기업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 NOL)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함
 -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직원 임금에 6.2%의 요율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세의 2020년 고용주 부담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 납부 연기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연 금액의 50%,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함

- 2020년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가 지급한 적격 임금의 50%에 대해 급여세 공제 혜택이 제공됨
 - 코로나19 관련 폐쇄 명령으로 운영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에 한함
 - 추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 말에 공제 혜택이 종료됨
 - 정규직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폐쇄 명령에 의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정규직 100명 이하인 경우 모든 직원의 임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는 건강 수당까지 포함하여 1만달러²⁾이며, 2020년 3월 1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임금에 대해 적용됨
- 개인은 본 법안을 통해 다음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초과 영업손실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됨
 -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적격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금은 300달러³⁾까지 우선 공제가 허용됨

1) H.R.748 - CARES Act,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748/BILLS-116hr748enr.xml>

2)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20만원임

3)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만 6천원임

-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조정 과세소득의 최대 100%(현행 50%)까지 공제가 허용되고, 공제액 초과 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나, 감염 및 단축 근무, 보육, 휴업 등 코로나19나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기타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곤란을 겪는 개인 운영 사업체들에 대해 퇴직연금 관련 혜택이 제공됨

- 최대 10만달러⁴⁾까지 퇴직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며, 조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3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함

- 또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하는 퇴직연금 대출의 한도액이 현행 5만달러⁵⁾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되고, 대출 기한 역시 기존 5년에서 연장 가능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2020년은 최소인출액(RMD) 조건이 면제됨

- 72세 이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미국 - 혼성 계약 과세 관련 최종 규정 발표]

- 2020년 4월 8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혼성 계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 TD9896을 최종 발표함⁶⁾

- 미국과 외국 관할권의 세법에 따라 거래 또는 실체가 다르게 취급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침

- 양 국가에서 동일한 공제가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중 연결 손실(dual consolidation losses) 및 사업체의 세금 분류 규칙들에 대해 다룸

- 특정외국법인(CFC)으로부터 국내 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혼성 공제
- 외국법에 따라 공제 혹은 기타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에 대한 도관금융 규정
- 특정외국법인(CFC) 및 주주의 글로벌 무형자산에 대한 저울 과세(GILTI) 조항에 따른 특정 지불 실격 처리에 관한 규칙

- 이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특정외국법인(CFC)으로부터 받은 혼성배당금에 대한 공제와 혼성 단체나 혼성 거래에 대한 이자 및 로열티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4)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2,195만원임

5)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098만원임

6) United States - Regulations on hybrid arrangements, conduit financing and dual consolidated losses issued (09 Apr. 2020), News IBFD



[포르투갈 - 2020년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

■ 2020년 3월 31일 포르투갈은 2020년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를 통해 2020 예산안의 조치들을 시행함⁷⁾

■ 개인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국외 연금 과세 내용이 추가되고, 부양가족 관련 조항이 개정됨

- 신규로 등록하는 비거주자(Non-habitual Residence, 이하 NHR)가 수령하는 원 소득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국외 연금(pension)에 대해 10%의 고정 세율을 도입함
 - 잔여소득에 국외 연금을 합산한 금액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음
 - 이미 NHR로 등록되었거나, 발효일 현재 NHR 등록 유보 중이거나, 세금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여 2021년 이내에 NHR 등록 예정인 사람들은 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두 번째 부양가족에 대해 300유로,⁸⁾ 그 이후로는 150유로⁹⁾인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양가족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됨
 - 기존에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2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음

-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는 자가 취득한 고용 및 서비스 수입은 사회적 지원 기준(social support index) 가치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감면 조항이 확대됨

-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매출액이 1만유로¹⁰⁾에서 1만 2,500유로¹¹⁾로 인상됨
- 기존의 디젤, LPG,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에 적용되던 50% 비용 공제가 휘발유까지 확대되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휘발유 비용 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됨
- 심리 상담 및 수화의 포르투갈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노인, 어린이 및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가정 간호 서비스와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화 지원 서비스가 6%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됨

■ 대출 신청자가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수 가치가 최소 5백만유로¹²⁾인, 오로지 현금 흐름 적자 충당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계열사 간 대출은 최대 1년간 인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인지세법에 추가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7) Portugal - Budget for 2020 - amendments made by budget law (02 Apr. 2020), News IBFD
 8)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9만 8천원임
 9)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만 9천원임
 10)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27만원임
 11)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658만원임
 12) 2020. 4.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6억 3,380만원임

[아일랜드 - 코로나19 관련 R&D 초과 공제 세액 조기 환급]

- 2020년 4월 1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위기와 관련하여, R&D 초과 공제 세액 조기 환급에 대한 조치를 발표함¹³⁾
 - 아일랜드는 세금통합법 Section 766에 근거하여 R&D 초과 공제 세액을 3회로 나누어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지급 예정 세액에 대해 각 분할 지급 예정일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¹⁴⁾
- 국세청 온라인서비스(ROS)의 MyEnquiries를 통해 신청하며, 조기 지급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신청 시 환급금이 기재된 2019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금 신고서 제출을 촉진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벨기에 - 코로나19 관련 법인세 선납 공제 혜택 일부 확대]

- 2020년 4월 3일 벨기에 세무 당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소득세 선납 지불에

<표 1> 2020년 벨기에 법인세 선납 공제 비율

구분	납부일	배당금 미지급 법인	배당금 지급 법인
1분기	2020년 4월 10일	9%	9%
2분기	2020년 7월 10일	7.5%	7.5%
3분기	2020년 10월 10일	6.75% (기존 6%)	6%
4분기	2020년 12월 20일	5.25% (기존 4.5%)	4.5%

출처: PWC 홈페이지 및 피트 내용 정리, <https://taxsummaries.pwc.com/belgium/corporate/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0. 4. 28.

대한 공제율을 일부 변경함¹⁵⁾

- 벨기에는 최종 법인세 산출 시 매년 변동되는 요율의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선납 지불을 통한 공제 혜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음
- 공제 요율을 반영한 최종 세액이 선납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상환받거나 다음 연도의 선납 세액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추가 세액을 납부함¹⁶⁾

- 2020년 벨기에의 법인세 할증 요율은 7%이며, 법인세 선납 시 배당금 미지급 법인의 2020년 3분기 및 4분기 공제 요율을 각각 0.75%씩 인상함
 - 변경된 요율은 2020년 3월 12일에서 12월 31일 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며,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축소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13)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562020.aspx>
 14) Deloitte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ie/en/pages/tax/articles/urgent-revenue-update-to-r-d-performing-companies.html>, 검색일자: 2020. 4. 20.
 15)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adjusted percentages for advance payments published (06 Apr. 2020)
 16) PWC 홈페이지, <https://taxsummaries.pwc.com/belgium/corporate/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0. 4. 28.



[네덜란드 -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 조치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4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Decree No. 2020-6767)을 관보에 게재함¹⁷⁾

- 2020년 3월에 발표한 정부 조치 중 본 법령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만을 기술함¹⁸⁾
 - 기존 정부 조치는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 위 법령 중 새로운 조세 관련 조치 부분은 다음과 같음

- 납부의무가 발생한 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감면함
 - 납부세액은 네덜란드 조세징수법상 가산세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될 것이고 감면세액은 선납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임
- 위 법령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관련 행정적 의무해태에 관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 않음
 - 법령은 신입사원의 신원 확인 의무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 고용주 및 근로자의 행정의무 불이행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속히 시정이 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적격 기관으로 간병인 등을 파견하거나, 무료 의료 지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적격 기관에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요양원 등 노인요양기관 등이 해당됨

- 독일 근무 네덜란드 거주자가 독일에서 지급받는 단축근무보상제도 지원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함

- 독일-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네덜란드는, 위 지급금이 연 1만 5천유로¹⁹⁾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과세권을 가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프랑스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간 동안 기업이 기관과 관청에 무상 증여한 마스크 등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산입되지 않는다고 발표함²⁰⁾

- 기업이 마스크, 손 세정제, 호흡기와 같은 의료용품을 병원, 양로원, 장애 및 만성 질병 환자를 위한 사회단체와 같은 기관, 국가 또는 지방 관청에 무상 증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산

17) News IBFD, Netherlands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new decree published, 2020.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17_nl_2, 검색일자: 2020. 4. 20.

18) 네덜란드 정부의 2020년 3월 발표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3호, 2020 참조

19) 2020. 4. 2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94만원임

20)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311-PGP?branch=2>, 검색일자: 2020. 4. 18.

입되지 않음²¹⁾

-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간이 끝나는 2020년 5월 24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프랑스 세법 273D조에 의하면 기업이 무상 증여하거나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다시 산입되나 예외적으로 그 물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예외의 범위를 넓힌 것임²²⁾
- 무상 증여를 받은 기관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무상 증여를 한 기업은 증여 날짜, 수증자, 증여 물품, 수량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프랑스 -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지침 발표]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23일 및 2020년 3월 30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적용 범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침 초안을 발간함²³⁾
 - 지침 초안은 주로 과세 대상 서비스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23일까지 공개협의의 대상이 되므로 최종 지침이 발간되기 전에 수정될 수 있음²⁴⁾

- 지침 초안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납세자는 추후 지침 초안이 수정되더라도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프랑스는 2019년 7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여 특정 디지털서비스로부터의 매출에 대한 3% 단일세율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였고²⁵⁾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절차에 대한 첫 번째 지침 초안을 발간하였음
- 디지털서비스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고 둘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가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넷째, 기업의 매출이 일정 적용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사용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며 운영자가 소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은행 간 결제시스템과 같은 금융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IP주소, 지리적 데이터 또는 다양한 트래킹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

21) France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extension of procedural time limits gazetted (31 March 2020), News IBFD
 22) France Clarifies Tax Treatment of Mask, Sanitizer Donations(April 9, 2020), Bloomberg Tax : Law
 23)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298-PGP>, 검색일자: 2020. 4. 21.
 24)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ance-issues-comprehensive-draft-guidance-on-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4. 21.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2019, pp. 71~73.



가 프랑스 내의 기기를 통하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함

-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서의 소득을 연 중 일부 기간 동안만 얻었다거나 서비스 사용자가 프랑스에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득은 산입됨
- 글로벌 총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 및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 이상인 기업이 그 적용 대상이고 프랑스 내의 매출 기준 판단 시에는 프랑스 실질 요율(French Presence Ratio)을 적용하여 판단함
- 프랑스 실질 요율이란 각 과세 대상 서비스 사용자 전체에 대한 프랑스 사용자들의 비율임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고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는 연기됨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나 디지털서비스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6년임
- 디지털서비스세는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나 지침은 2020년 12월까지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를 연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와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 유예는 OECD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2019년 미국이 디지털서비스세의 실행에 반대하며 보복적 관세를 예고하는 등 국제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독일 - 코로나19 관련 투자세법 적용 요건 완화 지침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4월 9일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세액 경감이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침을 발표함²⁶⁾
- 투자세법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투자펀드의 증권 투자 비율이 51% 이상이면 증권펀드(Aktienfonds)의 자격을 충족하고 증권 투자 비율이 25%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혼합펀드(Mischfonds)의 자격을 충족하며 과세연도 동안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함^{27), 28)}
- 투자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펀드의

26)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Investmentsteuer/2020-04-09-investmentsteuerliche-massnahmen-zur-beruecksichtigung-der-wirtschaftlichen-folgen-der-COVID-19-pandemie.html?jssessionid=489473EED0901C9C80382A7B90256781.delivery1-replication, 검색일자: 2020. 4. 28.

27)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ttp://www.gesetze-im-internet.de/invstg_2018/_2.html, 검색일자: 2020. 4. 28.

28)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clarifications on application of Investment Tax Act issued(15 April 2020), News IBFD

경우 투자 지분의 30%가 면세되고 특히 사업 자산의 일종으로 투자 지분을 보유한 개인은 투자 지분의 60%,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투자 지분의 80%가 면세되며 동조 제 2항에 따르면 혼합펀드의 경우 증권펀드에 적용되는 각 면세 비율의 50%만 면세됨

- 자격 요건 산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연도 동안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위 20일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오스트리아 - 코로나19 관련 긴급 법안 승인 및 특별 조치 발표]

- 오스트리아 의회는 2020년 4월 4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면세, 경감 혜택 등 긴급 조세 조치가 포함된 법안을 승인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됨²⁹⁾

-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기업이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및 보너스는 3천유로를 한도로 하여 면세됨³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등 통근 횟수가 줄어든 통근자들에 대한 통근 비용 소득 공제, 여행세 공제 등 경감 혜택을 유지함³¹⁾
- 코로나19를 위한 공공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면세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서나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 은퇴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에 의료 행위 포기로 인하여 인하되었던 세율과 같은 혜택은 유지됨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4월 14일 지역 내 공급을 위한 호흡기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0%로 인하함³²⁾

- 호흡기 마스크의 지역 내 구매 및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0%로 인하하고 금전 등록 시스템에 인화된 세율을 미리 등록 및 설정해 놓아야 청구서 및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없을 것임
-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법안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³³⁾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29) Österreichs digitales Amt,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20_I_23/BGBLA_2020_I_23.pdf, 검색일자: 2020. 4. 23.
 30)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april/finanzielle-unterstuetzungen-.html>, 검색일자: 2020. 4. 23.
 31)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gazetted(9 April 2020), News IBFD
 32)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april/keine-umsatzsteuer-auf-schutzmasken.html>, 검색일자: 2020. 4. 23.
 33)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VAT exemption for respirator masks(16 April 2020), News IBFD



[룩셈부르크 - 강제적 보고 규정 법안 관보 게재]

■ 룩셈부르크 의회는 2020년 3월 21일 조세분야의 강제적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no. 7465)을 승인 하였으며 이는 2020년 3월 26일 관보에 게재됨³⁴⁾

- 이 법은 강제적 보고 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irective 2018/822)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³⁵⁾
- 역외조세약정(Les Dispositifs Transfrontières)과 관련된 정보 보고의무, 통신방법,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조사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안은 초안과 달리 직업상 비밀 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경우 일정한 정보를 다른 중개인 및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감사에게도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는 강제적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강제적 보고의무의 면제는 룩셈부르크 법이 규율하는 직업적 범위 내의 행동에만 적용됨

- 중개인은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역외조세약정의 첫 번째 단계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과 관련된 다른 중개인에게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다른 중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납세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함
 - 관련 납세자는 신고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홍콩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홍콩 정부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³⁶⁾

- 2019/20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함
- 따라서 법인소득세 신고는 2020년 5월 4일경에 오픈하며,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0년 6월 1일에 오픈함

34)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http://www.legilux.lu/eli/etat/leg/loi/2020/03/25/a192/jo>, 검색일자 : 2020. 4. 20.

35) Luxembourg - Directive on mandatory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field of taxation in relation to reportable cross-border arrangements - bill adopted by parliament and gazetted(31 March 2020), News IBFD

36)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n/Documents/tax/deloitte-cn-tax-hk-relief-measures-en-200409.pdf>, 검색일자: 2020. 4. 28.

-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됨
- 2018/19 사업연도의 급여세, 사업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함
 - 첫 번째 납부를 완료한 사업자 및 개인은 두 번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018/19 사업연도의 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신고 시 무이자 할부 납부기한을 연장함
 - 모든 법인은 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상 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로열티 수입, 기타소득 등에서 사업상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간략하게 계산한 예상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함³⁹⁾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을 직전 3개 사업연도 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함

[싱가포르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3월 26일, 4월 4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³⁷⁾
-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발표한 세법상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³⁸⁾
 -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1만 5천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25% 감면함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며 연장된 주요 기한은 아래와 같음
 - 개인소득세 및 파트너십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8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클럽, 신탁, 협회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2020년 1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ECI의 신고기한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2020년 3월 말의 GST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11일로 연장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3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IRAS-Extends-Tax-Filing-Deadlines-Taxpayer-Counter-Services-by-Appointment-Only/>, 검색일자: 2020. 4. 20.
 38) Singapore - COVID-19 pandemic: additional tax measures announced (27 Mar. 2020), News IBFD
 3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Estimated-Chargeable-Income-ECI/Definition-of-Estimated-Chargeable-Income-ECI-and-When-to-File/>, 검색일자: 2020. 5. 6.



[일본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경제조치를 발표함⁴⁰⁾

- 경제 조치에 포함하여 발표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일 년간 연기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2020년 2월 1일 이후로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세금을 일시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대상 세목은 국세 및 지방세(인지세 제외)이며,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임
 - 과거에 확정된 세액이지만 미납된 금액에도 적용됨

■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함

-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확대함
- 단,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대기업의 100% 자회사는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규정은 2020년 2월 1일 및 2022년 1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적용되며,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100% 상각 혹은 7% 세액공제를 적용함(단, 자본금이 3천만엔 이하인 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

-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규 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며, 재경부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함
- 세액공제 혜택은 기타 공제와 합하여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허용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일정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 법인은 소비세 환급 여부 신청(JCT Taxpayer Status Election) 내역을 변경할 수 있음

- 소비세 환급 여부를 신청한 법인에 한하여 소비세 환급이 적용되며, 기존 소비세 환급 여부 신청 방식은 과세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고 최소 2년간 변경할 수 없음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한 달 이상 매출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내용을 철회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업에 대해 아래의 기타 조세 혜택을 적용함

- 특별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40)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tax/articles/bt/japan-inbound-tax-alert-15april2020.html>, 검색일자: 2020. 4. 28.

- 재산세 및 도시개발세 과세표준을 감면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인도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경제적 폐쇄 조치에 따른 경제정책을 발표함⁴¹⁾

-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에 대한 조세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득세, GST, 관세의 각종 기한을 연장하고, 납부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경감함

- 2018/19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함
- Vivad Se Vishwas Scheme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Vivad Se Vishwas Scheme이란 인도 정부가 직접세와 관련된 계류 중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납세액,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함⁴²⁾
- 원천징수(Tax deduction at source) 납부기한은 연장하지 않지만, 지연납부 시 기존 18%에서 9%로 경감된 지연이자를 부과함

- 예납세액,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물품거래세 등 납부에 대한 각종 지연이자를 9%로 경감함
- 5천만 루피 이하 매출액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의 GST 신고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5천만루피 이상 매출액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GST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기존 18%에서 9%로 경감된 지연이자를 부과함
- 소득세법, 재산세법, 자금세탁방지법, 증권거래세법, 물품거래세법, 균등세법, Vivad Se Vishwas Scheme, GST법, 관세법에 관련한 모든 고지, 승인, 제재조치, 항소, 신청, 보고 등의 법정 기한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29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일괄 연장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호주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호주 국세청은 2020년 3월 3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조세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41) Ind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announced (25 Mar. 2020), News IBFD.
 42) PWC, <https://www.pwc.in/tax-and-regulatory-services/vivad-se-vishwas.html>, 검색일자: 2020. 5. 6.



를 간편법(shortcut method)에 따라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함⁴³⁾

- 재택근무가 필요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 가능한 추가 비용은 아래 항목에 해당함
 - 근무장소의 난방, 냉방 등 전기요금
 - 근무장소의 청소비용
 - 핸드폰 및 인터넷 통신비용
 - 프린터 잉크, 복사용지 등 컴퓨터 부속 소모품
 - 컴퓨터, 프린터, 핸드폰, 가구 등 비품(단, 300호 주달리 한도 이내)
- 실제 사용금액, 고정률법, 간편법에 따라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고정률법은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등에 업무와 관련한 일정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추가 비용으로 보아 공제함
 - 간편법은 근무 시간당 80센트를 재택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보아 공제함

■ 국세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에 적용되는 질의회신을 발표함⁴⁴⁾

- 호주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 판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호주에서 이사회 등을 위하여 임원진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진이 호주에 있는 것으로 판정하지 않음
- 외국법인의 직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호주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일시적 혹은 장기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GST 및 사업등록을 해제할 필요가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뉴질랜드 -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정책을 추가 발표함⁴⁵⁾
 - 정부는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대비하여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함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사항

43) 호주 국세청, ato.gov.au/General/COVID-19/Support-for-individuals-and-employees/Employees-working-from-home/, 검색일자: 2020. 4. 28.

44) Australia - COVID-19 pandemic: suspension of residence and PE determination and other tax matters - FAQ published (06 Apr. 2020), News IBFD.

45)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Updates/News-Folder/covid19-business-changes>, 검색일자: 2020. 4. 28.

은 아래와 같음

- 신고 및 납부기한에 재량권을 두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
- 결손금 합산공제 시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020년 하반기 개정될 예정임
- 2020/21 사업연도 이후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3월 이전 법안을 통과하고자 함

■ 임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2020년 4월 27일부터 도입함

- 2019/20 사업연도 및 2020/21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은 결손금을 직전 1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2020년 하반기에 논의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OECD - 코로나19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대응 보고서 발표]

■ OECD는 2020년 4월 15일 G20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도입된 긴급 조세/재정 정

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함⁴⁶⁾

- 각국의 정부들은 조세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은 주로 기업의 현금흐름 확보, 가계 및 고용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한 조세 및 재정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⁴⁷⁾

- 세금 신고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 유예 허용
- 세액 분납의 경우 납부 차수 및 상환 기한을 유연화함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한 환급세액 조기 지급 및 환급 범위 확대
- 사회보장 기여금·급여세·재산세 등 특정 세액 감면
-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근로보조금 지급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범위 확대
- 특정 가구 대상 현금 보조금 제공 등

■ 위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봉쇄 및 완화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넓고 강력한 조세정책적 조치의 필요

46) News IBFD, OEC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OECD publishes tax and fiscal policy responses report, 2020. 4. 16.(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16_o2_2, 검색일자: 2020. 4. 20.)

47) OECD는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을 통하여 회원국의 납세자 지원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음.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478-29c4rprb3y&title=Tax_administration_responses_to_COVID-9_Measures_taken_to_support_taxpayers, 검색일자: 2020. 4. 20.

이에 따르면 각국의 세정지원 정책은 크게 아래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됨

- ① 기간 또는 기한 관련 조치: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 연장, 가산금 및 가산세 면제, 납부 유예, 분납 허용, 체납처분 유예 등
- ②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
- ③ 감사 정책 관련 일시적 조치 및 조세 확실성 신속 제고 방안
- ④ 납세자 서비스 및 의사소통 증진 방안



성을 강조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 동안은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정책은 가구소득 증대, 고용 안정화, 중소기업 사업 수요 최우선 등을 통하여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특히 조세정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관련 정책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⁴⁸⁾
 - 단, 코로나19 이후의 조세제도는 재정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때에도 조세제도 조정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도 덧붙여 강조하고 있음⁴⁹⁾
 - 원격 근무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디지털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과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관한 긍정적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국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과 투자 촉진 정책을 동시에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조세 분쟁, 무역 분

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세 협력이 중요해짐

- 디지털세 관련 조세 확실성 강화를 위하여 조세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 논의가 현재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은 위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OECD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세조약 지침 발표]

- OECD는 2020년 4월 3일 역외거래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⁵⁰⁾
 - 본 지침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조세조약에서 국외 근로자가 고용된 당해 국가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거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게 된 경우를 주된 문제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 창설 문제, 기업의 납세지 변경 문제, 국외 근로자들 관련 문제,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함

48)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p.6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8_128575-06raktc0aa&title=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 검색일자: 2020. 5. 6.

49)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p.6, 42-43.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8_128575-06raktc0aa&title=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 검색일자: 2020. 5. 6.

50) News IBFD, OECD - COVID-19 pandemic: OECD Secretariat releases 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 2020. 4.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06_o2_2. 검색일자: 2020. 4. 20.); OECD, OECD Secretariat Analysis of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2020. 4. 3.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237-vsdagpp2t3&title=OECD-Secretariat-analysis-of-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Crisis. 검색일자: 2020. 4. 20.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새로운 고정사업장이 창설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음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근무지 소재국이 아닌 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함
 -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 소재국에서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이 창설될 가능성이 있음
- 재택근무지는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창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재택근무지를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장소가 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장소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다만 물리적 실재 존재 여부에 관한 최저 기준은 조세조약보다 각 국의 내국세법에서 더 낮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OECD는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에 관하여는 두 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음
 - 첫 번째 사례는, 개인이 일시적으로(휴가 또는 단기 출장) 기존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류가 장기화되어 해당 체류국의 법률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임
 -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이 한 국가(현재의 거주국)에서 근무하여 법률상 거주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전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임
 - OECD는 위 두 경우를 특수 상황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임시체류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1천억유로의 일자리 및 기업 지원책 “SURE initiative” 발표(2020. 4. 2.)¹⁾

-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회원국들에 총 1천억유로의 차입 지원
 - SURE 프로그램은 단시간 근무 제도를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소득 감과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일자리, 근로자, 자영업자를 보호)을 지원
 - 기업 및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게 되므로 업무시간 조정 및 업무 중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됨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대체(income replacement)를 지원

■ 유로그룹(Eurogroup)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회원국 지원을 위해 5천억유로 규모의

구제 대책에 합의(2020. 4. 9.)²⁾

※ 지난 3월 26일 EU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제책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유로그룹(EU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

- (첫 번째 안전망-근로자 및 자영업자) 개별 국가 차원의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보호에 대한 부담이 일부 국가들에서 높아지고 있으므로 “SURE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1천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지원
- (두 번째 안전망-기업) 이동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에서 2천억유로 대출을 보장하여 유동성을 확대
- (세 번째 안전망-회원국) 2019년도 말 회원국 GDP의 2%에 해당되는 2,400억유로 규모의 ‘팬데믹 위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³⁾를 통해 지원
- (경과) 4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본 EU 구제 대책이 승인되었으며, EU 정상들은 집행위에 2020년 6월 1일까지 구제 대책 패키지가 운영될 것을 요구

■ EU 집행위, 코로나19 봉쇄 조치 철회에 관한 유럽 차원의 공통 로드맵 제시(2020. 4. 15.)⁴⁾

1) “Coronavirus: the Commission mobilises all of its resources to protect lives and livelihood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582

2) “Eurogroup puts forward € 500 billion support package”,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20/04/07-0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4/09/remarks-by-mario-centeno-following-the-eurogroup-videoconference-of-9-april-2020/>

3) 2012년 유로지역 채무 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제 금융기구

4) “Coronavirus: European roadmap shows path towards common lifting of containment measur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652

- (배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EU 차원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 회원국 차원에서 국경 통제 강화 등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해옴
 - 지난 3월 17일 EU집행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EU 여행에 대해 30일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4월 8일 동 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
- (경과) 일부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은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
 - (제한 조치 완화) 독일은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스페인,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완화 예정
 - (제한 조치 유지) 프랑스는 이동제한 조치를 5월 1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영국 역시 이동 제한 조치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필요성)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 보호의 이익과 사회경제적 이익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통 기준을 통해 회원국 간의 조율이 중요
- (철회시기) 봉쇄를 완화할 시기에 대한 결정은 아래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함
 - (역학적 기준) 일정 기간 질병의 확산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안정된 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충분한 의료 시스템) 집중 치료실의 점유율과 의료 종사자·의료 장비 등 충분한 의료시스템 확보
 - (적절한 진단 능력) 대규모의 감염자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진단 능력과 추적 기술의 구축
- (유럽 차원의 공통 체계) 봉쇄 조치의 철회 시기와 형식은 회원국마다 다르지만 아래 사항에 기초한 공통의 체계가 필요
 - 제한 종료는 공중 보건 이익과 사회경제적 영향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인지
 -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조정이 필요
 - 회원국들은 봉쇄 철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소한 다른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존경과 연대를 유지해야함
- (기타 조치) 봉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아래와 같음
 - 확진자 보고 및 접촉자 추적 시스템 개발
 - 추적 시스템의 일환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한 앱을 통해 위치 추적이 아닌 사용자 간 근접성을 측정하여 경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적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적 앱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도록 조치
 - 진단 능력을 증가시키고 시험 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조율
 - 국가 의료 시스템의 수용력을 늘리고 특히 제한 조치를 완화한 후 예상되는 감염 증가에 대비
 -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 장비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



를 유지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과 의약품을 개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백신 도입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

- (유로지역) 2019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47.1%로 2018년 대비 0.1%p 증가, 정부수입 비율은 46.5%로 전년과 동일

- (EU 27개국) 2019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46.7%로 2018년 대비 0.1%p 증가, 정부수입 비율은 46.2%로 전년과 동일

■ EU 통계청, 2019년 재정통계⁵⁾ 발표(2020. 4. 22.)^{6), 7)}

● (수입·지출) 2019년 유로지역⁸⁾과 EU⁹⁾ 27개국의 전년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증가(GDP 대비 각각 0.1%p)했으나, 정부수입 비율은 동일

● (재정수지)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은 모두 0.6%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0.1%p, 0.2%p 증가

<표 1> 2019년 유로지역(19개국) 및 EU(27개국)의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유로지역(19개국)				
재정수지	-1.5	-1.0	-0.5	-0.6
정부지출	47.7	47.2	47.0	47.1
정부수입	46.2	46.2	46.5	46.5
정부채무	90.0	87.8	85.8	84.1
EU(27개국)				
재정수지	-1.3	-0.8	-0.4	-0.6
정부지출	47.3	46.8	46.6	46.7
정부수입	46.0	46.0	46.2	46.2
정부채무	84.0	81.6	79.6	77.8

주: 유로지역(Euro ar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출처: Eurostat, Euro area and EU27 government deficit both at 0.6% of GDP, 2020. 4. 22.

5) EU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적용을 위해 EU 통계청(Eurostat)은 회원국이 발표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수지[일반정부 순차입(순용자)]과 정부 채무(일반정부 총채무로 마스트리히트 채무 또는 EDP 채무로 알려짐) 통계를 제공함. 통계는 ESA 2010(European System of Accounts 2010) 기준으로 작성됨

6) Eurostat, Euro area and EU27 government deficit both at 0.6% of GDP, 2020. 4. 22.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0294648/2-22042020-AP-EN.pdf/6c8f0ef4-6221-1094-fef7-a07764b0369f>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ec00127/default/table?lang=en>

8) 유로지역: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운용되며, 경제정책은 각 회원국들의 책임하에 있으나 정부 적자 및 채무 수준에 관한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해야 함

9) EU: 유로지역 19개국과 더불어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하지 않은 8개국(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을 포함하여 총 27개국

- 2019년 국가별 재정수지는 덴마크(3.7%), 룩셈부르크(2.2%), 불가리아(2.1%), 키프로스(1.7%), 네덜란드(1.7%), 그리스(1.5%), 독일(1.4%) 등 16개 국가에서 흑자 기록
- 3% 이상의 재정적자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3.0%), 루마니아(-4.3%)임
- (정부채무) 2019년 말 기준 GDP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유로지역은 84.1%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으며, EU 27개국은 2018년 79.6%에서 77.8%로 1.8%p 감소
- 채무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GDP 대비 8.4%), 불가리아(20.4%), 룩셈부르크(22.1%), 체코(30.8%), 덴마크(33.2%) 등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채무비율이 60%보다 높은 국가들은 그리스(176.6%), 이탈리아(134.8%), 포르투갈(117.7%), 벨기에(98.6%), 프랑스(98.1%), 스페인·키프로스(95.5%) 등 14개 국가의 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IMF 총재,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브리핑 (2020. 4. 3.)¹⁰⁾

- 생명을 구하는 일(보건)과 생계 수단을 보존하는 일(경제)은 일견 상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딜레마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곧 생계수단을 보존하는 전제 조건이 됨
-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현재 IMF 75년 역사상 가장 많은 85개국이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
 - IMF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조달러 규모의 대출 여력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또한 긴급자금 지원 여력을 기존 500억달러에서 1천억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 지도자들이 긴급 자금으로 의료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호장비를 구입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지출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 IMF는 보건 지출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실업 감소, 파산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하고 있으며, 함께해야 한다고 봄
 - 보건과 경제의 딜레마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균형을 맞추는 때 비로소 긴급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1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03/vs-some-say-there-is-a-trade-off-save-lives-or-save-jobs-this-is-a-false-dilemm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03/sp040320-opening-remarks-for-joint-imf-who-press-conferenc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03/tr040320-transcript-kristalina-georgieva-participation-world-health-organization-press-briefing>



■ IMF 총재, 세계경제 전망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담화(2020. 4. 9.)¹¹⁾

- (현황) 코로나19는 엄청난 규모와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적 질서를 혼란시켰으며,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재들로 인해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
- (전망)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며(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하락 예상), 여전히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음
 - 불과 3개월 전만해도 2020년에는 160개국이 넘는 회원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현재 170개 회원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어두운 전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됨
 -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필요한 격리 조치로 인해 세계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接客업, 운송 및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
 -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전역의 신흥 시장 국가와 저소득 국가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위기에 대응할 초기 자원이 적을수록, 현재와 같이 수요와 공급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

출될 경우 재정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일부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담에 직면할 수 있음

- 지난 2개월 동안 신흥 시장 국가에서 약 1천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출이 일어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비해 3배나 큰 규모임
- 신흥 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총 외부 자금 조달 요구가 수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만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 (정책 제언) 다음의 4가지 계획(4-point plan)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함
 - 필수 격리 조치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함
 - 대규모의 시의적절한 재정정책 및 금융부문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보호해야 함
 -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염을 방지해야 함
 - 전염병 방지 조치 진행과 더불어 복구 계획도 수립해야 함

■ IMF 집행위원회, 25개국에 대해 즉각적인 채무 면제 승인(2020. 4. 13.)¹²⁾

- 코로나19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IMF는 대응의 일환으로 ‘재해 억제·부채 경감 기금(CCRT)’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07/sp040920-SMs2020-Curtain-Raiser>

1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13/pr20151-imf-executive-board-approves-immediate-debt-relief-for-25-countries>

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등 25개 회원국¹³⁾에 대한 즉각적인 채무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¹⁴⁾

- 가장 빈약하고 위기에 취약한 회원국에 향후 6개월 동안 IMF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2020년 4월 14일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이들 국가에 제공되는 초기 구호액은 1억 5,710만SDR(미화 약 2억 1,340만달러) 규모임

- 이번 지원으로 해당 국가들이 부족한 재정 자원을 보충하여, 응급의료와 기타 구호활동으로 더 많이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IMF는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은 1억 8,500만 달러, 일본으로부터 1억달러, 중국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로부터 받은 미공개 금액 등 약 5억달러의 ‘재해 억제·부채 경감 기금(CCRT)’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

- IMF 총재는 가장 가난한 회원국들이 향후 2년간 추가 채무상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타 기부국들에게 해당 기금을 증대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발

간(2020. 4. 14.)¹⁵⁾

※ 이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제1장에서 “대규모 봉쇄조치(The Great Lockdown)”를 주제로 다뤘으며, 보고서 전문은 2020년 5월에 발간될 예정임

- (기준선 가정)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염병 퇴색과 격리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가정
 - 모든 국가가 경제활동에 교란을 경험하며, 충격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2/4분기에 집중되는 것을 가정
 - 전염병 확산이 심각한 국가의 경우 2020년에 봉쇄 기간과 이후 점진적인 완화 기간 동안 약 8%의 근무일 손실을, 여타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약 5%의 근무일 손실을 겪는 것을 가정
 -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에 긴축적 금융 상황이 상반기 동안 계속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정상화 경로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가정
 - 석유 선물가격은 2020년 3월 말 시장가격 기준인 2020년 배럴당 35.6달러, 2021년 37.9달러로 가정하며, 이후 몇 년간 45달러까지 증가하지만 2019년 평균 수준인 61.4달러보다는 낮게 유지됨을 가정
- (세계경제)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염병의 결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20년에는 2008~2009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낮은 -3%를 기록할 것으로

13) 25개국은 다음과 같음. 아프가니스탄, 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상투 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솔로몬 제도, 타지키스탄, 토고, 예멘

14) 또한 몇 주 안에 4개국이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16/pr20165-board-approves-immediate-debt-service-relief-for-25-eligible-low-income-countries>

1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로 전망됨

- 2020년 하반기에 전염병이 사라지고 봉쇄 조치가 점차 풀릴 것이라 가정하는 기준선 시나리오하에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에 힘입어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 전망 대비 2020년은 -6.4%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1년은 2.2%p 상향 조정되었음
-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전염병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격리 조치로 인해 선진국 그룹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0월 전망 대비 -7.8%p, 2020년 1월 전망 대비 -7.7%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19년 10월 전망 대비 2.9%p, 2020년 1월 전망 대비 2.9%p 상향 조정됨
 - 미국(-5.9%), 일본(-5.2%), 영국(-6.5%), 독일(-7.0%), 프랑스(-7.2%)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음(-)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의 후베이성만큼 전염병 유행이 심각했으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또한 신뢰에 미친 악영향은 경제 전망에 추가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1.2%, 2021년 3.4%로 전망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건강 위기, 심각한 외부 수요 충격, 글로벌 금융 상황의 급격한 악화, 원자재 가격의 급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1.0%¹⁶⁾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19년 10월 전망 대비 -5.6%p, 2020년 1월 전망 대비 -5.4%p 하향 조정된 수치임
- 3월 말 현재 전염병의 광범한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따라서 아직 발생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2020년 성장률 전망치가 현저하게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바이러스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의 국내 경제활동 교란을 반영하였기 때문
- 만약 이들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광범히 확산되어 엄격한 격리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것임
- (위험요인)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심각하게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위험이 존재함
 - 전염병 대유행은 기준선에서 가정한 것보다 더 지속될 수 있으며, 건강 위기가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바이러스 확산이 느려진 이후에도 전염에 대한 불확실성, 개선에 대한 신뢰 부족, 기업과 가계의 폐쇄 조치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야기하는 공급망의 지속적인 중단 및 총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약할

16) 단,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2020년 -2.2%로 전망

수 있음

- 물론 치료법 또는 백신이 예상보다 일찍 발견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제거되면서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도 있음
- (정책권고) 보건의료체계가 급격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차원의 목표된(targeted) 상당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필수적인 격리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여 건강 위기가 경제활동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불가피한 경제 둔화가 야기하는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 대유행이 사라진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보장해야 함
 - 경제활동의 중단이 지속되거나 제한이 해제될 때 경제활동 개선이 약한 경우 재정

조치를 확대해야 함

- (유동성 공급과 신용 보증) 중앙은행은 비은행 금융회사(특히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 요구에 일시적이면서 목표된(targeted) 신용 보증 혹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되, 재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은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함
- (부채 재조정) 감독 당국은 은행이 대출 분류 혹은 대출 제공 표준을 낮추지 않고도 차용자와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도록 권장 가능¹⁷⁾
- (외부 부문 정책) 변동환율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금융 스트레스를 제한하기 위해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약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

17)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채권자가 적격의 중소기업에 대해 페널티 없이 대출과 이자 지불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2> 세계경제 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0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9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9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세계경제	2.9	-3.0	5.8	-6.3	2.4	-6.4	2.2
선진국	1.7	-6.1	4.5	-7.7	2.9	-7.8	2.9
미국	2.3	-5.9	4.7	-7.9	3.0	-8.0	3.0
유로존	1.2	-7.5	4.7	-8.8	3.3	-8.9	3.3
독일	0.6	-7.0	5.2	-8.1	3.8	-8.2	3.8
프랑스	1.3	-7.2	4.5	-8.5	3.2	-8.5	3.2
이탈리아	0.3	-9.1	4.8	-9.6	4.1	-9.6	4.0
일본	0.7	-5.2	3.0	-5.9	2.5	-5.7	2.5
영국	1.4	-6.5	4.0	-7.9	2.5	-7.9	2.5
캐나다	1.6	-6.2	4.2	-8.0	2.4	-8.0	2.4
기타선진국 ²⁾	1.7	-4.6	4.5	-6.5	2.1	-6.6	2.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7	-1.0	6.6	-5.4	2.0	-5.6	1.8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5.5	1.0	8.5	-4.8	2.6	-5.0	2.3
중국	6.1	1.2	9.2	-4.8	3.4	-4.6	3.3
인도 ³⁾	4.2	1.9	7.4	-3.9	0.9	-5.1	0.0
아세안-5 ⁴⁾	4.8	-0.6	7.8	-5.4	2.7	-5.5	2.6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2.1	-5.2	4.2	-7.8	1.7	-7.7	1.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0.1	-5.2	3.4	-6.8	1.1	-7.0	1.0
유럽 연합 ⁵⁾	1.7	-7.1	4.8	-8.7	3.1	-8.8	3.1
저소득 개도국	5.1	0.4	5.6	-4.7	0.5	-4.7	0.4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0.9	-11.0	8.4	-13.9	4.7	-14.2	4.6
수입 - 선진국	1.5	-11.5	7.5	-13.8	4.3	-14.2	4.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0.8	-8.2	9.1	-12.5	4.0	-12.5	4.0
수출 - 선진국	1.2	-12.8	7.4	-14.9	4.4	-15.3	4.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0.8	-9.6	11.0	-13.7	6.8	-13.7	6.6
상품 가격(미 달러)							
오일 ⁶⁾	-10.2	-42.0	6.3	-37.7	11.0	-35.8	10.9
비연료(세계 상품 수출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0.8	-1.1	-0.6	-2.8	-1.2	-2.8	-1.9
소비자 가격							
선진국	1.4	0.5	1.5	-1.2	-0.4	-1.3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⁷⁾	5.0	4.6	4.5	0.0	0.0	-0.2	0.0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January 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19 World Economic Outlook

2)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1년부터 GDP는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 년으로 삼은 시장가격 기준 GDP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2020년 4월 WEO부터 영국은 유럽 연합 그룹에서 제외됨

6)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9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61.39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0년 35.61달러, 2021년은 37.87달러

7)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able 1.1. 편집

■ IMF,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제도(liquidity line) 추가(2020. 4. 15.)¹⁸⁾

- IMF 집행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새로운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Short-term Liquidity Line: SLL) 창설을 승인하였음
 - 이 제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매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국제 수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에 리볼빙 및 갱신 가능한 백스톱의 기능을 제공하며, 할당액(quota)의 최대 145%까지 회전을 제공함
 -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SLL)는 회원국의 유동성 버퍼를 더욱 강화시켜 유동성 압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 발간(2020. 4. 15.)¹⁹⁾

※ 이번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는 제1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을 주제로 다뤘으며, 보고서 전문은 2020년 5월에 발간될 예정임

- (배경) 이번 전염병의 대유행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을 수반한 세계경제의 느린 경제성장 전망을 배경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였으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전혀 없는 수준으로 높였음
 - 전염병 대유행의 인적 비용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생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전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소득 손실과 실업 및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병 대유행이 심각한 장기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 설명함
- (채무수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2018년 기준 세계 채무는 세계 GDP의 226%인 188조 달러이며, 이번 위기의 결과로 모든 경제 그룹에서 일반정부의 채무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 ([그림 1] 참고)
 - (선진국)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16년 106.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105.2%로 약간 낮아졌으나, 이번 위기의 결과로 2020년에는 급격히 높아져 12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및 중간소득 국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53.2%에 이르렀으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급격히 높아져 6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저소득 개발도상국)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비율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약 43%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위기로 역시 크게 높아져 2020년에는 4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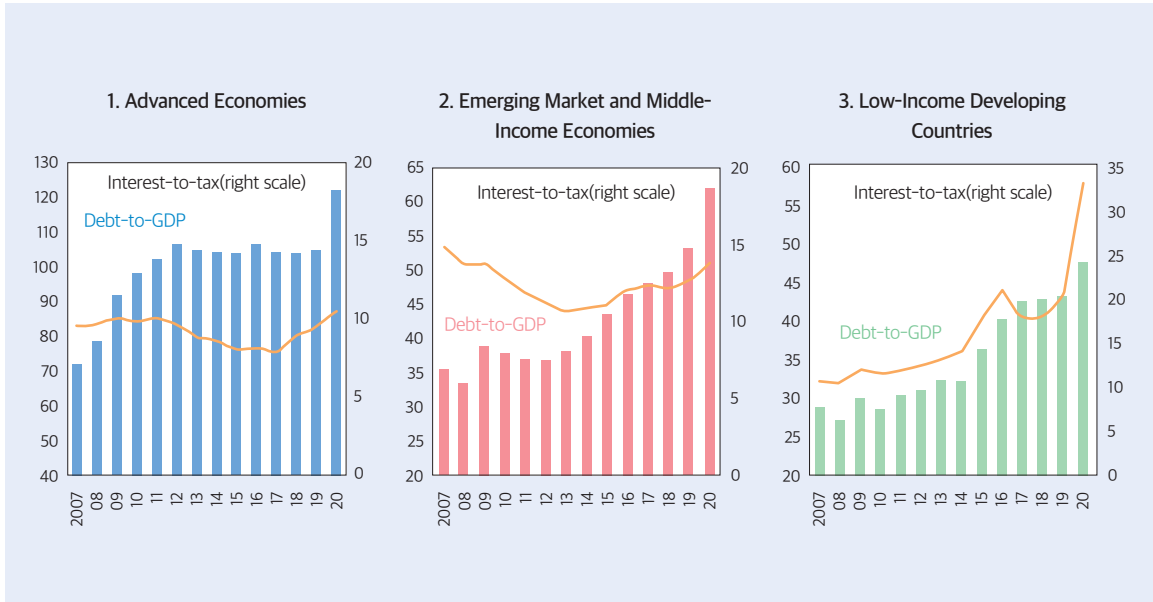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15/pr20163-imf-adds-liquidity-line-to-strengthen-covid-19-response>

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0/04/06/fiscal-monitor-april-2020>



[그림 1]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2007~2020)

(단위: %)



주: 각각 선진국(좌), 신흥시장국 및 중간소득 국가(중), 저소득 개발도상국(우)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막대그래프)과 세수 대비 이자지출(꺾은선 그래프)을 의미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 Figure 1.3.

- (위험) 광범위한 감염과 반복적인 발병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퇴보, 상품가격의 큰 변동성,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스트레스, 재개된 사회 불안,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
 - 해당 리스크들은 서로 얽혀 위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악화되고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책권고) 공급·수요·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이번 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들에 걸친 임시적이고, 시의 적절하며, 목표된(targeted)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 (재정 여력이 있는 선진국) 저금리를 활용하

- 여 회복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금 혜택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직업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약해진 잠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코로나 바이러 스 영향 완화와 더불어, 여성 노동력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됨
- (재정 여력이 부족한 선진국) 재정 여력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인 선진국의 경우, 공공 자본의 질이 약화된 분야(예: 건강 관리, 운송 인프라)에 더 많은 자본을 지출하기 위해 지출과 수입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표 3> IMF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현황(2020. 4. 1. ~ 4. 30.)¹⁾

(단위: million USD)

국가명	지원도구	지원규모	지원일자	비고
기니	ECF ²⁾	23.5	2020. 4. 1.	4차 리뷰 완료
르완다	RCF ³⁾	109.4	2020. 4. 2.	
토고	ECF	131.3	2020. 4. 3.	6차 리뷰 완료
시에라리온	ECF	21.13	2020. 4. 3.	2차 리뷰 완료
마다가스카르	RCF	165.99	2020. 4. 3.	
가봉	RFI ⁴⁾	147	2020. 4. 9.	
알바니아	RFI	190.5	2020. 4. 10.	
코소보	RFI	56.5	2020. 4. 10.	
튀니지	RFI	745	2020. 4. 10.	
북마케도니아	RFI	191.83	2020. 4. 10.	
세네갈	RCF, RFI	442	2020. 4. 13.	RCF(147.4), RFI(294.7)
가나	RCF	1,000	2020. 4. 13.	
엘살바도르	RFI	389	2020. 4. 14.	
부르키나파소	RCF	115.3	2020. 4. 14.	
니제르	RCF	114.49	2020. 4. 14.	
차드	RCF	115.1	2020. 4. 14.	
감비아	RCF	21.3	2020. 4. 15.	
파나마	RFI	515	2020. 4. 16.	
파키스탄	RFI	1,386	2020. 4. 16.	
아이티	RCF	111.6	2020. 4. 17.	
코트디부아르	RCF, RFI	886.2	2020. 4. 17.	RCF(295.4), RFI(590.8)
볼리비아	RFI	327	2020. 4. 17.	
몰도바	RCF, RFI	235	2020. 4. 17.	RCF(78.4), RFI(156.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RCF	38	2020. 4. 20.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RFI	361	2020. 4. 20.	
상투메프린시페	RCF	12.29	2020. 4. 21.	
파라과이	RFI	274	2020. 4. 21.	
코모로	RCF, RFI	12	2020. 4. 22.	RCF(4.05), RFI(8.08)
콩고민주공화국	RCF	363.27	2020. 4. 22.	
몰디브	RCF	28.9	2020. 4. 22.	
모리타니	RCF	130	2020. 4. 23.	
사모아	RCF	22.03	2020. 4. 24.	
모잠비크	RCF	309	2020. 4. 24.	
나이지리아	RFI	3,400	2020. 4. 28.	
도미니카공화국	RCF	14	2020. 4. 28.	
그레나다	RCF	22.4	2020. 4. 28.	
세인트루시아	RCF	29.2	2020. 4. 28.	

주: 1) IMF 홈페이지 게시물을 바탕으로 저자가 표로 재구성

2) 확장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 저개발국 등의 국제수지 적자 보정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국에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행하는 양허성 차관제도를 의미

3) 긴급차관제도(Rapid Credit Facility), 긴급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제공하는 차관

4)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자연재해 등 외생적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제공됨

출처: IMF, <https://www.imf.org>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선진국 대비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 사회 안전망이 덜 발달되어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의료용품 및 식품에 대한 무역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 (2020. 4. 24.)²⁰⁾

- (배경) 세계 각국이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출 제한 조치 증가로 인해 필수 의료용품 및 식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됨
 - 일자리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재촉하기 위해 열린 무역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작년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화(마스크, 장갑, 손 세정제, 산소마스크 등)의 교역 규모는 3천억달러에 달함
 - 각 정부는 해당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의료제품의 수입을 촉진을 위해 수입 관세 삭감, 통관 절차 간소화, 라이선스 승인 요건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으며, IMF

는 이러한 조치들을 매우 환영함

-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출 제한은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수출 제한 조치는 공급망(supply chain)에 지장을 주고, 생산을 저하시키며, 중요한 제품 배분에 교란을 줌
 -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를 더욱 연장·악화시키며, 특히 빈곤하고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르면 수출국이 수출 재화의 심각한 부족을 막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주의해 줄 것을 촉구
- 또한 무역 금융²¹⁾ 감소 역시 우려되는 부분임
 - 무역 금융은 필수 의료장비와 식품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함
 - IMF는 무역 금융의 과정을 추적하고, 무역 금융의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 장광남 선임연구원>

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24/pr20187-wto-and-imf-joint-statement-on-trade-and-the-covid-19-response>

21) 물품 수출 및 용역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해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금융지원 제도(출처: 시사상식사전)



OECD

■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채무 관리 제안(2020. 4.)²²⁾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① 대출수요의 현저한 증가, ② 변동적인 시장 상황, ③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위협, ④ 재정 현금 흐름의 일시적인 불일치 등의 문제 발생
- 이러한 운용적인 측면이나 유동성 및 자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관리당국(DMO)²³⁾은 다음을 통해 채무 관리 전반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자금조달 운용 및 채무 상환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활성화하여 DMO의 운용 역량을 보장
 -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 DMO는 예산계획* 변경 및 시장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기관, 특히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 긴밀하게 협력
 - * 예: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 채무·차입 한도증액 승인 등
 - (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DMO는 시장 추이 및 시장 참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채권발행 전략 및 절차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투명성과 유연성의 균형 유지)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원칙에 따라 대출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관리
- (시장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발행 프로그램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은 불확실성과 평판효과(reputational effect)를 제한하는 데 중요
- (현금버퍼와 같은 비상자금지원 도구²⁴⁾ 활용) 유동성 버퍼, T-Bill²⁵⁾ 발행, 신용한도(credit line)와 같은 비상자금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단기 유동성 위험을 완화
- (추가적인 유동성 준비) 현금 버퍼 강화, 경제에 대한 유연성 제공, 발행 일정에 대한 연내 조정 허용과 같은 추가적인 유연성 구축은 정부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까지 추가 자금요구 급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공중보건 리뷰 한국 보고서(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²⁶⁾ 발표(2020. 3. 31.)²⁷⁾

- 한국 인구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흡연율, 비만율 등 행동 위험요소의 비율은 낮은 특징이 있어 지금까지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둬
-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 생활방식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요소, 만성질환의 부담 증가는

22)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652-xww0besra3&title=Public_debt_management_responses_to_COVID-19
 23) Debt Management Office
 24) contingency funding tools
 25) Treasury Bill: 만기가 3, 6, 12개월이며 할인 발행되는 할인채인(discount issue),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증권의 의미
 26) COVID-19 확산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임
 27)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oecd-reviews-of-public-health-korea_be2b7063-en



이후 예방의료 및 공중보건의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시사

-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2017년 기준)로 지난 40년 동안 8세 증가하였으나,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질병부담²⁸⁾의 대부분을 차지
 - 사망률은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허혈성 심장 질환, 폐암, 간암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자살률은 최근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상치(outlier)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상황
- 2017년 의사 상담 평균 횟수는 16.6으로 OECD 평균인 6.8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한국은 의료소비에 있어서도 이상치에 해당
 - 그러나 공중보건 개입은 외래환자 또는 병원 방문 시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소비 패턴에는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예방접종과 같은 1차 예방 서비스 제공은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고, 건강에 유해한 행동은 국가적 캠페인과 수직적 예방 프로그램에 의존
 -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실내흡연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담배세를 소매가격의 70% 인상하였으며, 담배제품에 대한 경고 이미지도 도입함
 -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되지만 국가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센터’²⁹⁾를 통한 노력은 중앙에서 관리되고 있음
 - 한국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질병예방 및 조

기발견, 만성질환 관리 등 1차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남성의 음주량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유해 알코올 소비는 한국 공중보건의 주요 문제에 해당
 - 1인당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컵에서 2016년 6.0컵으로 약 3배 증가, 알코올 소비 관련 건강관리 지출은 2002년 1,200억원에서 2013년 3,750억원으로 증가
 - 이미 국가 인식 캠페인 등 유해한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 강화 및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 도입이 필요
- 게놈(genom) 연구, 대규모 게놈 유전자 검사, 게놈 선별 및 진단 검사 등은 모두 정책 관심의 중요한 영역
 - 그러나 민감한 유전자 정보의 효과적인 규제, 최첨단 요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등 유전체 분야와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
 - 따라서 공중보건 유전체학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공중보건 위협과 위협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위협시스템은 적어도 최근에는 주요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중대한 결점을 보였고, 한국 사회 내 심각한 인적 손실과 혼

28) disease burden: 해당 질병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연수(years)로 표현한 것
29) Quit Smoking Centers

란을 야기

- 이러한 사건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는 정책 우선순위가 되었고 정부는 주요 개혁*을 단행

* 법률 및 제도적 틀 개정,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사태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투자, 시의적절한 탐지 및 당국과 시민 간 정보공유, 의사결정 촉진을 위해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접근방식 활용 등

● 한국의 정책 개혁과 공중보건 비상상황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존재

- 행정안전부가 현재 모든 비상사태 대비·대응 역량을 중앙 집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방정부의 구별된 책임 또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간단한 연습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만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은 범정부적 시나리오 기반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를 수행하기 위해 위협과 비상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기반을 활용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FY2021 대통령 예산안 분석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1 Budget) 보고서³⁰⁾ 발표(2020. 3. 30.)³¹⁾

● CBO의 최근 재정기준선 전망³²⁾과 비교해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1~2030년간 누적 적자는 2조 1천억달러 감소하고 2030년 연방정부 채무는 6%p 하락

- 재정기준선 전망 대비 대통령 예산안 분석의 수입은 세금감면법의 일부 조항 연장 등에 따라 9천억달러 감소

- 재정기준선 전망 대비 대통령 예산안 분석의 지출은 비국방 재량지출 1조 7천억달러 감소를 포함해 3조달러 감소

●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1~2030년 누적 재정 적자는 11조달러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5조 6천억달러보다 5조 4천억달러 높을 것으로 추계

-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수입은 정부가 발표한 수입보다 4조 1천억달러 낮음

-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지출은 정부 발표보다 1조 3천억달러 높음

30)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밝힌 정책들에 대해 CBO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31)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1 Budget, 2020. 3. 30.

<https://www.cbo.gov/publication/56278>

32) 3월 19일 발표된 기준선 전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을 참고 바람



<표 4> 미국 예산안 전망 비교(정부 VS CBO)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정부	3,464	3,706	3,863	4,086	4,359	4,657	4,924	5,182	5,455	5,762	6,059	6,378
	CBO	3,463	3,632	3,819	4,008	4,217	4,398	4,579	4,777	4,940	5,114	5,310	5,501
지출	정부	4,448	4,790	4,829	5,005	5,105	5,208	5,451	5,663	5,891	6,236	6,309	6,639
	CBO	4,447	4,706	4,796	5,002	5,130	5,296	5,595	5,843	6,098	6,457	6,540	6,923
재정 적자	정부	984	1,083	966	920	746	552	527	481	435	475	250	261
	CBO		1,074	977	994	913	898	1,016	1,066	1,158	1,343	1,231	1,422
국가 채무 ¹⁾	정부	16,801	17,881	18,912	19,891	20,688	21,284	21,848	22,362	22,826	23,327	23,604	23,892
	CBO		17,836	18,793	19,854	20,808	21,768	22,844	23,958	25,166	26,557	27,844	29,341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정부	16.3	16.7	16.5	16.6	16.9	17.2	17.3	17.3	17.4	17.5	17.6	17.6
	CBO		16.4	16.6	16.8	17.0	17.1	17.2	17.3	17.2	17.2	17.2	17.2
지출	정부	21.0	21.6	20.7	20.4	19.8	19.2	19.1	19.0	18.8	19.0	18.3	18.4
	CBO		21.3	20.8	20.9	20.7	20.6	21.0	21.2	21.3	21.7	21.2	21.6
재정 적자	정부	4.6	4.9	4.1	3.7	2.9	2.0	1.8	1.6	1.4	1.4	0.7	0.7
	CBO		4.9	4.2	4.2	3.7	3.5	3.8	3.9	4.0	4.5	4.0	4.4
국가 채무 ¹⁾	정부	79.2	80.5	81.0	81.0	80.2	78.5	76.7	74.8	74.8	72.8	68.5	66.1
	CBO		80.7	81.6	83.0	83.9	84.6	85.7	86.8	87.8	89.3	90.3	91.7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1 Budget, 2020. 3. 30., Table 2.
OMB,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 2. 11., Table S-1.

[기타]

- 미 노동부, 2020년 3월 4주차, 4월 1주차 실업급여 청구 통계 발표(2020. 4. 2.; 4. 9.)³³⁾
 - 3월 4주차(22~28일)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계절 조정)는 전주³⁴⁾ 대비 334만 1천명 증가한

- 664만 8천명으로 집계되어 당초 최고치인 전주 수치를 재경신
- 4월 1주차(3월 29일~4월 4일)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계절 조정)는 전주(개정) 대비 26만 1천명 감소한 660만 6천명으로 집계됨

33)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0. 4. 2.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00551.pdf>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0. 4. 9.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00592.pdf>
34) 3월 3주차 실업급여 청구 통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을 참고 바람

■ 의회예산처(CBO),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³⁵⁾
(H.R. 6201) 추계 발표(2020. 4. 2.)³⁶⁾

- 동 법은 3월 18일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2차 지원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당초 1천억달러 규모로 알려져 왔음³⁷⁾
- 의회예산처는 동 법이 연방 적자를 2020~2030년 간 1,92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비적으로 추정
- 본 추정효과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의존하여 매우 불확실하며, 공중보건비상사태 및 국가비상사태³⁸⁾ 지속 기간에 따라 비용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3월 고용 통계 발표(2020. 4. 3.)³⁹⁾

- (가계 조사) 2020년 3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 대비 0.7%p 하락한 62.7%, 실업률은 전월 대비 0.9%p 상승한 4.4%로 집계됨
- 고용률은 작년 9월부터 61% 이상을 이어 왔으나 전월 61.1%에서 60.0%로 하락
- 실업률의 전월 대비 0.9%p 상승은 1975년

(0.9%p)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임
- 실업자 수는 714만명으로 전월 대비 135만 3천 명이 증가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5,179만명으로 전월 대비 70만 1천명 감소
- 노동통계국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정밀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으나 가계 조사와 사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고용자 수 및 고용시간 감소, 실업자 수 증가는 코로나19와 이에 대응하는 노력의 영향임이 명확하다고 설명

■ 연방준비제도(Fed), 2조 3천억달러 대출 공급 발표(2020. 4. 9.)⁴⁰⁾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중 모든 규모의 가계와 고용자를 지원하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ending Facility를 통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⁴¹⁾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3,490억달러 규모⁴²⁾의 유동성을 공급

35)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36) CBO, H.R. 6201,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Cost Estimate, 2020. 4. 2.
<https://www.cbo.gov/publication/56316>

37) 동 법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을 참고 바람

38)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1호, 2020을 참고 바람

39)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0. 4. 3.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tat.nr0.htm>

40) Fed, Federal Reserve takes additional actions to provide up to \$2.3 trillion in loans to support the economy, 2020. 4. 9.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409a.htm>

41) 소기업이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대출 제도

42)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assistance-for-small-businesses>



-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통해 중소기업에 6천억달러 대출을 제공
- 기존 PMCCF와 SMCCF, TALF⁴³⁾의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 및 기업에 8,500억 달러 신용 흐름을 제공
- Municipal Liquidity Facility를 설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현금 흐름 압박을 받고 있는 주·지방정부에 5천억달러를 지원

■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코로나19 대응법에 따른 재정 전망 발표(2020. 4. 14.)⁴⁴⁾

- 초당파 싱크탱크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전 발표된 의회에산치 전망을 기준으로 코로나19와 코로나 대응법에 따른 적자와 채무 변화를 새로 전망
- 코로나19와 코로나 대응법들의 영향으로 2020년 재정적자는 3조 8천억달러(GDP 대비 18.7%)로 증가하고 2021년에는 2조 1천억달러(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GDP 대비 연방정부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당초 CBO가 전망한 81%에서 100%로 상승할 전망이며 2023년에는 종전 최고치(제2차 세계대전 직후, 106%)를 경신할 전망⁴⁵⁾

■ 국세청(IRS), CARES 법에 따른 코로나 지원금 지급(2020. 4. 15.)⁴⁶⁾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3차 지원책⁴⁷⁾에 따라 2019년(미신고자는 2018년) 세금신고서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기준 대상자, 사회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약 1,200달러의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을 지급

■ 미 의회, 제4회 코로나 대응 지원법안(Coronavirus Aid Package 3.5)인 ‘급여보호 및 보건증대법안’⁴⁸⁾(H.R. 266; P.L. 116-139) 통과 의결(2020. 4. 23.)⁴⁹⁾

- * (법안 진행 경로) 상원 통과(4. 21.) → 하원 통과(4. 23.) → 대통령 법안 서명(4. 24.)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총 4,830억달러 규모이며, 중소기업 지원 및 병원 등 의료시설 지원, 코

43) 3월 23일 연방준비제도는 동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을 참고 바람

44) CRFB, New Projections: Debt Will Exceed the Size of the Economy This Year, 2020. 4. 13.

<http://www.crfb.org/blogs/new-projections-debt-will-exceed-size-economy-year>

45) CBO의 채무 전망이 담긴 연방 채무 입문 보고서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1호, 2020을 참고 바람

46) IRS, Treasury, IRS unveil online application to help with Economic Impact Payments; Get My Payment allows people to provide direct deposit information and gives payment date, 2020. 4. 15.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unveil-online-application-to-help-with-economic-impact-payments>

IRS, Economic Impact Payment Information Center, 2020. 4. 15.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47) CARES 법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을 참고 바람

48)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49)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interim-coronavirus-relief-bill>

미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inority/comment-of-senate-appropriations-committee-vice-chairman-patrick-leahy-d-vt-on-senate-passage-of-the-coronavirus-aid-package-35>

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주요 지원 사항은 총예산의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으로서, 중소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여지출 지원을 포함

회복해 경제성장률은 2020년 -5.6%, 2021년 2.8%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코로나19 유행과 코로나19 대응법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FY2021 3조 7천억달러, FY2021 2조 1천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3월 CBO 기준선 전망 대비 각각 2조 6천억달러, 1조 1천억달러 상향 조정

<표 5> 코로나 대응 급여보호 및 보건 증대법 내역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3,210
COVID-19 예방지출 등을 위한 의료인 긴급 보조금 확대 ¹⁾	750
진단/검사 비용 지원 등	250
중소기업 긴급 대출 프로그램 ²⁾ (EIDL ³⁾)	500
EIDL 관련 긴급 보조금	100
중소기업청(SBA) 행정 비용 지원 확대	20
합계	4,830 ⁵⁰⁾

주: 1)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한 수익 상실 배상 등의 지원 포함
 2) 정부의 500억달러 지원을 토대로 최대 3천억달러 규모 대출 계획
 3)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출처: CRFB, Lawmakers release emergency funding request on Coronavirus, 2020. 3. 4.
<http://www.crfb.org/blogs/whats-fourth-coronavirus-package>

■ 의회예산처(CBO), 경제전망 및 예비 재정전망 발표(2020. 4. 24.)⁵¹⁾

- (경제전망) 실질 GDP는 2020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1.8%(연율 40%) 하락한 뒤 하반기에

■ 의회예산처(CBO), 코로나에 대응한 제3차(Phase 3) 지원법인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⁵²⁾; H.R. 748; P.L. 116-136) 비용 추계 발표(2020. 4. 16.)⁵³⁾

- (개요) CARES법⁵⁴⁾은 3월 27일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대응 3차(phase 3) 지원책으로 개인 리베이트 지급, 실업수당 확대, 소기업·대기업 대출 및 대출보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규모) 의회예산처와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⁵⁵⁾는 동 법이 2020~2030년간 연방 적자를 1조 8천억달러(총재정지원 규모는 2조 2천억~2조 3천억달러 추정) 증가시킬 것으로 예비적 추정
- (추계 한계) CARES법의 재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확실함
 - 연방준비제도의 매입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여 연방 기관의 지원책 이행방법이 아직까지

50) 미 의회예산처(CBO)의 비용추계 규모와 동일(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338>)

51) CBO, CBO's Current Projections of Output, Employment, and Interest Rates and a Preliminary Look at Federal Deficits for 2020 and 2021, 2020. 4. 24. <https://www.cbo.gov/publication/56335>

52)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53)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6334>

54) CARES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 참조

55)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는 불분명한 상태

-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경제 규모 및 노동시장의 효과 전망에 대한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⁵⁶⁾ 지속 기간 및 병원 입원 환자의 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메디케어 영향 포함)
- 코로나19의 백신 비용 등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알 수 있는 지원 규정 등

을 담보로 급여보호프로그램유동성기구(PPPLF)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음⁵⁹⁾

- 4월 17일, 은행의 특정 이해 관계자(이사(directors),⁶⁰⁾ 주주 등)가 소유한 기업도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장준희 선임연구원>

■ 미 노동부, 2020년 4월 2주차, 3주차 실업급여 청구 통계 발표(2020. 4. 16.; 4. 23.)⁵⁷⁾

- 4월 2주차(4월 5일~4월 11일)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계절 조정)는 전주(개정) 대비 137만명 감소한 524만 5천명으로 집계됨
- 4월 3주차(4월 12일~4월 18일)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계절 조정)는 전주(개정) 대비 81만명 감소한 442만 7천명으로 집계됨

■ 연방준비제도(Fed), 급여보호프로그램유동성기구(PPPLF) 지원 확대 발표(2020. 4. 17.; 4. 23.)⁵⁸⁾

※ 연준은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0 추경예산(제1호)안 발표(2020. 4. 7.)⁶¹⁾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일본의 사회·경제에 미치고 있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2020년 4월 7일 각의 결정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긴급 경제대책(안)에 의해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

- (세입) 세입 추가 재원은 건설공채 2조 3,290억 엔 및 특례공채 14조 4,767억엔의 추가 발행으로 대응할 예정

56)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1호, 2020 참고

57)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0. 4. 16.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00632.pdf>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0. 4. 23.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00691.pdf>

58) Fed, Federal Reserve Board announces rule change to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2020. 4. 17.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00417a.htm>
Fed, Federal Reserve announces it is working to expand access to it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 (PPPLF) for additional SBA-qualified lenders as soon as possible, 2020. 4. 2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423b.htm>

59)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4월 1호, 2020을 참고 바람

60) 임원(executive officers) 금지 규정은 유지

61)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 2020. 4. 7.

<표 6> FY2020 추경예산(제1호) 규모(일반회계)

구분	내용
1. 신형코로나 감염증긴급경제 대책 경비 (167,058억엔)	<p>(1)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약 개발: 18,097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가칭) 1,490억엔 (PCR 검사기기 정비, 병상·경증자 등 수용시설 확보,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시설 정비, 지원의사 파견지원 등) •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등 우선 배포(953억엔), 인공호흡기·마스크 등 생산 지원(117억엔) •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시설 마스크 배포 등 감염확대 방지책(792 억엔), 전 세대 천마스크 배포(233억엔) • 아비간⁶²⁾ 확보(139억엔), 산학관 제휴에 의한 치료약 등 연구개발(200억엔), 국내 백신개발지원(100억엔), 국제적 백신 연구개발 등(216억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 창설 임시 교부금(가칭) (10,000억엔)
	<p>(2) 고용 유지와 사업 계속: 106,308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확대(690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는 일반회계에서 조치한 주 노동시간 20시간 미만의 고용자에 대한 것으로, 20시간 이상 고용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형특별회계로 7640억엔 조치 중 •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 자금융통 대책(38,316억엔) •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신형 급부금(23,176억엔) •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대한 신형 급부금(40,206억엔) • 육아세대에 임시특별급부금(1,654억엔)
	<p>(3) 다음 단계로서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활동 회복: 18,482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 To” 캠페인 사업(가칭)(16,794억엔) • 「신형 코로나 리바이벌 성장기반 강화 펀드(가칭)」 창설(1,000억엔)
	<p>(4)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9,172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2,200억엔) • 해외 서플라이체인 다원화 등 지원사업(235억엔)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력·국내공급력 강화(1,984억엔) • GIGA스쿨 플랜닝 가속화에 의한 배움 보장(2,292억엔) • 공공투자 조기집행 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추진(178억엔) • 중소기업 디지털화 대응단 사업(100억엔)
	<p>(5) 향후 대비: 15,000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15,000억엔)

2.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로 전입 999억엔

추경예산 추가 세출 계: 168,057억엔

- 주: 1. 본 추경에 의해 FY2020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1,194,637억엔이 됨
 2.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총추경액은 일반회계 16조 8천억엔이며, 2조 3천억엔을 건설공채, 14조 4천억엔을 특별공채로 조달 예정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第1号)の概要」

62)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 총칭명 아비간. 항 인플루엔자바이러스제로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 제조



- (세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의한 긴급 경제 대책 경비 및 국채정리 기금특별회계로 진출되는 금액을 포함해 일반회계 총액 16조 8,057억엔의 추가 세출을 계상
- (재정 투융자 계획)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을 근거로 사업 계속 지원을 위해, 중소·소규모 사업자 및 중견기업·대기업 자금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10조 1,877억엔의 계획을 추가(재정투자 9조 9,877억엔, 산업투자 1천억엔, 재정보증 1천억엔)

25조 6,914억엔의 추가 세출을 계상

[기타]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고, 경제 재생을 목표로> 경제대책 발표(2020. 4. 7.)^{64), 65), 66)}

■ 재무성, FY2020 추경예산(제1호)안 수정(2020. 4. 20.)⁶³⁾

- 2020년 4월 7일 각의 결정된 추경 예산을 변경 편성
 - (사유) 4월 20일 전 국민 일률 「특별 정액 급부금(가칭)」 지원을 밝힘에 따라 고용 유지와 사업 계속 항목의 세출을 추가 편성(10만 6,308억엔→19만 4,905억엔)
 - (세입) 세입 추가 재원은 건설공채 2조 3,290억엔 및 특례공채 23조 3,624억엔의 추가 발행으로 대응할 예정
 - (세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긴급 경제 대책 경비 및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로 진출되는 금액을 포함해 일반회계 총액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확대에 의해 국내외 경제 침체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감염증 확대가 안정될 때까지의 ‘긴급지원’ 및 이후 경기반등을 위한 수요 환기와 사회 변혁을 추진하는 ‘V자 회복’을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
- (규모) 총재정지출 39조 5천억엔, 총사업 규모 108조 2천억엔
- (감염 확대 방지)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약 개발
 - 마스크 및 소독약 확보
 - 검사체제 강화와 감염 조기 발견
 - 의료제공체제 강화
- (고용 유지와 사업 계속)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경제활동 축소로 인한 고용 유지 및 사업자 지원
 - 고용 유지
 - 긴급 대응 기간 동안(2020년 4월 1일~6월 30일)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적용 확대(중소기업 휴업수당의 2/3→4/5, 대기업은

63) 재무성, 令和2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等の変更について,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0/sy020407/hosei020420a.pdf

64) 내각부, <https://www5.cao.go.jp/keizai/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65)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07corona.html

66)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07keizaishimon.html

1/2→2/3, 나아가 해고 등을 실시하지 않을 시, 중소기업은 9/10, 대기업은 3/4) 고용 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상으로 함

- 기업자금조달

-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 의한 특별대출 및 위기대응 업무에 의한 자금융통 지원(중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실질 무이자화 포함)
- 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 자금(마루케이 용자)의 실질 무이자화

- 중소·소규모 사업자 지원

- 중견·중소·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에 대해 새로운 급부금(「지속화 급부금(가칭)」)을 창설, 사업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 중견·중소기업은 상한 200만 엔, 개인 사업주는 상한 100만엔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사업 수입에서 감소액을 급부
- 수입이 감소한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수입 감소 세대 및 개인에 대한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급부금(「생활지원 임시 급부금(가칭)」) 지원
- 육아세대에 관해서는 아동수당 수급세대에 대해 대상 아동 1인당 1만엔을 추가하는 임시특별지급금을 지급
-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정 정도 수입 감소한

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면제

- 개인용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대출

- 세계조치

- 납세 유예제도의 특례: 사업자의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에 대해 무담보 및 연체료 없이 1년간 납부 유예

-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활동 회복) 이번 사태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은 분야에 중점적 단기 집중의 과감한 지원책

- 관광·운수업, 음식점, 이벤트·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지역 경제의 활성화

-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생산거점의 국내 회귀 및 다원화, 외수(外需) 도입을 위한 해외 전개 기업 사업 보조 및 수출력 유지·강화를 위한 지원

- (향후 대비)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이나 경제 동향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규모를 웃도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가칭)」 신설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고, 경제 재생을 목표로」 경제대책 수정(2020. 4. 20.)⁶⁷⁾

- (사유)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주민세 면세점으로 떨어

67) 내각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の変更について,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0/20200420_taisaku.pdf



**<표 7>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대책
「국민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고 경제 재생으로」 사업규모 및 재정지출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	국·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I.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약 개발	2.5	2.5	-	2.5
II. 고용 유지와 사업 계속	22.0	12.2	9.7	80.0
III. 다음 단계로서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활동 회복	3.3	2.8	0.5	8.5
IV.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10.2	8.0	2.3	15.7
V. 향후 대비	1.5	1.5	-	1.5
합계	39.5	27.0 ¹⁾	12.5 ²⁾	108.2

주: 1. 국비는 25.0조엔이며 그중 FY2020 추경예산은 18.6조엔(일반회계 16.7조엔, 특별회계 1.9조엔)

2. FY2020 추경예산에서의 추가액은 10.1조엔

출처: 내각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国民の命と生活を守り抜き、経済再生へ～(令和2年4月7日)」(令和2年4月7日) pp. 40~41 재구성

<표 8> 긴급경제대책 규모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I. 종합경제대책	9.8	19.8
II. 긴급대응책 제1탄·2탄	0.5	2.1
III. 신규 추가분	29.2	86.4
합계	39.5	108.2

주: 1. I 은 「안심과 성장의 미래를 개척하는 종합경제대책(2019. 12. 5)」중 향후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출

2. II 는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 대응책」의 제1탄(2020. 2. 1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결정) 및 제2탄(2020. 3. 10.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결정)과 관련된 지출

출처: 내각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国民の命と生活を守り抜き、経済再生へ～(令和2年4月7日)」(令和2年4月7日) p. 39

진 세대에 대해 30만엔의 신형 급부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간소하고 신속한 가계 지원을 위해 전 국민 10만엔 지원으로 변경

- (특별 정액 급부금) 간소한 구조로 신속하고 정확한 가계 지원을 위해 「특별 정액 급부금(가

칭)」 사업을 실시하며, 총무성에 그 실시 본부를 설치함⁶⁸⁾

- 사업비(FY2020 추경예산 제1호 계상액)

- 총 12조 8,802억엔(급여 사업비: 12조 7,344억엔, 사무비 1,458억엔)

68) 총무성, 特別定額給付金(仮称)の概要,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gyoumukanri_sonota/covid-19/kyufukin.html

- 사업 실시 주체 및 비용부담
 - 실시 주체: 시군구(市区町村)
 - 실시에 필요한 경비(급여 사업비 및 사무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보조율 10/10)
- 급여 대상자 및 수급권자
 - 지급 대상자는 기준일(2020년 4월 27일)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수급권자는 그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지급액
 - 급부 대상자 1인당 10만엔

- 동일), ② 비노동자 분은 0.3 정도(과거 정액 급부금에 의한 소비 환기효과와 동일)로 상정함
- (2) 「지속화 급부금(가칭)」의 지출 성향은 1.0으로 상정함
- 두 효과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의 경제효과 수정 발표(2020. 4. 24.)⁶⁹⁾

- 본 경제대책의 경제효과에는 고용 유지 및 사업의 계속, 그 후의 강력한 회복 실현을 위한 정책효과가 포함되지만, 그중 지출이 직접적으로 GDP에 미치는 효과는 실질 GDP 기준 4.4% 정도로 추정됨
- 「종합경제대책」 중 향후 효과: 1.1% 정도(총재정치출 13조 2천억엔, 사업 규모 26조엔)
- 「긴급대응책」 제1탄 및 제2탄, 신규 추가 대책: 3.3% 정도(재정치출 48조 4천억엔, 사업 규모 117조 1천억엔)
- 2개의 새로운 정책 급부금의 효과:
 - (1) 「특별 정책급 부금(가칭)」의 소비 성향은,
 - ① 노동자 및 15세 미만은 0.67 정도로 상정(통상 수입에 기초한 평균 소비 성향과



[기타]

■ 연방내각,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0」(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채택(2020. 4. 22.)⁷⁰⁾

-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
- (재정전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채무가 발생하여 금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3.33%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외적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제한법상 명시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상한인 GDP 대비 0.35%를 크게 상회함
- (경제전망) 2019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이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5.4%p 하락한

69) 내각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の経済効果試算(改定版)」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0/20200424_taisaku_kouka.pdf
 70) 연방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2020. 4.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020-04-17-stabilitaetsprogramm-2020.pdf?__blob=publicationFile&v=10



<표 9> 독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재량조치

(단위: 억유로, GDP 대비 %)

구분	총액	재정수지 ¹⁾ (Finanzierungssaldo)	채무 ¹⁾ (Schuldenstand)
- 연방정부	1,558	-4.6	4.7
추가경정예산	1,223	-3.6	3.7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코로나 긴급지원	500	-1.5	1.5
기타 지원	550	-1.7	1.7
실업급여 및 주거 지원	75	-0.2	0.2
국내보증보상	16	-0.0	0.0
해외보증보상	43	-	0.1
기타	39	-1.0	1.0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²⁾	335	-1.0	1.0
- 경제재건펀드	2,000	-	6.0
자본수단의 취득 및 참여	1,000	-	3.0
해외 보증을 통한 독일재건은행 운송사업 보상 재용자	1,000	-	3.0
- 주정부	652	-1.6	2.0
예산조치, 긴급지원, 유동성지원, 주식, 대출	311	-0.6	0.9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341	-1.0	1.0
- 지방자치단체	170	-0.5	0.5
주거지원	21	-0.1	0.1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149	-0.5	0.5
- 사회보험³⁾	153	-0.5	-
단기근로자보조금	41	-0.1	-
사회보장기여금 반환	60	-0.2	-
법정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추가 부담금	52	-0.2	-
합계	4,533	-7.2	13.2

주: 1) 명목GDP로 산정된 2020년 추경예산 기준

2) 양(+)/의 값은 줄어든 수입과 조세지원대책을 의미함

3) 사회보험 지출은 적립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채무에는 영향이 없음

출처: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 4. 22.

-6.0%로 전망

- (재정정책) 연방정부는 국민건강, 일자리와 기업지원,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착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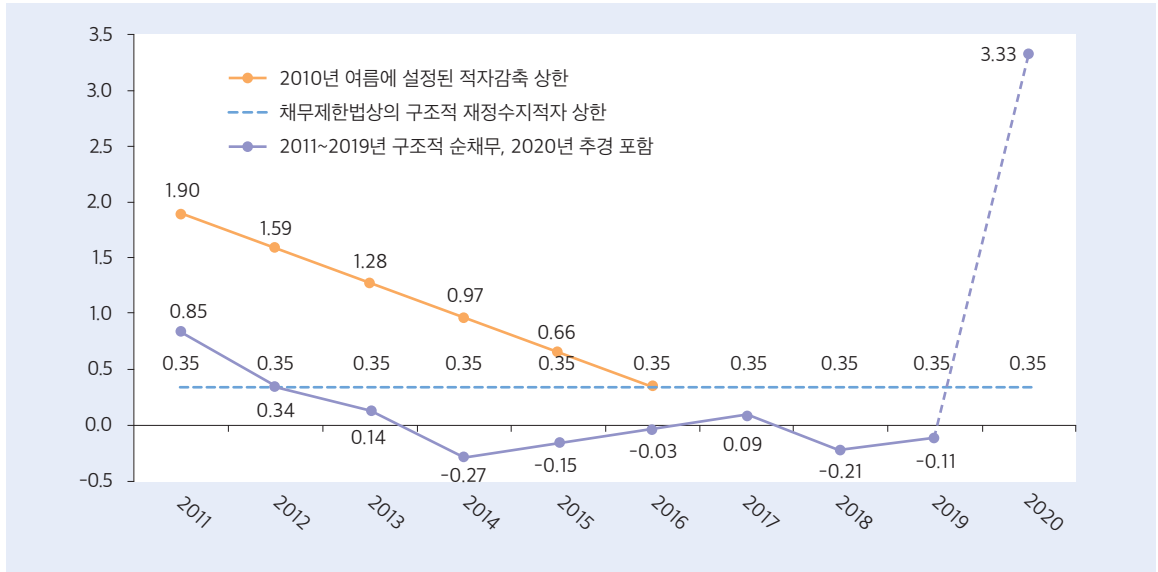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예산자원 및 보건, 국민

보호 기금 조성

- 피해가 심한 업종과 지방 중소기업 대상의 유동성 공급, 조세조치, 기업차입을 단순화하기 위한 정부보증, 수출보증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연체료 면제 포함

[그림 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음(-)은 재정수지 흑자를 의미함

출처: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 4. 22.

- 일자리 및 소득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조업단축지원금, 질병 및 실업수당 연장과 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선임연구원>

FY2020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2) 발표(2020. 4. 15.)⁷¹⁾

-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 위기가 지속되고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1차 수정예산법안의 조치를 확대 및 보완하기 위해 2차 수정예산법안을 발표함

- 일자리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지원에 1차 수정예산법의 450억유로 지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1,115억유로를 배정하고, 국영투자은행(Bpifrance)의 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에 총 3,150억유로 배정

프랑스

[예산·결산 등]

- 보건 위기 지속과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71)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en conseil des ministres d'un second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20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20/presentation-en-conseil-ministres-d-second-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20#XpeiK8gzaUk>



● 코로나 관련 재정 대응 조치는 총 4,265억유로로 GDP 대비 18.9%에 이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⁷²⁾

-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420억유로 (GDP 대비 1.9%)

- 최저임금의 4.5배 이내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보상(240억유로)
- 급격한 매출 하락(50% 이상의 손실)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과 행정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겪은 기업 지원(70억유로)
- 간호 인력을 위한 수당 지원 및 의료 장비 구매(80억유로)
- 실업자의 실업수당 수급 기간 연장(5억유로)
- 추가 비상 자금(25억유로)

-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 695억유로(GDP 대비 3.1%)

-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연기(255억유로)
- 소득 공제액 조기 지급(230억유로)
- 중소기업 지원 펀드(Fond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 FDES) 조성(10억유로)
-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계정(Participations financières de l'État)

에서 200억유로 할당

- 금융지원(보증) 대책: 3,150억유로(GDP 대비 13.9%)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단기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억유로의 은행대출을 보증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재보험에 100억유로
- 단기 수출 신용 보증을 위해 공공신용보험 제도인 Cap Franceexport의 확대 적용에 50억유로

● (경제전망)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은 예산법에서 전망한 1.3%보다 크게 하락한 -8%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예산법에서 전망한 2.2%에 비해 크게 악화된 9.0%로 전망

- 2020년 2차 수정예산법안의 총재정수지는 2020년 1,835억유로로, 2020년 예산법과 비교해 903억유로, 1차 수정예산법과 비교해 744억유로 악화됨

● (국가채무) GDP의 감소와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로 인해 국가채무가 악화돼,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예산법안 전망 대비 16.3%p 증가한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72) 이하 지원 내용 및 수치는 안정화 프로그램 2020(Programme de stabilité 2020)의 표 1(TABLEAU 1 : MESURES FACE A LA CRISES SANITAIRE)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함

<표 10> FY2020 2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 결산	2020 예산법 (A)	2020 수정 예산법 (B)	2020 2차 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	392.2	400.4	406.7	445.1	44.7	38.4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0.3	337.7	344.0	380.5	42.8	36.5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246.0	253.2	253.2	255.7	2.5	2.5
미래를 위한 투자 미션(Mission "Investissements d'avenir")	1.0	2.1	2.1	2.1	0.0	0.0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Mission "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0.0	6.3	42.3	42.3	36.0
부채비용(Charge de la dette (yc SNCF))	40.3	38.6	38.6	36.6	-2.0	-2.0
연금기여금액(Contributions au CAS "Pensions")	42.9	43.8	43.8	43.8	0.0	0.0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95.3	307.4	300.2	266.0	-41.4	-34.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1.3	293.0	282.3	250.3	-42.7	-32.0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0	14.4	17.9	15.7	1.4	-2.2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4.1	-0.1	-2.1	-4.2	-4.1	-1.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2	0.0	0.0	-0.2	-0.2	-0.2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92.7	-93.1	-109.0	-183.5	-90.3	-74.4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0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0)

[기타]

■ 2020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2020. 4. 15.)⁷³⁾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 최소 향후 3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담은 안정화 프로그램을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함

*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EU집행위의 지침에 따라 현재 위기와 2020년에만 중점을 두었음

- (2020년 경제전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경제전망) 2021년 프랑스 GDP는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9.0%를 기록할 전망

73)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0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20/presentation-programme-stabilite-2020#XpeiK8gzaUk>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발표(2020. 4. 16.)⁷⁴⁾

- 프랑스의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 결정
 - 활동연대수당(RSA),⁷⁵⁾ 특별연대수당(ASS),⁷⁶⁾ 또는 개인주거수당(APL)⁷⁷⁾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활동연대수당 및 특별연대수당 수급가구는 가구당 150유로, 부양 자녀당 추가 100유로를, 개인주거수당(APL) 혜택을 받는 가구는 부양 자녀당 100유로를 지급받게 될 예정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영국

[기타]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추가 대책 발표(2020. 4. 3.)⁷⁸⁾

- 기업 지원 경과(4월 3일 기준)

* 영국 정부는 3월 17일에 사업중단대출 한도 확대, 대기업의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개시 일주일 만에 약 1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9천만파운드의 사업중단대출(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이 승인됨
- 영국중앙은행의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정부가 보증)도 기업에 약 19억파운드를 지원함

● 주요 추가 조치 내용

- (중소기업 사업중단대출 강화) 상업 금융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모든 소기업에 지원 자격 확대
 - 또한 대출 기관이 25만파운드 미만의 대출에 대해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추진
- [대기업 사업중단대출(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신규 도입] 연매출 4,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대출을 보증(80%)함
 - 매출 4,500만~2억 5천만파운드인 기업은 최대 2,500만파운드, 매출 2억 5천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은 최대 5천만파운드의 대출 신청 가능

* 당초 발표된 계획(4월 3일)에서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4,500만~5억파운드의 기업으로 설정하였으나 세부 계획(4월 16일)에서 지원 대상과 최대 대출 금액을 확대함

74) 프랑스 국토연대와 지자체 관계부(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UNE AIDE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2020. 4. 16.)

<https://www.cohesion-territoires.gouv.fr/une-aide-exceptionnelle-de-solidarite>

75)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 근로 소득과 함께 수급할 수 있는 수단

76) 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실업부조의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에게 지급함

77)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국기와 협약을 맺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78) HM Treasury, Chancellor strengthens support on offer for business as first government-backed loans reach firms in need, 2020. 4.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strengthens-support-on-offer-for-business-as-first-government-backed-loans-reach-firms-in-need>

HM Treasury, Chancellor expands loan scheme for large businesses, 2020. 4. 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xpands-loan-scheme-for-large-businesses>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선 단체에 대한 7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 발표(2020. 4. 8.)⁷⁹⁾

-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영국 전역의 자선 단체들이 주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7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함
- 주요 지원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주요 서비스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제공하는 자선 단체에 정부 부처 직접 지원금 할당(3억 6천만 파운드)
 - 호스피스 활동 지원에 2억 파운드 이상 지원
 - 나머지 재원은 구급차 및 응급 처치 제공 단체, 장애인·가정 폭력 피해자·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단체 등에 배분

- 복권 기금 보조금 등을 활용해 식료품, 필수 의약품 배달 및 재정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소 자선단체 지원(3억 7천만 파운드)
- BBC의 Big Night In의 기금 모금 일환으로 National Emergencies Trust에 매칭 기부(최소 2천만 파운드)

■ NHS 및 필수 공공 서비스에 145억 파운드 지원 (2020. 4. 13.)⁸⁰⁾

-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자금을 통해 NHS, 지역 당국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당초 2020 예산안에서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자금 규모는 50억 파운드였으나

<표 11> 공공서비스 지원 내역

(단위: 억파운드)

구분	지원 금액	비고
의료 서비스 지원	66	건강 서비스 지원, 병상 확보, 인공호흡기, 진단 검사, 의료진 보호 장비 등 긴급 우선순위 이행
지방 당국 지원	16	취약계층 간병 강화 포함
자가 격리 중인 방역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	9	식료품 패키지 지원 포함
필수 철도 서비스 보장	35	
스코틀랜드 정부 지원	10	
웨일즈 정부 지원	6	
북아일랜드 정부 지원	3	
합계	145	

출처: 재무부 보도자료(2020. 4. 13.)를 바탕으로 표를 구성함

79) HM Treasury, Chancellor sets out extra £750 million coronavirus funding for frontline charities, 2020. 4. 8.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sets-out-extra-750-million-coronavirus-funding-for-frontline-charities>
 80) HM Treasury, Chancellor provides over £14 billion for our NHS and vital public services, 2020. 4.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provides-over-14-billion-for-our-nhs-and-vital-public-services>



이후 NHS, 지역 당국을 위한 추가 지출들이 계획되어 이는 145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 의료 서비스 지원, 지역 당국 지원뿐만 아니라 방역 취약계층 지원,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정부 지원 등도 포함

■ 예산책임청, 코로나19의 경제·재정 시나리오 (Coronavirus reference scenario) 발표(2020. 4. 14.)⁸¹⁾

※ 예산책임청은 해당 분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전망 (central forecast)이 아닌 특정 가정에 기반한 예시적인 시나리오임을 강조함

- (주요 가정)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3개월 봉쇄로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고, 이후 3개월간 이동·활동 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
- 경제에 대한 영향
 - (경제성장률) 2020년 2분기 실질 GDP가 35% 하락한 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추정

- (실업률) 2020년 2분기 실업자 수는 약 210만 명 증가, 실업률은 10%로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GDP가 회복됨에 따라 점차 하락할 것임
- (물가) 환율, 유가 등을 고려 시 CPI 인플레이션은 2020년 2분기에 일시적으로 0.7%로 하락, 1년 후 2.7%로 상승하고 시나리오 기간 동안 서서히 2%에 가까워질 것임

● 재정에 대한 영향

- (수입) FY2020-21 재정수입은 예산안 전망 (2020년 3월) 대비 약 1,300억파운드(15%) 감소(FY2019-20 대비 12%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FY2007-08과 FY2009-10 사이에 재정수입이 3.4% 하락한 바 있음

- 예산안 전망 대비 수입 하락 폭은 사업용 재산세 유예와 같은 조세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140억파운드)가 소득세·국가보험기여금 감소(570억파운드), VAT 감소(300억파운드)보다 더 작게 나타남

<표 12> 시나리오의 주요 경제 변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1.4	-12.8	17.9	1.5	1.3	1.4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13.8	16.1	0.0	0.0	0.0
CPI 인플레이션	1.8	1.2	2.3	2.4	2.3	2.2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0.2	0.5	0.4	0.2	0.1
실업률	3.8	7.3	6.0	4.5	4.0	4.1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3.5	2.2	0.6	0.0	0.0

출처: OBR, Coronavirus reference scenario, 2020. 4. 14. Table 1.3에서 일부 발췌

81) OBR, Coronavirus reference scenario, 2020. 4. 14.

<https://obr.uk/coronavirus-reference-scenario/>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daily Coronavirus update (14 April 2020), 2020. 4. 14.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chancellor-delivers-daily-coronavirus-update-14-april-2020>

- (지출) FY2020-21 재정지출은 예산안 전망 대비 약 880억파운드(9%) 증가(FY2019-20 대비 15% 증가)
 - 지출 급증과 GDP 급감으로 FY2020-21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높은 약 52%로 증가
 - 예산안 전망 대비 지출 증가액은 지출 조치로 인한 증가(860억파운드), 복지 지출 증가(150억파운드,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반영), 채무 이자 감소(100억파운드, 기준금리 인하/추가 양적완화 등 반영) 등을 포함
- (재정수지) FY2020-21의 공공부문 순차입

은 예산안 전망 대비 2,180억파운드 증가한 2,730억파운드(GDP의 14%)로 예상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재정적자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세수 변화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조치가 반영된 것임
- (국가채무)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해 연중 100%를 상회하였다가 경제 회복에 따라 연도 말에 약 95%를 기록할 전망

* 2020 예산안의 FY2020-21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은 약 77%였음
 • 이는 GDP 하락, 차입 증가, 영국 중앙은행

<표 13> 시나리오의 주요 재정 변수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8-19 (실적)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공공부문경상수입 (GDP 대비 %)	813 (37.5)	839 (37.8)	743 (37.8)	902 (37.7)	946 (38.2)	981 (38.3)	1,019 (38.4)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GDP 대비 %p 변화)		0 (0.1)	-130 (-0.1)	-8 (-0.4)	-4 (-0.1)	-4 (-0.2)	-4 (-0.1)
총관리지출 (GDP 대비 %)	851 (39.3)	887 (39.9)	1,016 (51.7)	978 (40.9)	1,008 (40.7)	1,041 (40.7)	1,077 (40.6)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GDP 대비 %p 변화)		0 (0.1)	88 (11.4)	1 (0.0)	-2 (-0.1)	-3 (-0.1)	-3 (-0.1)
공공부문순차입 (GDP 대비 %)	38 (1.8)	47 (2.1)	273 (13.9)	76 (3.2)	63 (2.5)	61 (2.4)	59 (2.2)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GDP 대비 %p 변화)		0 (0.0)	218 (11.5)	9 (0.4)	1 (0.1)	0 (0.0)	1 (0.0)
공공부문순채무 (GDP 대비 %)	1,774 (80.6)	1,799 (92.8)	2,203 (94.6)	2,285 (93.8)	2,359 (93.6)	2,428 (93.2)	2,291 (84.9)
예산안 전망 대비 변화 (GDP 대비 %p 변화)		0 (13.3)	384 (17.2)	457 (18.8)	459 (18.2)	459 (17.6)	260 (9.6)

출처: OBR, Coronavirus reference scenario, 2020. 4. 14. Table 1.5에서 발췌



의 정책 조치로 인한 회계적 영향을 반영

- FY2024-25에는 예산안 전망 대비 약 10%p 높게 유지될 전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혁신 기업 지원 패키지 발표(2020. 4. 20.)⁸²⁾

- (목적)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기술, 라이프 사이언스 등 영국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의 기업을 보호하여 혁신적인 신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혁신 기업을 위해 총 12억 5천만파운드 규모의 지원 패키지 제공
 - (고성장 기업 지원) 영국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고성장 기업에게 5월부터 총 5억파운드의 전환 대출 지원
 - (지원 자격) 지난 5년간 외부 투자자로부터 25만파운드 이상 자본 투자를 받은 비상장 영국 회사
 - (지원 금액) 12만 5천~500만파운드 자금을 지원
 - *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출은 자동으로 자본(equity)으로 전환됨
 - (재원 조달) 민간 투자자와 정부가 각각 2억 5천만파운드씩 매칭 지원하는 5억파운드 규모의 신규 'Future Fund' 운영
- (R&D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Innovate

UK(혁신 지원 기관)의 보조금 및 대출 제도를 통해 연구 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에게 7억 5천만파운드 지원

- Innovate UK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해 보조금과 대출 지급 촉진·확대
- Innovate UK의 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

*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 재무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정부 보증 대출(Bounce Back Loans scheme) 제공 예정(2020. 4. 27.)⁸³⁾

- (배경) 지난 3월, 3,300억파운드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중단대출 제도를 발표하였으나 복잡한 신청 절차, 지급 지연, 소규모 대출에 대한 은행의 개인 보증 요구 등의 문제가 지적됨⁸⁴⁾
 - 재무부 장관은 소규모 대출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기존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주요 내용) 정부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하고 첫 12개월간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 * 상세 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 (대출 금액) 기업은 2천파운드에서 최대 5만

82) HM Treasury, Billion pound support package for innovative firms hit by coronavirus, 2020. 4. 20.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llion-pound-support-package-for-innovative-firms-hit-by-coronavirus>
 HM Treasury, Future Fund, 2020. 4. 20.
<https://www.gov.uk/guidance/future-fund>

83) HM Treasury, Small businesses boosted by bounce back loans, 2020. 4. 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small-businesses-boosted-by-bounce-back-loans>

84) 영국 의회, Chancellor announces new 'bounce back' loans for small businesses, 2020. 4. 27.

파운드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첫 12개월 동안은 원금 상환 요건 없음
- (신청방법) 기업은 간단한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수일 내에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수입⁸⁶⁾은 4조 5,98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12.3% 감소한 2조 1,157억위안, 2조 4,827억위안으로 집계

- 조세수입⁸⁷⁾은 3억 9,029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이고 비(非)조세수입⁸⁸⁾은 6,955억위안(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 2020년 1분기 일반공공예산 지출⁸⁹⁾은 5조 5,28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출(中央一般公共預算本級支出)⁹⁰⁾은 7,17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지방정부 지출⁹¹⁾ 4조 8,11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

• 코로나19는 2020년 1분기 재정수입 및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⁹²⁾

-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업구제금융, 생산회복



중국

[예산·결산 등]

■ 재정부, 2020년 1분기 재정수입 및 지출(2020. 4. 20.)⁸⁵⁾

- 2020년 1분기 일반공공예산(全國一般公共預算)

<표 14> 2020년 1분기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 및 지출

구분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全國一般公共預算收入)	45,984	-14.3
중앙정부 재정수입(中央一般公共預算收入)	21,157	-16.5
지방정부 재정수입(地方一般公共預算本級收入)	24,827	-12.3
일반공공예산 재정지출(一般公共預算支出)	55,284	-5.7
중앙정부 재정지출(中央一般公共預算本級支出)	7,173	3.7
지방정부 재정지출(地方一般公共預算支出)	48,111	-7.0

출처: 중국 재무부, 2020년 1분기 재정수입 및 지출 상황

85)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004/t20200420_3501077.htm

86) 일반정부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조세수입(18개 세목)과 비조세수입(8개 세목)으로 구분

87) 조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취득세 등이 해당

88) 비조세수입에는 행정사업성수입, 정부성기금, 복권공익금, 정부재정자금 이자수입 등이 해당

89) 재정지출은 분세제도 재정관리체제하에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로 구분,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일반공공서비스, 외교, 국방,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및 미디어, 사회보장 및 취업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

90)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기관과 관련된 경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지출 및 중앙정부 소관 사업 지출 등이 해당

91) 지방정부 기구의 경상적 지출, 지역경제 및 사회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지출 등이 해당

92)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b/202004/t20200423_3502761.htm



및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면제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일반재정수입 증가율은 약 5%p 감소된 것으로 보임

- 숙박업, 교통운수, 문화·체육·엔터테인먼트 산업의 1분기 세입은 각각 33.2%, 27%, 1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적게 감소한 이유는 일부 지방의 세외수입의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남

[기타]

■ 인민은행, 중소기업의 지급준비율 1%p 인하 결정 (2020. 4. 7.)^{93), 94)}

- 인민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1%p 낮추고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를 발표
-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 성급 행정구역 내 도시 상업은행 등의 기준율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5%p씩 인하하여 장기자금 약 4천억위안을 투입한다고 밝힘

■ 항저우(杭州)의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23억 9,600만위안 수준으로 나타남

(2020. 4. 8.)⁹⁵⁾

- 항저우 상무국(杭州商务局)의 통계에 따르면 1차 발행된 소비쿠폰(총 5억위안)은 약 9억 4,900만 위안에 달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⁹⁶⁾

- 항저우가 1차 발행한 전자소비쿠폰은 4억 8,500만위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困难群众)을 위한 소비보조금 1,500만위안이었음
- 그 밖에도 상점(商家匹配)의 할인 및 수수료 지원금(优惠额度)으로 약 11억 8천만위안을 할당

- 항저우는 2차 소비쿠폰(1억 5천만위안) 150만장을 추가 발행함

- 항저우 시민들은 2020년 4월 3일 알리페이(支付宝, Alipay)를 통해 소비쿠폰을 다운받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쿠폰은 총 150만장 추가 발행됨

■ 중국 지방정부 2020년 1분기 재정수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됨(2020. 4. 11.)⁹⁷⁾

-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이하 재정수입으로 표기)⁹⁸⁾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징(北京)의 경우 2020년 1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430억 5천만

93) 新浪经济, <https://finance.sina.com.cn/china/gncj/2020-04-05/doc-iimxxsth3726047.shtml>, 검색일자: 2020. 4. 9.

94)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는 올해 3번째임. 1월 6일 전면적 지급준비율 인하 0.5%p, 3월 16일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0.5~1%p를 단행한 바 있음

95) 新京报网, <http://www.bjnews.com.cn/feature/2020/04/08/714535.html>, 검색일자: 2020. 4. 21.

96) THE PAPER CHINA,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6821154, 검색일자: 2020. 4. 10.

97) 第一财经, <https://www.yicai.com/news/100588800.html>, 검색일자: 2020. 4. 13.

98)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의 세수로 인한 재정수입을 의미

위안으로 나타남

- 구이저우(貴州)의 경우 2020년 1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349억 8,800만 위안으로 집계됨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 등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재정수입은 주로 기업 관련 세수에서 비롯되며, 전염병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기업의 조업 재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는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또한 세금 및 수수료 감면정책은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임

■ 국가통계국, 2020년 1분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 (2020. 4. 17.)⁹⁹⁾

- 2020년 1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량은 20조 6,50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 2020년 1분기 고정자산 투자(농민가구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한 8조 4,145억위안, 수출입 총액은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한 6조 5,742억위안으로 나타남
- 2020년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이며 도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6%, 농촌지역의 경우 5.9% 증가
- 2020년 1분기 등록기준 도시 실업률은 5.9%이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

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01% 감소

- 2020년 1분기 24개 성 지역내총생산량(GRDP) 통계를 보면 각 지역의 GDP 성장률은 -0.2~39.2% 구간에 있음¹⁰⁰⁾

- 전염병의 영향이 가장 큰 후베이성은 -39.2%, 전염병의 영향을 적게 받은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0.2%를 기록함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일련의 거시정책과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¹⁰¹⁾

-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 세계적 위기로 각국 경제 및 사회 운영에 영향을 초래하였으며, 중국 역시 2020년 1분기 GDP 포함 거시경제지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적자율 상향 조정, 방역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규모 확대, 각종 프로젝트 자금지원 강화 등

- 기준율 및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유동성 유지, 대출시장 금리인하 유도 등

- 자동차, 가전 등 소비 진작, 공공소비 확대, 친환경 소비, 디지털 소비, 스마트 소비 등 새로운 소비 동력 육성 등

- 감세 및 비용 경감, 기업 용자 원가 및 임대료 부담 경감, 중소 및 영세기업 대출을 제고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외국인 투자 확대, 외자 프로젝트 이행 등

99)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4/t20200417_1739327.html

100)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cn-ko/brd/m_1257/view.do?seq=13473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0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https://www.ndrc.gov.cn/xwdt/xwfb/202004/t20200420_1226031.html



<표 15>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국내총생산량	206,504	-6.8
제1차 산업	10,186	-3.2
제2차 산업	73,638	-9.6
제3차 산업	122,680	-5.2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10,708	-2.8
산업	64,642	-8.5
제조업	53,852	-10.2
건설	9,378	-17.5
도매 및 소매업	18,750	-17.8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서비스 (交通运输, 仓储和邮政业)	7,865	-14.0
숙박 및 요식업	2,821	-35.3
금융	21,347	6.0
부동산	15,268	-6.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서비스 (信息传输,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8,928	13.2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租赁和商务服务业)	7,138	-9.4
기타 서비스	39,660	-1.8

주: 1. 금액은 현재가격으로 계산, 성장률은 고정가격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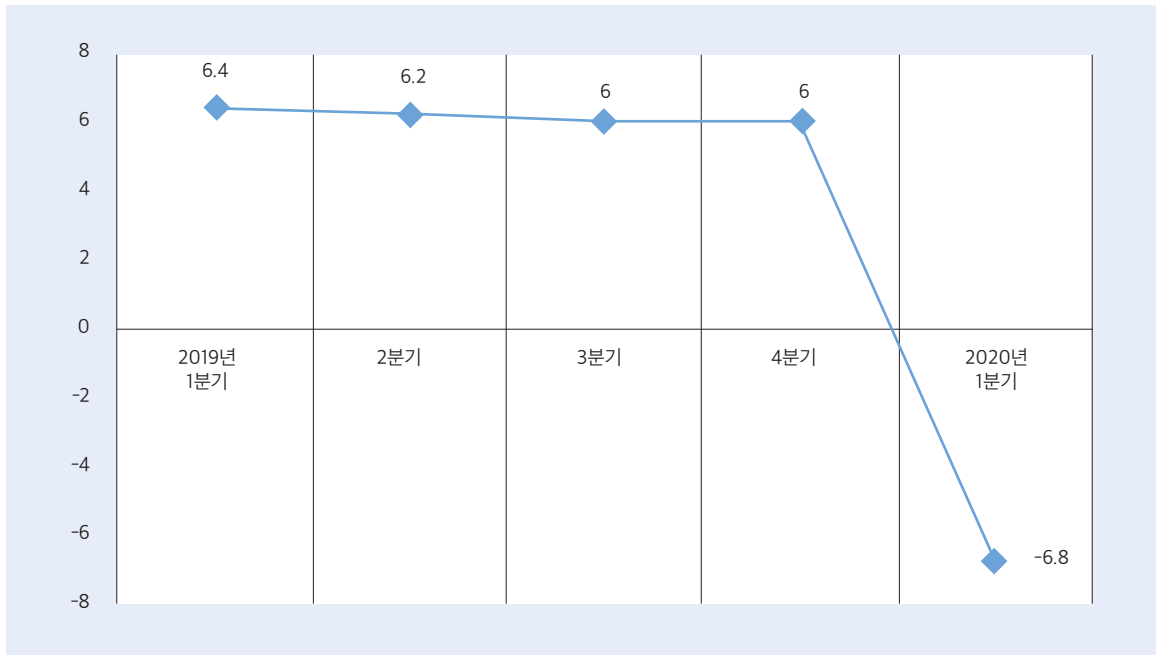
2. 산업분류는 국가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 - 2017))에 따름

3. GDP 총량은 산업의 합계와 같지 않으며, 산술(반올림 등)오류로 기계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20年一季国内生产总值(GDP)初步核算结果」, 표 1, 2020. 4. 17.

[그림 3]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1차核算结果」 재구성

■ 재무부,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정책 관련
공고 발표(2020. 4. 22.)¹⁰²⁾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10%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조정 및 개선에 관한 통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보조금 정책 실시기간을 기존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103), 104)}

- 연간 신에너지 차량 판매 및 등록데이터에 따라 연간 보조금 지원기준 차량은 약 200만대로 결정
-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수준, 산업개발 등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받기 전 차량 가격이 30만위안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102)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004/t20200417_3500222.htm

103)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jjrb/202004/t20200426_3504271.htm

104) http://jjs.mof.gov.cn/zhengcefagui/202004/t20200423_3502975.htm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통권 제287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5월 15일 발행 / 제24권 제5호(통권 제28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